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연구

황윤재·김경필·최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황윤재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김경필 | 선임연구위원 | 제2~3장, 제6장 집필
최재현 | 연구원 | 제2~3장, 제6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P00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1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SBN | 979-11-6149-000-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과제인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황운재(연구위원)
연구원: 김경필(선임연구위원)
 최재현(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머 리 말

농식품을 둘러싼 환경·여건이 변화하면서 먹거리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은 물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먹거리의 중요성과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먹거리 관련 이슈 및 정책 영역이 농식품 생산과 안전성은 물론 건강·영양, 복지, 환경 등으로 확장되고, 영역별 상호 연관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공급적 관점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문제 해결방식과 정책적 접근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먹거리 이슈에 대한 관련기관별·단계별·영역별 분절적인 정책 접근에서 탈피하여 정책 연계 또는 통합적 관점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새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통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국내외 먹거리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연구 배경

-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비전하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 먹거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이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됨.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여 핵심아젠다(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임.
- 이 연구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외 먹거리 정책 등을 검토하여, 먹거리에 관한 국가 종합 비전을 담아내고 효과적으로 종합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과제·수단, 성과목표·지표 등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구성과 방법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섯 부문으로 구성됨. 먹거리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흐름을 검토하고,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 및 추진 실태와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전략(국가 푸드플랜) 수립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일반국민들의 국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략 수립 방향과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하는 체계로 구성함.

- 국내외 관련 현황과 실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문헌 및 자료 수집·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이밖에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조사결과를 기존 연구에서의 농업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기존의 국가 먹거리 정책을 평가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과 세부전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주요 연구 결과

- 인구 구조 급변, 소득 불평등 심화, 지역 간 불균형 확대, 농식품 수입 확대 및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 저성장 시대 직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경제사회, 인구,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였음.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함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미흡, 영양 불균형 심화,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미흡, 환경·폐기 문제 심화,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 발생, 농업·농촌 및 먹거리 관련 인식 정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미흡, 지역 사회·공동체 붕괴 위기 등의 문제가 주요한 먹거리 관련한 이슈로 등장함.
-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의 생산·산업적 관점의 분절적 먹거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자각과 함께 정부 정책 간 연계·통합을 통해 먹거리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복지·분배·고용 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푸드시스템 또는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도입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정부 먹거리 정책은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제기되는 식품수급(식량안보), 안전·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음. 이들 먹거리 정책은 취급단계 및 영역별로 구분하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별로 수립·추진함. 또한 국가 먹거리 정책의 수립·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기존의 주요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법정계획들이 추진 목적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취급단계별로 농식품 수급, 안전, 건강·영양 등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종합적인 성격의 먹거리 관련 법정계획이지만,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독립적인 소관 기관으로 하여 수립·추진됨.
- 해외 주요국은 국가별 먹거리 관련 여건·환경을 반영하면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 영역(이슈)을 다루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먹거리 전략은 대체로 먹거리 관련 전반적인 정책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반면, 세부적으로는 국가별 여건·현황에 따라 포함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내용, 대상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비전으로 하며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등 4개 아젠다로 구성됨.
- ‘건강한 먹거리’는 안전하며 양질의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영양 수준을 제고하며,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여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추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들은 ①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② 국민 건강·영양 지원 ③ 바른 식생활실천 제고 등으로 분류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 건강·영양, 식생활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포함함.
-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를 통해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 과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이를 위해 주요 정책과제들은 ①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②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③ 먹거리 공공성 강화 등 3개 부문으로 분류되며, 국민들의 안정적 먹거리 소비를 가능케 하는 생산·수급, 식품지원, 공공급식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포함함.

- ‘생태친화적 먹거리’를 통해서는 생산부터 소비·폐기 단계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③ 먹거리자원 순환기반 조성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환경·폐기 또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포함함.

- ‘더불어 사는 먹거리’는 지역·공동체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성장의 한 축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① 먹거리 경제 순환체계 확립 ② 먹거리산업 성장동력 구축 ③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등으로 구분하여, 먹거리 분야 관련한 지역 경제·산업, 식문화 등 먹거리 관련한 인식·가치의 제고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포함함.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주요 연구 내용 13
4. 연구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먹거리 관련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1. 대내외 여건 변화 20
2. 주요 이슈 35
3.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48

제3장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실태

1. 추진 실태 50
2. 주요 먹거리 계획 부문별 추진 내용 59

제4장 국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먹거리 정책과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 109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인식 133
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정책 평가 122
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역량 평가 133

제5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현황

1. 프랑스 140
2. 호주 152
3. 영국 161
4. 국가별 먹거리 전략 비교 174

제6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과 전략

1. 수립 방향	177
2. 세부 추진전략	180
참고문헌	214

표 차례

제1장

<표 1-1> 연구 범위 국내 먹거리 관련 정부 법정계획	15
<표 1-2> 소비자 조사 응답자 특성	17
<표 1-3> 생산자 조사 응답자 특성	18
<표 1-4>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18

제2장

<표 2-1> 인구성장률 국제비교	22
<표 2-2>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 변화	24
<표 2-3> 소득분배 지표 변화(시장소득 기준)	25
<표 2-4> 취약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39
<표 2-5> 취약계층 식생활 불안정 단계별 비중	40
<표 2-6> 취약계층 건강 관련 인식 수준(%)	40
<표 2-7> 국가별 1인당 푸드 마일리지	43

제3장

<표 3-1> 정부 부처별 농식품정책 주요 추진 분야	52
<표 3-2> 소속별 주요 정부 위원회	54
<표 3-3> 농식품 관련 법률 현황	55
<표 3-4>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취급단계별>	57
<표 3-5>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정책영역별	58
<표 3-6> 검토대상 먹거리 관련 주요 정부 법정계획	59
<표 3-7> 주요 정부 법정계획 비전 및 추진 목표	60
<표 3-8> 식량안보 관련 주요 정책·사업	62

<표 3-9> 식량안보 관련 주요 지표	64
<표 3-10> 농식품안전·품질 관련 주요 정책·사업	67
<표 3-11> 식품안전·품질 관련 주요 지표	72
<표 3-12> 건강·영양 관련 주요 정책·사업	75
<표 3-13>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19개 성과지표	80
<표 3-14> 건강·영양 관련 주요 지표	81
<표 3-15> 환경·폐기 관련 주요 정책·사업	83
<표 3-16> 환경·폐기 관련 주요 지표	85
<표 3-17> 식품산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	87
<표 3-18> 식품산업 관련 주요 지표	89
<표 3-19>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지역·공동체 관련 사항	90
<표 3-20> 지역·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사업	91
<표 3-21> 지역·공동체 관련 주요 지표	93
<표 3-22>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19개 성과지표	94

제4장

<표 4-1> 먹거리 관련 정책의 충분성과 중요성	96
<표 4-2> 다부처 체계 먹거리 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인식	96
<표 4-3>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의 필요성	97
<표 4-4>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시 고려 관점	97
<표 4-5> 국가 푸드플랜 세부 정책 이슈	97

제5장

<표 5-1> 프랑스 농업현대화법 주요 내용: 공공식품정책 및 국가식품프로그램 관련	102
<표 5-2>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미래법 주요 내용: 국가식품프로그램 및 국가식품위원회	103

<표 5-3>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1축 사회정의	105
<표 5-4>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106
<표 5-5>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3축 식품 낭비 대응	106
<표 5-6>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4축 지역 먹거리 정책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	107
<표 5-7>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1축	108
<표 5-8>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2축	109
<표 5-9>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3축	110
<표 5-10>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4축	111
<표 5-11>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수출 성장	114
<표 5-12>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산업번영	115
<표 5-13>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국민	118
<표 5-14>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농식품	119
<표 5-15>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122
<표 5-16>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회복력있고, 수익성·경쟁력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124
<표 5-17>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124
<표 5-18>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126
<표 5-19>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127
<표 5-20>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등	128
<표 5-21>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129
<표 5-22>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회복력·수익성·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130
<표 5-23>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131
<표 5-24>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131

<표 5-25>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132

<표 5-26>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 133

<표 5-27>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주요 범위 133

<표 5-28>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영역별 세부 과제 134

제6장

<표 6-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138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19
--------------------------	----

제2장

<그림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변화	22
<그림 2-2>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와 전망	23
<그림 2-3>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변화 추이와 전망	23
<그림 2-4> 1인당 GDP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2006-2015년)	26
<그림 2-5> 농가 호수 및 농가 인구 추이(2010-2017년)	27
<그림 2-6> 농가소득과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변화 추이	29
<그림 2-7>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현황	30
<그림 2-8> 국제 곡물가격 변동 추이	31
<그림 2-9>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32
<그림 2-10> 국내 총투자율 변화 추이	32
<그림 2-11> 국내 실업률 변화 추이	33
<그림 2-12> 국민 삶의 질 지수영역별 기준년도(2006년) 대비 2015년 증감률	34
<그림 2-13> 취약계층 가구주 연령별 구성 추이	38
<그림 2-14> 국내 농약 및 화학비료	41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먹거리와 관련된 경제, 사회, 과학, 기술 측면에서의 제반 여건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먹거리가 생산된 이후 유통, 소비를 거쳐서 폐기에 이르는 과정과 이에 따른 일련의 활동들이 복잡화·대규모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제기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은 물론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미치는 중요성과 파급력도 증가하고, 국민의 먹거리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과거에는 먹거리 관련한 이슈가 주로 생산·공급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이슈의 영향력·범위도 크지 않았음. 그러나 먹거리가 생산된 이후 소비·폐기에 이르는 과정·경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주체·영역들이 결부되며, 먹거리가 단순히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중요성을 가지게 됨. 이에 따라 먹거리 관련 이슈의 범위도 식량안보, 식품안전은 물론 건강·영양, 복지, 환경

등으로 확장되고, 이슈 간 상호 연관성 및 파급 영향도 커지고 있음.

- 시장 개방으로 농산물 교역이 빈번해지고 저가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며, 먹거리 공급 체계가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비만·성인병 등 먹거리 관련한 영양·건강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취약계층에서는 기초적인 먹거리의 안정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글로벌 식량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안정적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킴.
 - 안정적 식량 공급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식품 폐기의 문제는 소비단계 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단계 등 식품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임. 이밖에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
- 먹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생산·공급적 관점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먹거리 관련 문제의 해결방식과 정책적 접근은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따라 생산·공급적 관점의 기존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먹거리 이슈에 대한 관련기관별·단계별 또는 영역별 분절적인 정책 접근에서 탈피하여 먹거리 관련 분야 간 정책 연계 또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기존에 정책적 관심이 미흡했던 먹거리 영역에서의 소비, 건강·영양,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필요성 증가
- 기존의 먹거리 정책은 영역 또는 정책 간 상호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기관)별·부서별, 정책분야별로 개별적·독립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비전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일관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종합적인 정책성과를 달성하는데도 한계를 노출하였음. 또한 최근 제

기되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소비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함.

- 정부의 농식품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부처 간 조정·연계 없이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 목표 하에서 분절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함.
 - 이슈별·영역별로 다수의 먹거리 관련 법률이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계획들이 개별 중앙행정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음. 부처 내에서도 기능별·품목별 또는 영역별로 먹거리 관련 정책·계획들이 독립적·분절적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음.
- 그간 종합적으로 먹거리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시도·노력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식품안전, 식생활교육 등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밀라노 국제 엑스포에서 51개국 117개 도시가 ‘밀라노 도시 푸드정책 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을 체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지역들을 중심으로 식생활·영양, 공급·유통, 폐기 등 먹거리 관련 영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추진에 관한 논의·움직임이 본격화됨(지역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단위에서의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가단위에서도 국가 먹거리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먹거리 정책(국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논의·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구체화되고 있음.
- ‘밀라노 도시 푸드정책 협약’은 지역, 국가 및 국제 정책과 프로세스 등 전반에서 일관성을 추구하며, 관련 주체와 부문 간 협력을 장려함. ‘밀라노 푸드정책협약’ 체결에 따라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움직임도 구체화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이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됨.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실무단을 운영하여 핵심아젠다(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임.
 - 2017년 농정공약과 국정운영 계획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이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생산·소비·안전·복지·영양 등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국가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하에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농정공약으로 제기함.
 - 2018년 상반기에 4월에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 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등 4개 먹거리 관련 영역으로 구성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핵심아젠다(안)를 수립함.
-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비전하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먹거리 관련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생산·공급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일관된 비전하에서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 먹거리에 관한 아젠다를 구체화하여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외 먹거리 정책 검토,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및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먹거리에 관한 국가 종합 비전을 담아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부문별 정책과제·수단, 성과목표·지표 등을 발굴하는 것임.

2. 선행연구 검토

2.1. 푸드플랜에 관한 개념적 연구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국가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에는 이정희(2007), 김병률 외(2009), 황영모 외(2015), 김종안 외(2018) 등이 있음. 이들 연구에서는 푸드플랜(또는 푸드시스템, 식품시스템)에 관한 개념과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정희(2007)는 푸드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푸드시스템이 농수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정의함. 이정희(2007)는 산업적 측면에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푸드시스템을 접근하였음.
- 황수철(2000)의 연구에서는 일본 푸드시스템에 대한 고찰 과정에서 식품산업적 관점을 강조하며 푸드시스템을 ‘생산단계로부터 가공단계 및 분배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조직적 틀’이라고 정의함.
- 김병률 외(2009)는 과거 식품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식품을 둘러싼 또는 식품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식품시스템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식품시스템의 개념을 도출함. 이 연

구에서의 식품시스템의 개념은 산업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푸드시스템을 조망하는 이정희(2007)에 비해 확장된 개념임.

- 이 연구에서는 식품시스템이 식품체인 내의 각 담당주체들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지구적 환경요인, 사회경제요인 및 잠재적 위험요인 등 시스템 외부요인과 시스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제안함. 또한 국가식품시스템이 정부와 식품체인 내 경제주체들이 국가 및 국민 개개인의 후생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식품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함.
- 허남혁(2017)은 푸드시스템을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는 전체 경로와 과정이라고 정의함. 이밖에 황영모 외(2015)는 푸드시스템과 푸드플랜의 개념과 함께 푸드플랜의 성격과 요소 및 특징 등을 제시함으로써 푸드시스템과 푸드플랜의 전반적 개념 및 상호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이 연구에서는 푸드시스템은 ‘활동’, 푸드플랜은 ‘공공성’과 ‘계획(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푸드시스템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 폐기물 관리 등을 둘러싼 일련의 활동’, 푸드플랜은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계획적 대응 전략’이라고 정의함.
 - 이 연구는 푸드플랜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의 순환적 모델을 기본구조로 한다고 강조함.
- 김종안(2017)은 황영모 외(2015)와 유사하게 푸드플랜의 개념에서 공공성과 계획을 강조함. 그러나 이 연구는 푸드플랜이 농식품 관련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황영모 외(2015)와 차이가 있음. 이 연구는 푸드플랜을 먹거리 관련 시장실패를 공공성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여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계획이라고 정의함.

-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가 ‘전략’(황영모 외, 2015), ‘계획’(김종안, 2017), ‘프로그램 또는 정책’(김종안 외, 2018) 등 푸드플랜의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비해, Leib et al.(2017)의 경우 ‘통합성’을 강조함. 이 연구는 푸드플랜이 법과 정책에 대한 국가의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제시함.
 - Leib et al.(2017)은 푸드시스템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식품과 관련된 모든 과정, 푸드플랜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공평하며, 복원력이 있는 식품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식품 및 농산물에 관한 법과 정책에 대한 ‘국가의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정의함.
- 이밖에 김종안 외(2018)는 기존에 푸드플랜을 실천계획이라고 정의한 김종안(2017)의 개념 정의에서 보다 확장하여 푸드플랜을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포괄하는 먹거리 관련 최상위 계획이자 정책 추진체계로 바라보고 있음.

2.2.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적 연구

- 국내 푸드플랜(푸드시스템) 관련 정책 연구들은 식품 전반이 아닌 식품안전 등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방안·과제를 제시하며, 농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국가단위 푸드플랜(또는 푸드시스템)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수립·추진 방향(또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는 이정희(2007), 김병률 외(2009), 이서희·김정선(2013), 김종안(2017), 김종안 외(2018), 최지현(2017), 허남혁(2017) 등이 있음.
- 이들 연구 중에서 이정희(2007), 이서희·김정선(2013) 등은 푸드시스템에 대

한 정책적 논의를 식품과 관련된 포괄적 범위가 아닌 산업 또는 환경(식품안전)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다루고 있음.

- 이정희(2007)는 식품산업적 관점에서 국내 푸드시스템 현황과 농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푸드시스템의 발전과제를 제시함.
 - 이정희(2007)는 식품시스템을 고려한 식품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식품산업 정책이 생산, 가공뿐만 아니라 식품 도소매업, 외식서비스, 식품 수출입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식품산업과 농수산업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수산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또한 식품산업 진흥과 위생·안전 정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함.
- 이서희·김정선(2013)은 식품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가 전통적인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노력이 푸드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도출함.
 - 이 연구에서는 푸드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정책방안으로 생산부터 소비 단계를 포괄하는 기후변화 대응 통합 식품안전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함.
- 김병률 외(2009)는 식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국내 식품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식품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국가식품시스템의 비전과 분야별 추진과제를 도출함. 이 연구는 국가식품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략·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푸드플랜 논의와 유사성을 가짐.
 - 이 연구는 정책목표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식품 안전성 확보, 식품영양 및 식생활 개선, 지속가능한 식품체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함.
 -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 ‘국가식품위원회(가칭)’ 구성·운

영, 민관 협력네트워크 시스템 수립 등을 제시함.

- 김중안(2017)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푸드플랜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이 연구는 먹거리 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별 분산 추진과 이에 따른 개별 목적 중심의 정책추진, 정책목표 상충,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범정부 위원회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농식품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함. 이밖에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역 푸드플랜 간의 연계성 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시함.
- 최지현(2017)은 식품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 먹거리 정책 현황과 문제점, 외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가 푸드플랜 수립방안과 분야별 주요 과제를 제시함.
 -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식품 업무의 다부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상호연계가 미흡하고, 정책 간 갈등 및 가치상충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푸드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이 연구에서는 국가 푸드플랜이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스템적 접근,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수립방안으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 푸드플랜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함.
- 허남혁(2017)은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국가 푸드플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이 연구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운영을 위해 ①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며 ② 시민 참여·협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 ④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⑤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통합적 접근 ⑥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Leib et al.(2017)의 경우 미국 식품 관련 정책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국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에 있어서 조화, 참여, 투명성·책임,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함.
 - 조화: 주무기관과 연계, 관계부처 간 실무 기관, 지역과의 연계 등
 - 참여: 전략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자문 기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다층적 접근법, 피드백 과정
 - 투명성·책임: 우선순위, 목표, 기대효과, 이행수단, 이행점검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문서), 연도별 성과 보고서
 - 지속성: 사회, 경제, 과학 및 기술적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정기적인 계획(전략) 수정, 일정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 김종안 외(2018)는 푸드플랜의 개념과 의미, 국내외 푸드플랜 사례, 국내 먹거리 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추진방향과 푸드플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이 연구에서는 국가 푸드플랜의 경우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의 보완적 수립·추진, 민관 거버넌스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푸드플랜 추진 기반 조성, 정책 연계 및 제도 개선, 지역 푸드플랜 수립 제도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2.3. 해외 국가 푸드플랜 사례 고찰 연구

- 해외 푸드플랜 사례를 고찰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개괄적으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사례를 푸드플랜 구성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음.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함.

- 해외 주요국의 국가 단위 푸드플랜의 경우 주로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의 사

례가 검토되고 있음. 대표적 연구에는 김병률 외(2009), Leib et al.(2017), 김종안(2017), 허남혁(2017), 김종안 외(2018) 등이 있음. 이 중 김병률 외(2009)의 경우 국가별 식품시스템 관련 정책 사례로 영국의 국가식품시스템 사례와 일본의 식량안보정책(‘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등을 검토함.

- 김종안(2017), 김종안 외(2018)의 경우 김종안(2017)에서는 미국의 로컬푸드 정책에서의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실태와 농식품·보건·에너지법을 근거로 한 지원프로그램을 조망하고, 프랑스의 국가먹거리프로그램(PNA)을 검토함. 또한 김종안 외(2018)에서는 프랑스(PNA), 호주(‘Our Food Future’)의 국가 푸드플랜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허남혁(2017)의 경우에도 프랑스(PNA), 영국(‘Food 2030’), 호주(‘Our Food Future’) 등의 국가 푸드플랜 현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Leib et al.(2017)은 미국의 식품정책 추진 현황과 함께 호주, 브라질,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즈 등 해외 주요국들의 국가 푸드플랜에 대해서 검토함.

3. 주요 연구 내용

■ 먹거리 관련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대내외 여건 변화
- 주요 이슈
-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실태

- 추진 실태

- 주요 먹거리 계획 부문별 추진 내용

■ 국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먹거리 정책과 이슈에 대한 인식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인식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정책 평가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역량 평가

■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전략 수립 현황

- 프랑스
- 호주
- 영국
- 국가별 먹거리 전략 비교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과 전략

- 수립 방향
- 세부 추진전략

4. 연구 범위 및 방법

4.1. 연구 범위

- 이 연구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먹거리 및 먹거리 전략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전략 수립에 반영 가능한 정책 수단과 지표들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한 범위로 하여 연구를 추진함.

-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실태는 법, 조직 등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 체계 전반과 함께 주요 먹거리 관련 법정계획들을 살펴봄.
 - 검토 대상 정부 법정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먹거리 관련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정계획임.
- 해외 사례는 프랑스, 영국,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함. 프랑스 국가식품프로그램(le 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 PNA), 호주의 'National Food Plan', 영국의 'Food 2030' 등을 검토함.

<표 1-1> 연구 범위 국내 먹거리 관련 정부 법정계획

소관부처	정부 법정계획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기본계획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환경종합계획 ■ 자원순환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관리기본계획

자료: 연구진 작성.

4.2. 연구 방법

4.2.1.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

- 국내 먹거리 관련 여건에 관한 자료 수집과 문헌 검토

- 국내외 국가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 실태 및 사례 검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각종 농식품 관련 법정계획, 정책 자료 및 관련 보고서 분석
 -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 사례 검토·분석
 - 기 발표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핵심아젠다(안) 검토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농식품 관련 법정계획, 정책 자료 등 검토

4.2.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관련 기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학계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분야별·부문별 핵심아젠다 및 정책과제 논의
 - 정책 수단, 성과목표·지표, 기타 종합전략 추진 방향
- 학계, 연구소, 관련기관, 정부 등 관련 전문가 10인 내외로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 연구추진상황 점검, 연구방향·내용 등 검토
 - 분야별·부문별 핵심아젠다 및 정책과제 논의
 - 정책 수단, 성과목표·지표, 기타 종합전략 추진 방향

4.2.3. 일반국민·농업인 및 전문가 인식조사¹⁾

■ 일반국민 및 농업인 설문조사

¹⁾ 농업인 및 전문가 조사 결과는 황윤재 외(2018)의 일환으로 추진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함.

- 조사대상: 일반국민 1,000명과 농업인 150명을 별도로 조사
 - 일반국민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12월에 2주간 조사를 실시함.
 - 농업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생산자 조사 풀(Pool)을 활용하여 8월부터 9월까지 3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
 - 먹거리 이슈 관련 정책적 요구와 종합전략에 대한 인식,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방향 인식, 주요 아젠다 및 추진과제에 대한 인식, 기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대상
 - 8월부터 9월에 걸쳐서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 담당자, 농업, 식생활, 건강·영양, 식품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
 - 먹거리 이슈 관련 정책적 필요성,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필요성 및 수립·추진방향 평가, 주요 아젠다 및 추진과제에 대한 인식, 기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을 위한 사항

<표 1-2>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전체		100.0	전체		100.0
성별	남성	50.8	학력	고졸 이하	17.1
	여성	49.2		대재/대졸 이상	72.3
거주지역	수도권	50.9		대학원 이상	10.6
	충청권	10.1	세부 거주지역	읍/면	30.0
	호남권	10.6		동	70.0
	대경권	9.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6
	동남권	15.6		200만~300만 원 미만	17.5
	강원권	2.9		300만~400만 원 미만	17.6
연령	19~29세	19.5		400만~500만 원 미만	19.0
	30대	19.6		500만~600만 원 미만	12.6
	40대	22.8	600만~800만 원 미만	12.1	
	50대	22.7	800만 원 이상	9.6	
	60대	15.4			

주 1) 대재/대졸 이상은 전문대를 포함함.
 자료: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1-3> 생산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전체		100.0	전체		100.0
영농주 성별	남성	87.3	영농주 연령	60대 미만	32.0
	여성	12.7		60대 이상	68.0
주소득 작목	쌀	31.3	영농경력	20년 미만	20.0
	곡물	4.0		20년 이상	80.0
	과수	24.0	영농주 학력	고졸 이하	72.7
	채소	12.7		대재/대졸 이상	27.3
	약용	1.3	영농규모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31.3
	특작	16.0		3천만~5천만 원 미만	25.3
	축산	9.3		5천만~8천만 원 미만	16.7
	기타	1.3		8천만 원 이상	26.7

주 1) 주소득작목은 중복응답 결과이며, 대재/대졸 이상은 전문대를 포함함.
 2) 생산자 조사 결과는 황윤재 외(2018)에서 실시한 농축산업 생산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함.
 자료: 황윤재 외(2018: 19) 참조.

<표 1-4>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전체		100.0	전체		100.0
경력	10년 미만	29.8	소속기관 유형	정부기관(중앙/지방)	45.3
	10~20년 미만	34.5		공공기관	3.6
	20년 이상	34.5		연구소/대학	39.3
	무응답	1.2		민간기관(단체)	11.9

주 1) 전문가 조사 결과는 황윤재 외(2018)에서 실시한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함.
자료: 황윤재 외(2018: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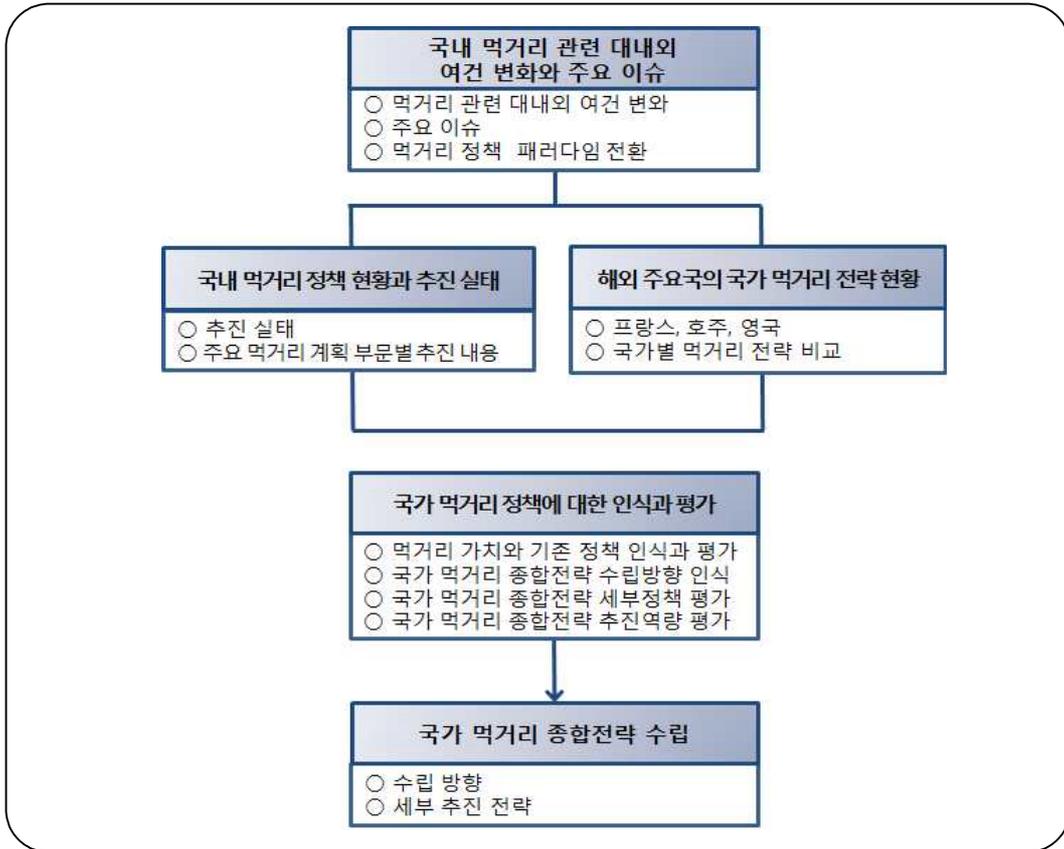
4.2.4. 발주처와 협업 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가 기 수립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핵심아젠다(안)와 기존에 추진 중인 관련 정책 등을 반영하여 전략을 구체화함.

4.3. 연구 추진 체계

- 연구는 먹거리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와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실태와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전략 수립 현황을 살펴 보고, 국가 먹거리 정책을 평가하고 관련 인식을 조사하며,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과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체계로 구성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제 2 장

먹거리 관련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이 장에서는 먹거리 관련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으며, 최근의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에 대해서 검토함.

1. 대내외 여건 변화

1.1. 인구 구조 급변

- 200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01년 이후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비중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는 2017년 말 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함.^{2,3}

²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 초저출산상태로 분류함.

³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 합계출산율은 1997년 1.54명에서 2007년에는 1.26명으로 10년 만에 0.28명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1.05명에 불과함.
 - 2000년도에 7.2%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18년에 14.3%, 2025년에는 2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7년 말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사회 및 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저출산, 고령화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인구 성장률 둔화로 2031년을 정점으로 총 인구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7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국면에 진입하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4,5,6}
- 인구성장률은 2000년에는 0.84%였으나, 2017년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0.39%로 감소함. 2030년 인구성장률은 0.07%, 2032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2010-2015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일본보다는 높은 편이나, 인도, 미국, 영국 등 보다는 낮음.
 -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에 5,156만 명으로 1970년의 3,224만 명에 비해 약 1.6배가 증가함. 그러나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65년에는 4,3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⁴ 1인 가구 확대, 비혼 문화 확산,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인한 경제적 요인 등으로 저출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전쟁 이후 1950-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화지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웹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29#quick_02: 2018. 8. 20).

⁵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9: 2018.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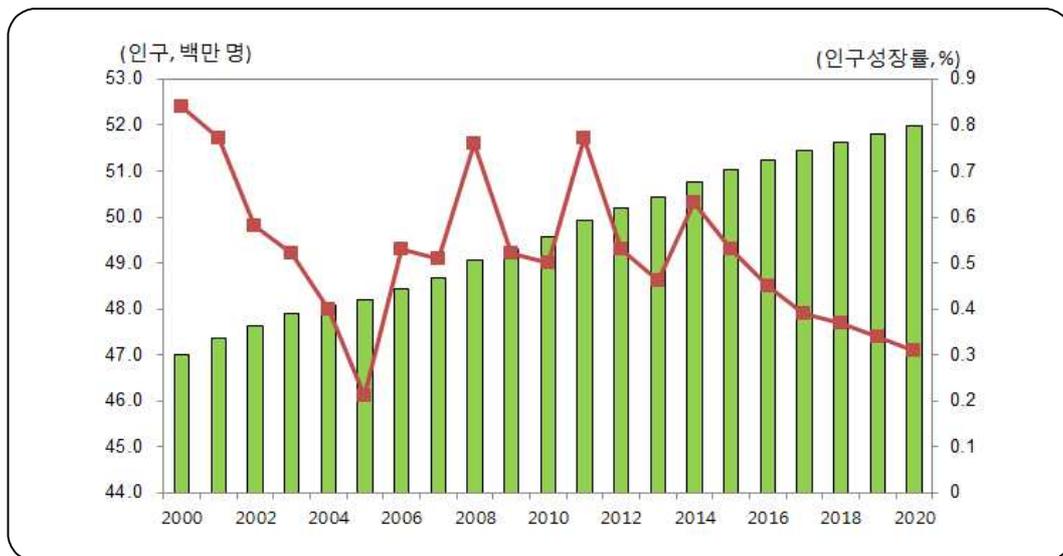
⁶ 인구절벽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함.

<표 2-1> 인구성장률 국제비교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프랑스	미국
1990-1995년	1.01	0.36	1.23	1.97	0.45	1.04
1995-2000년	0.83	0.20	0.68	1.84	0.40	1.21
2000-2005년	0.49	0.20	0.55	1.65	0.62	0.92
2005-2010년	0.56	0.05	0.54	1.46	0.55	0.91
2010-2015년	0.58	-0.12	0.52	1.26	0.45	0.75
2015-2020년	0.37	-0.24	0.39	1.15	0.41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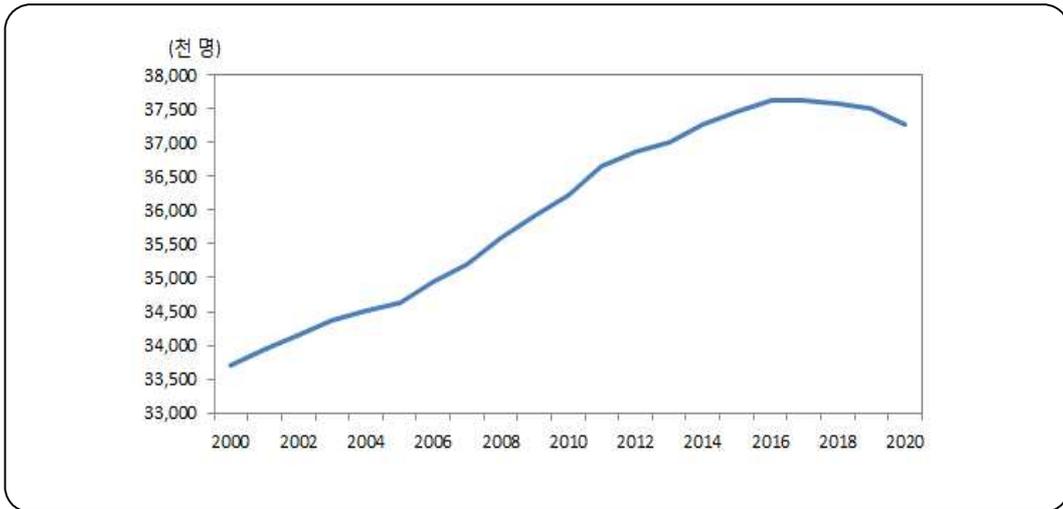
주 1) 비교국가의 2010-2015년과 2015-2020년 인구성장률은 중위출산율(medium fertility) 가정에 의한 추계 결과임.
 자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9; 2018. 8. 20.).

<그림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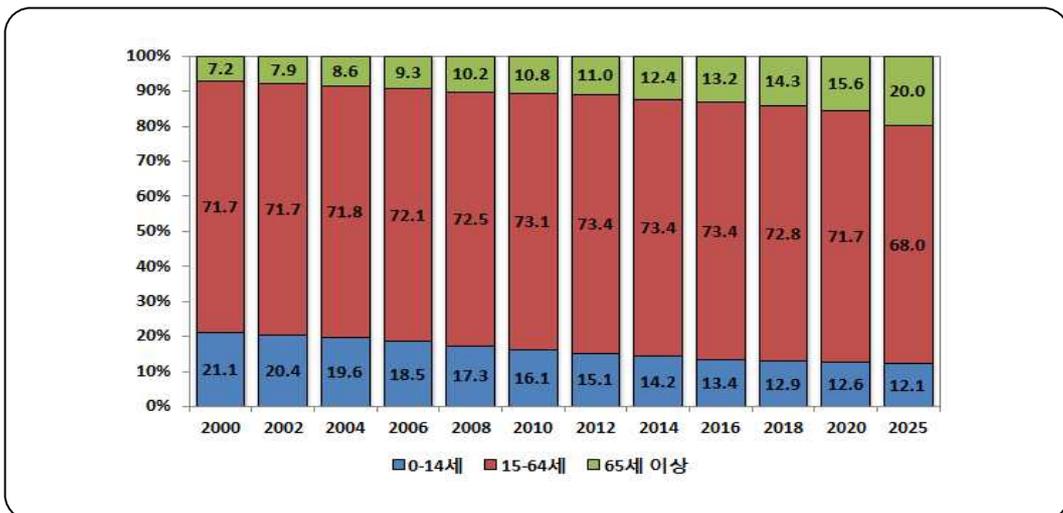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 웹페이지(<http://kosis.kr>; 2018. 9. 17.)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그림 2-2>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와 전망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 웹페이지(<http://kosis.kr>; 2018. 9. 17.) 자료를 참조하여 제작성함.

<그림 2-3>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변화 추이와 전망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 웹페이지(<http://kosis.kr>; 2018. 9. 17.) 자료를 참조하여 제작성함.

-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개인 및 가구는 물론 국가 전반에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지속가능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음.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20-50대의 핵심 생산 및 소비 인구의 감소는 생산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소비 감소를 유발함. 이는 농식품 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성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 소득 불평등 심화

-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은 1990년 1,134만 원에서 2010년에는 2,556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17년에는 3,065만 원에 달함. 그러나 지속적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층(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계임 외(2017)는 고령인구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 증가, 단독가구 증가 등 가구 유형의 변화도 빈곤율 확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제시함.⁷
 - 전체가구 지니계수가 2016년 0.023인데 비해 은퇴연령계층은 0.547에 달함. 또한 전체가구 지니계수가 2006년 0.330에서 2016년 0.353으로 0.023증가한 반면, 은퇴연령계층에서는 2006년 0.458에서 2016년 0.547로 0.089증가함.

<표 2-2>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 변화

단위: 만 원, %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만 원)	467	1,134	1,838	2,556	2,960	3,064	3,065
전년 대비 증가율(%)	-7.2	8.3	5.3	6.4	5.9	3.5	0

자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23>; 2018. 8. 20.).

⁷ 이계임 외(2017) 참조.

<표 2-3> 소득분배 지표 변화(시장소득 기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지니계수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5분위배율	6.65	7.09	7.38	7.70	7.74	7.86	7.51	7.59	8.08	8.24	9.32
	상대적빈곤율	16.6	17.3	17.5	18.1	18.0	18.3	17.6	17.8	17.9	18.6	19.5
은퇴연령 계층 (66세 이상)	지니계수	0.458	0.46	0.476	0.499	0.509	0.519	0.531	0.523	0.521	0.529	0.547
	5분위배율	16.78	17.8	20.54	34.55	34.39	37.23	39.98	41.09	45.36	59.92	68.13
	상대적빈곤율	53.7	54.8	54.9	58.3	60	61.1	61.6	62.8	63.8	64	66.5

주 1)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2)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3)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계층 소득/하위 20% 계층 소득

4)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참조(2017년 5월 25일자 보도자료 '2016년 소득분배지표').

-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함.⁸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이하 종합지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음.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1인당 GDP와 종합지수 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⁹

- 2006년-2015년에 1인당 GDP(실질)는 28.6%가 증가하였으나, 종합지수는 11.8%가 증가하여 GDP 증가율 대비 41.3% 수준임.

⁸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2개 영역의 국민 삶의 질을 반영하는 80개 지표를 이용하여 작성된 종합지수임(김홍상 외, 2017). 12개 영역은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임.

⁹ 김홍상 외(2017) 참조.

<그림 2-4> 1인당 GDP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2006-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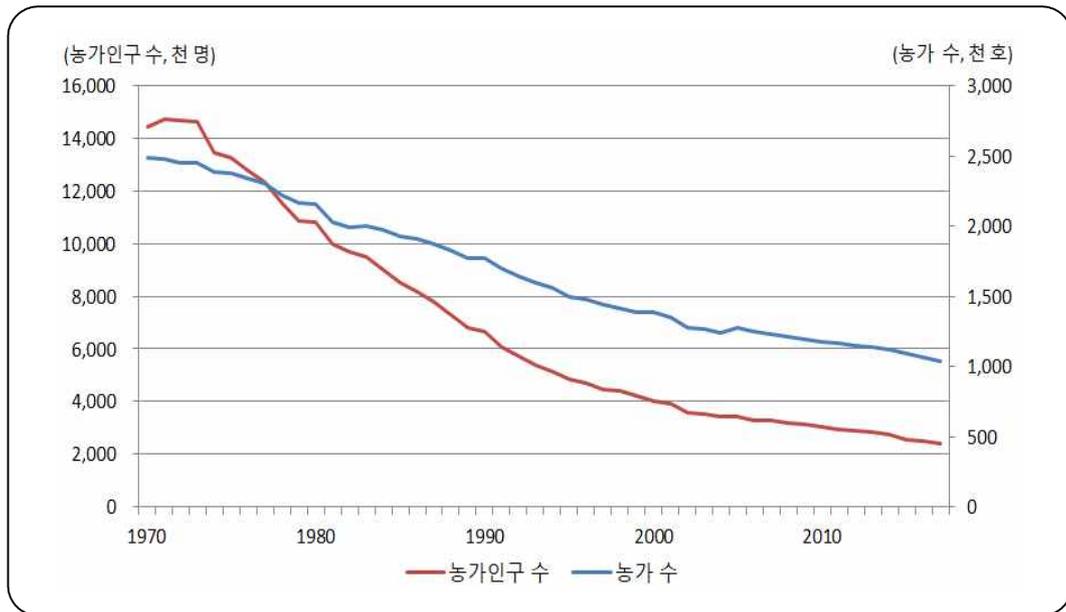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2017. 3)

1.3. 지역 간 불균형 확대

- 저출산·고령화 및 기타 경제사회적 요인들의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에 대한 영향이 농업·농촌에도 미치고 있음.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가 수는 1970년 248만 호에서 2016년 107만 호로 약 141만 호가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1,442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약 47년 만에 1,192만 명이 감소함.¹⁰
 - 같은 기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485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356만 명이 감소함.

¹⁰ 통계청 농림어업조사(각 연도), 김홍상 외(2017) 등 참조.

<그림 2-5> 농가 호수 및 농가 인구 추이(2010-2017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각 연도).

- 정주 여건, 경제활동 여력 등의 차이로 인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인구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에서도 읍 지역과 면 지역 간 인구 격차도 확대되면서, 특히 읍 지역의 과소화 경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¹¹ 특히 최근에는 지방소멸 추세가 농어촌 낙후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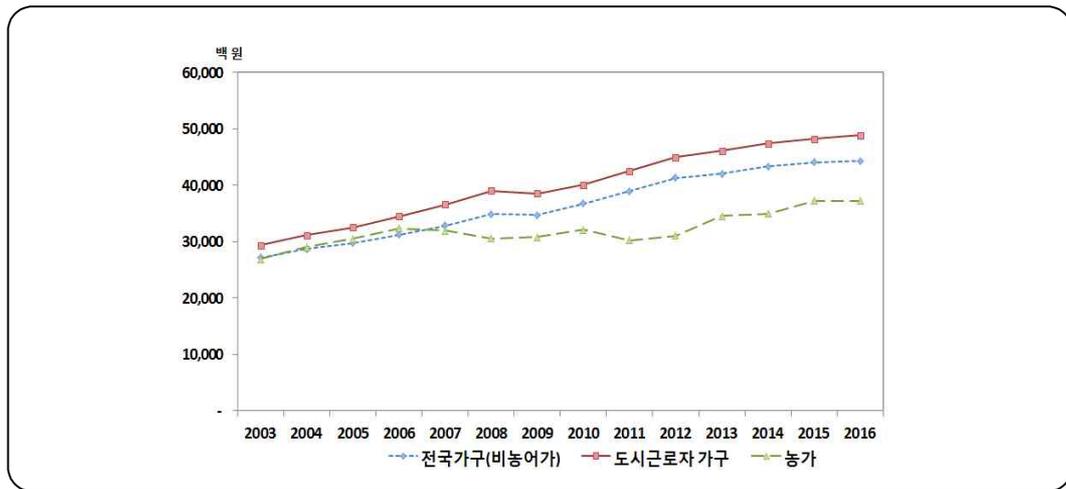
¹¹ 최근에는 지방소멸 추세가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인 것으로 분석됨(고용정보원 웹페이지 자료 참조, <https://www.keis.or.kr/user/bbs/main/137/775/bbsDataView/40843.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18. 8. 20).

¹²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 비율이 0.5이하인 지역, 즉 가입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나타냄(고용정보원 웹페이지 자료 참조, <https://www.keis.or.kr/user/bbs/main/203/2113/bbsDataView/40842.do?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 2018. 8. 20).

-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15년 49.2%에 달하였음.
 - 2018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89개(39%)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음(2018년 6월 기준). 읍면동 기준으로 전국 3,463개 지역 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됨.
 - 인구 2천 명 이하 과소화 면의 수가 2000년 105개에서 2015년 261개로 증가함.¹³
 -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농촌·농업 인구 감소 추세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움. 2015년 귀농가구 수는 1만 1,959호, 귀촌 가구는 전년 대비 1만 8,052가구 증가한 31만 7,409호임.
- 농촌·농업인구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함. 농가소득(월평균 소득 기준) 수준은 전국 가구(비농어가) 또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들 간 소득수준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농촌 지역 내에서도 소득불평등화가 심화되고 있음.
- 농가소득은 2003년 26,878백 원에서 2016년 37,197백 원으로 연평균 2.53% 증가함.
 - 전국가구소득은 2003년 21,117백 원에서 2016년 44,268백 원으로 연평균 3.84%가 증가 함.
 -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003년 29,308백 원에서 2016년 48,844백 원으로 연평균 4.01% 증가함.

¹³ 김홍상 외(2017) 참조.

<그림 2-6> 농가소득과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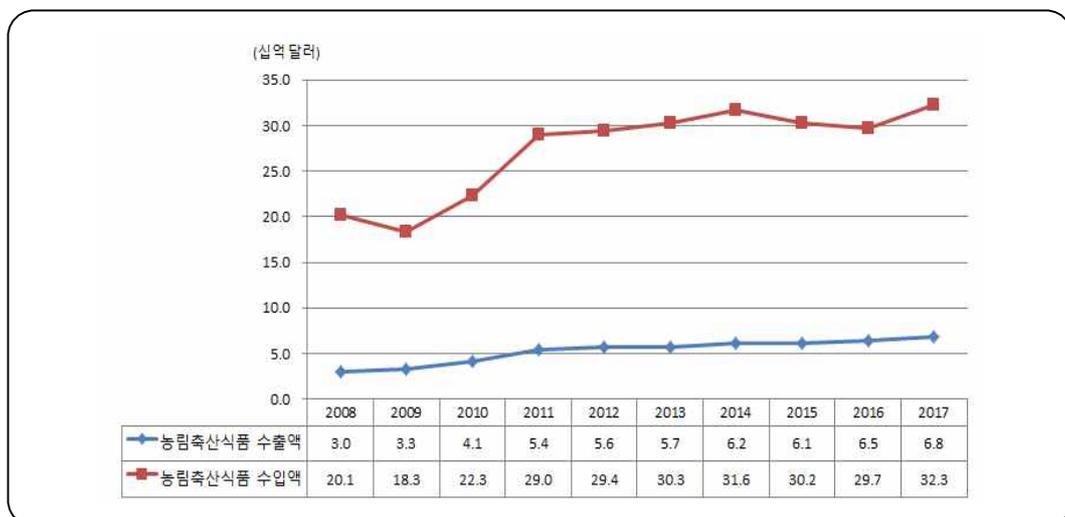
-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농촌(읍·면)지역 거주 가구 비중이 도시(동)지역 비중보다 높은 편임(이계임 외, 2017). 2016년에 전체 가구의 21.2%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데 비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29%) 이하인 가구의 읍·면지역 거주 비중은 29.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됨.
- 농업·농촌 인구 구조 변화와 취약성은 기초 먹거리의 안정적 제공을 포함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1.4. 농식품 수입 확대 및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

-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입의 증가세가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교역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처해있으며, 적자 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무역수지 흑자폭이 95.2십억 달러에 달하는데 비해, 농림축산식

품은 무역수지 적자 폭이 2017년 25.5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특히 농림축산식품 2017년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17.1십억 달러)에 비해 8.4십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임.

<그림 2-7>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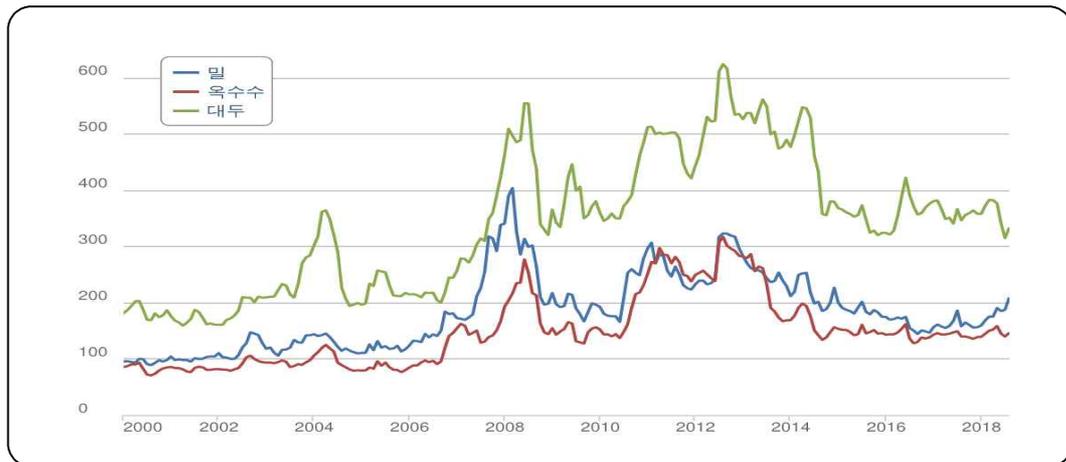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웹페이지(<http://www.kati.net/index.do>; 2018. 8. 2.) 자료 참조하여 작성함.

- 2000년대 이후 세계 곡물 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변동 주기가 빨라지고 있음. 곡물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곡물관련 제품의 생산비용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식품 소비자가격의 상승이 초래됨. 이에 따라 곡물 생산·가격의 문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적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식량 과잉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밀, 옥수수, 콩, 쌀 등 주요 곡물의 수급 추이가 세계적으로 안정적이었음. 그러나 2007~8년의 이상기상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바이오 에너지 및 사료용 곡물 수요가 증대되는 등 곡물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고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됨.

<그림 2-8> 국제 곡물가격 변동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웹페이지(<http://www.krei.re.kr:18181>; 2018. 12. 10.)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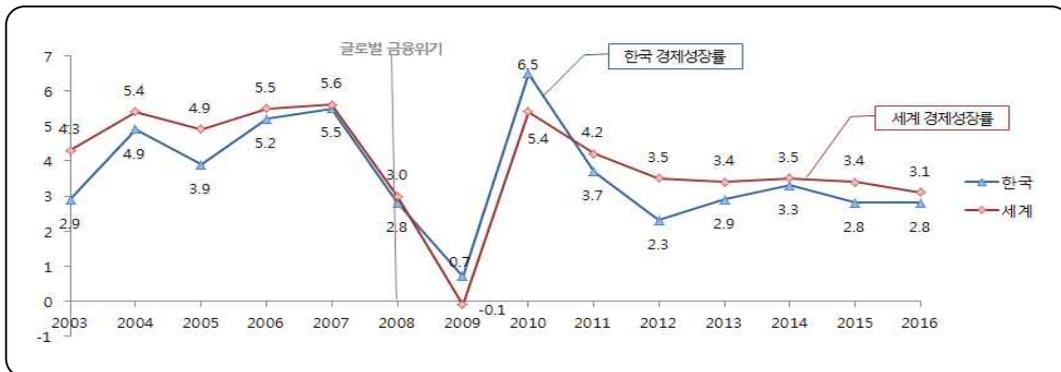
1.5. 저성장 시대 직면

-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대 이후부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한국 경제도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음.
 -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총 투자율도 195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약 4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14,15}

¹⁴ 김홍상 외(2017) 참조.

¹⁵ 국내총투자율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총자본형성 비율을 의미함. 경제성장률은 총투자율/자본계수(소득 1단위를 낳는 데 필요한 자본량의 비율)로 결정됨. 총투자율을 높이거나 자본계수를 낮추어야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김홍상 외, 2017).

<그림 2-9>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웹페이지 참조(<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01>) 조선pub 웹페이지 참조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2&nNewsNumb=20170524667&nidx=24668>; 2018. 8. 24.)

<그림 2-10> 국내 총투자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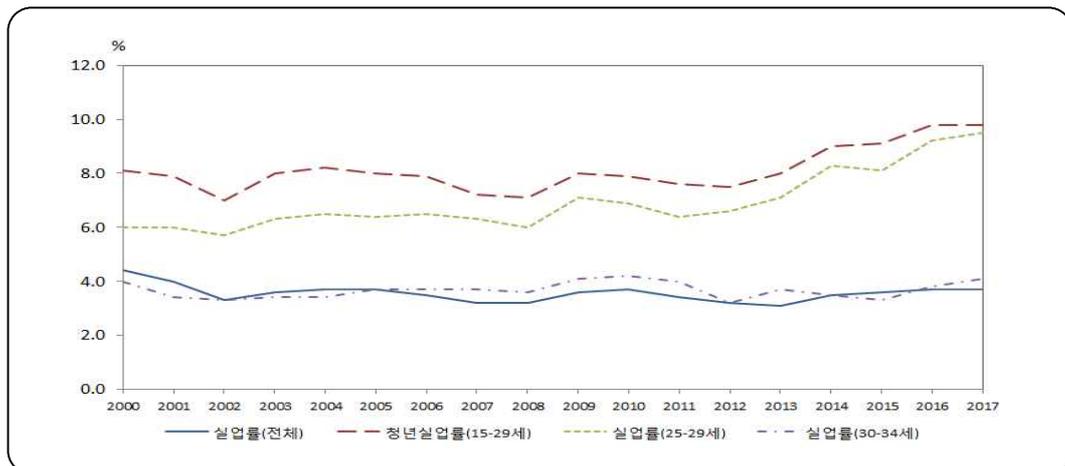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웹페이지 참조(<https://ecos.bok.or.kr>; 2018. 10. 20.).

- 2010년대 이후부터 이어진 경제 저성장과 함께 한국 경제는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고용·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¹⁶

¹⁶ 청년실업은 2000년 이후의 청년세대의 실업률 상승이 만성화된 상태를 의미함. 주로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세대의 실업을 의미함. 자본주의 고도화와 함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대체로 겪는 문제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으면서 발생함. 이밖에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 성향,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등도 청년

- 전체 실업률이 2000년대 이후 3-4% 수준인데 비해 청년실업률(15-29세)은 2000년대 이후 7-8% 수준에서 2014년 9%, 2017년에는 9.8%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구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25-29세 연령대의 경우 2000-2013년에는 6-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8.3%, 2017년에는 9.5%로 증가함.
- 국가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청년층의 취업은 취업 여부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중요한 문제임
 - 국가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과 저임금 문제는 개별 경제주체에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결혼, 출산에 영향을 주면서 사회적 재생산에 영향을 줌. 이는 다시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등 국가의 경제사회적 선순환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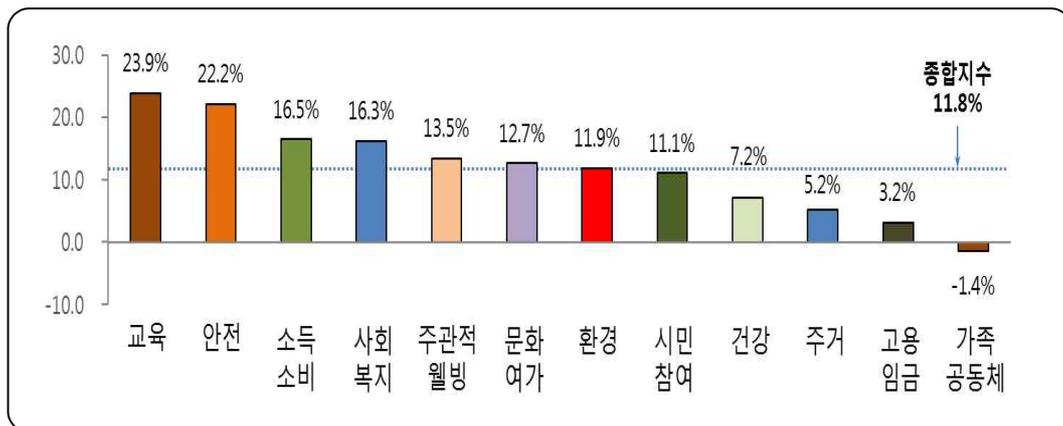
<그림 2-11> 국내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 웹페이지(<http://kosis.kr>; 2018. 9. 28.)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실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네이버 웹페이지 자료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8926&cid=46634&categoryId=46634>; 2018. 11. 25.).

<그림 2-12> 국민 삶의 질 지수영역별 기준년도(2006년) 대비 2015년 증감률



자료: 이투데이 웹페이지 보도자료(‘국민 삶의 질’ 지수 10년간 11.8% 개선...체감 효과는 ‘글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67987>: 2018. 11. 12.) 참조.

1.6.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¹⁷

○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이후 전세계적으로 관련 논의와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산업별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들이 전 산업과 일상생활에 융합되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결합한 초연결·초지능 시대가 되어 경제·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근본적 변화”를 말함.¹⁸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IT 분야와 융합되어 경제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¹⁹

¹⁷ 김병률 외(2018)를 참조하여 정리함.

¹⁸ 김병률 외(2018: 9) 참조.

¹⁹ 김병률 외(2018: 229) 참조.

- 국내외적으로 농식품 부문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과 관련 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가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농업 부문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은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유통·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유통시스템에서의 ICT 및 사물인터넷 활용과 외식산업 부문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문 시스템 개발은 물론 드론, 3D프린팅 다양한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음.
 - 농업 부문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확산은 인구 고령화·희소화 및 중소농 위주 농업 구조 등을 통해 파생되는 우리나라 농업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 첨단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확산은 산업적 관점에서 농식품 수급안정, 농식품 유통 효율화 증진과 판매 촉진,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증대, 소비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와 편의성을 충족하는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생산·유통·소비를 가능케 함.²⁰

2. 주요 이슈

2.1. 식량의 안정적 공급 미흡

-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며, 특히 2007~2008년의 세계 식량위기 이후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짐.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임. 이에 따라 해외 농식품 관련한 제반 여건 변화가 국내 안정적 식량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²⁰ 김병률 외(2018: 230) 참조.

- 2007~2008년 세계 식량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이 영향을 받으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 식량 부족 사태는 국가적으로 경제, 사회 및 정치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안보에도 직결됨.²¹
- 국내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6년 식량자급률은 50.9%로 주요 작물인 쌀의 높은 자급률이 식량자급률을 지지하고 있음. 특히 사료작물을 포함할 경우 곡물자급률은 25%내외에 불과함.
 - 2016년 식량자급률이 50.9%(쌀 104.7%, 보리 24.6%, 밀 1.8%, 옥수수 3.7%, 콩 24.6%, 서류 104.7%)에 불과함. 식량자급률은 2000년에는 55.6%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 55% 수준을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사료작물을 고려할 경우 2016년 곡물자급률은 24.3% 수준에 불과함.
 - 2016년에 기타 작물의 경우 품목별 자급률이 채소류 86.6%, 과실류 78.9% 등임. 두류는 8.1%, 종실류도 37.5% 수준에 불과함.
- 식량의 구입과 공급, 사용 능력 등을 종합한 식량안보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09개 국 중에서 2012년에는 21위였으나 2017년에는 24위였음.²² 특히 세부평가항목 중에서 품질·안전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국 중에서 17위였으나 접근성(availability) 22위,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은 3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2.2. 영양 불균형 심화²³

²¹ 이명훈 외(2012) 참조.

²² 이코노미스트그룹 인텔리전스 유닛 웹페이지(<https://foodsecurityindex.eiu.com>: 2018. 10.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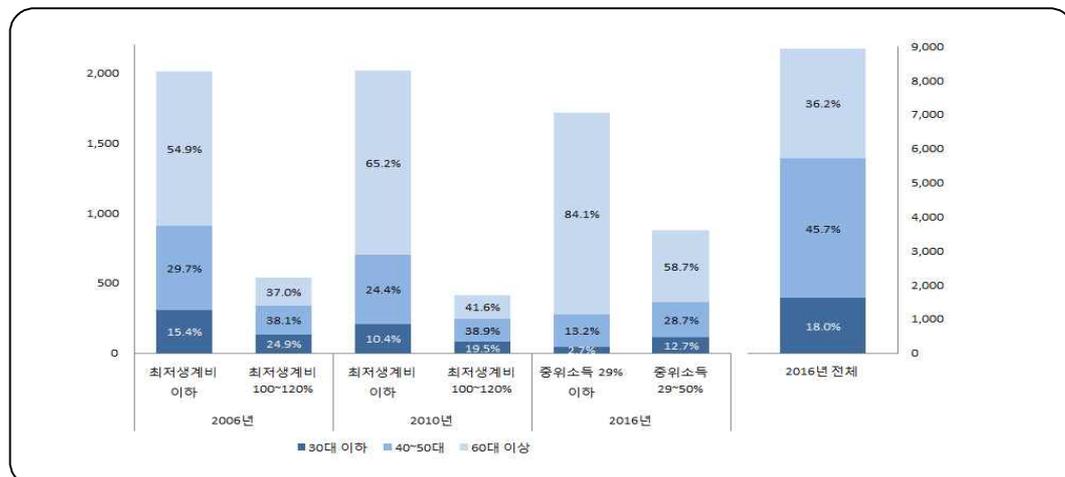
²³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웹페이지(<https://knhanes.cdc.go.kr>: 2018. 11. 3.) 참조.

- 국가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적인 측면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트륨 섭취는 과잉인 반면, 칼슘 섭취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과일·채소 섭취는 부족한 반면, 음료·주류 등의 가공식품 섭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나트륨은 목표섭취량 대비 남자는 2.4배, 여자는 1.7배 초과하여 섭취하는 반면 칼슘 섭취는 2015년에 남자는 66.2% 수준, 여자는 7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채소·과일 1일 500g 이상 섭취자 비율은 2005년 29.9%, 2015년에도 38.5%로 여전히 부족한 반면, 음료류 섭취는 2005년 1일당 62g에서 2015년에는 1일당 192g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류 섭취도 2005년 1일당 81g에서 2015년에는 53g이 증가한 123g에 달함.
- 또한 국민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등 불규칙·불건전한 식생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19.9%에서 2015년 26.1%로 증가하였으며, 19-29세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는 51.1%, 여자는 46.9%에 달함. 가구당 월평균 가공식품 구입비는 2005년 23.7%에서 2015년 38.0%로 증가함.
- 영양섭취 불균형으로 인해 식이관련 질병 유병률이 증가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30세 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05년 8.0%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7.9%로 2배 이상 증가함.
 - 비만 유병률도 2005년에는 남자 34.7%, 여자 27.3%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남자 42.3%, 여자 26.4%로 특히 남자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6.8조원(2013년)에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2.3.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미흡

- 국민의 먹거리 보장은 개인의 삶의 질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경우 국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
- 국민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 및 단독가구 증가 등 가구 유형이 변화하면서 빈곤율이 확대되는 추세임. 특히 취약계층은 60대 이상 연령층 비중에서 매우 크며,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 절대적 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인구 비율’을 보여주며 2003년 7.8%에서 2015년 9.5%로 증가함. 1인가구를 포함할 경우 절대적 빈곤율은 12.5%(2015년)로 더욱 증가함.
 - 전체 가구 중에서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은 36.2%(2016년)인데 비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중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은 2006년에 54.9%에서 2016년에 84.1%로 증가함.

<그림 2-13> 취약계층 가구주 연령별 구성 추이



자료: 이계임 외(2017) 참조.

- 취약계층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은 낮은 수준이며, 소득기준 계층 간 식료품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부분 영양소가 권장섭취량 미만으로 섭취되고 있음.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은 모든 식품류에서 섭취량이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과일류/채소류 섭취 부족자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함.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1인당)의 식료품 지출액은 21만 7천원으로, 전체 평균의 58.6% 수준이며, 식품비 연평균 증감률(2006~16년)은 전 가구 기준 -0.6%인 반면, 취약계층은 -1.5~-1.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추정량의 81.4% 수준이며, 영양섭취 부족자는 전체 평균 8.2%, 수급자는 15.5%로 두 배 수준이고,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자는 11.6% 수준임.²⁴
 - 대부분 식품군에서 70-80% 수준이며, 연령대별로 50세 이상에서 크게 낮은 편임.

<표 2-4> 취약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구분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	비수급자
영양섭취부족자	8.2	15.5	11.6
영양섭취부족자(비타민C포함)	6.6	13.4	9.5

자료: 이계임 외(2017) 참조.

- 특히 소득 수준이 취약한 계층에서 식생활 불안정성이 심각함. 식품안정 단계에 있는 소비자 비중은 전체 90.9%이나, 수급자는 66.9%, 비수급자 82.4%임. 특히 식품 불안 단계에 처해있는 수급자 비중은 33.1%에 달함.²⁵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자는 주관적 건강인지, 저작 상황, 삶의 질 평가수준도 크게 낮은 편이며, 영양섭취 수준이 권장량에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²⁴ 영양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주요 영양소인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자임.

²⁵ 식품안전성은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 능력을 의미함.

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건강한 식생활 관리 부족의 영향으로 비만율과 대사증후군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취약계층의 37.7%가 식품소비 부족하다고 인식(식품소비 충분도 58.4점)하고 있음.

<표 2-5> 취약계층 식생활 불안정 단계별 비중

구분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	비수급자
식생활불안정	식품안정	90.9	66.9	82.4
	식품불안정초기	7.7	26.6	13.7
	식품불안정중간	1.2	5.7	3.4
	식품불안정심화	0.1	0.8	0.4

자료: 이계임 외(2017) 참조.

<표 2-6> 취약계층 건강 관련 인식 수준(%)

구분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	비수급자
주관적 건강인지	매우 좋음	9.0	7.4	6.5
	좋음	30.7	21.1	23.5
	보통	45.7	43.2	43.4
	나쁨	11.8	20.1	18.1
	매우 나쁨	2.8	8.2	8.5
저작불편	매우 불편함	5.1	12.7	13.2
	불편함	15.9	20.6	24.2
	그저 그러함	16.2	18.1	16.3
	불편하지 않음	23.5	15.3	19.2
	전혀 불편하지 않음	39.3	33.3	27.1
EQ-5D		0.95	0.88	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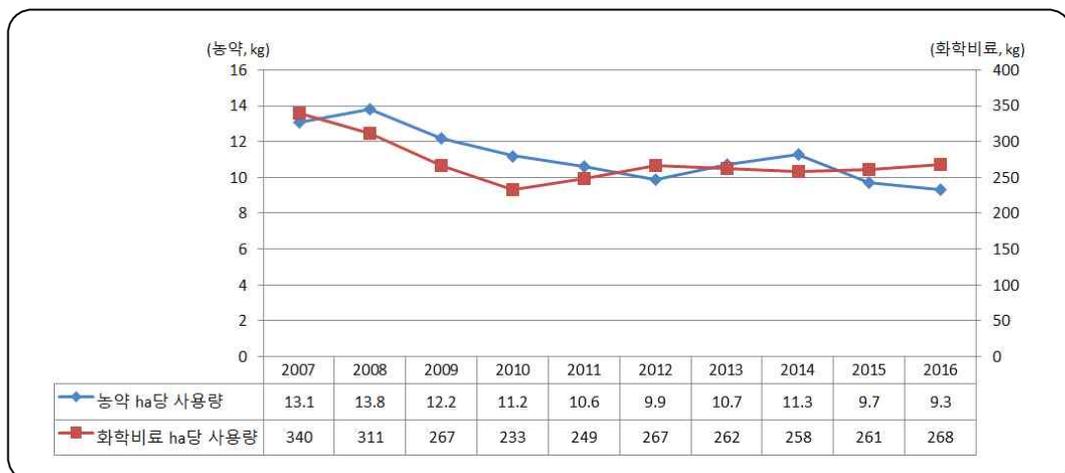
주: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지표

자료: 이계임 외(2017) 참조.

2.4. 환경·폐기 문제 심화

- 화학비료와 농약 고투입 영농, 대규모 집단축산에 의한 가축 분뇨 발생으로 농업용수, 토지 등 생산 환경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악취 발생, 지하수·하천 오염 등 일반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줌. 소비단계에서는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외부화가 확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함. 음식물 쓰레기는 대량유통 및 대량소비, 포장식품의 이용 증가로 인한 포장재 폐기 발생도 동반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과 함께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국가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
- 과거에 비해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부문의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또한 농약 사용량의 감소도 정체되고 있음.
 - 국내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은 2007년 이후 한동안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감소 추세가 정체된 상태임.

<그림 2-14> 국내 농약 및 화학비료



자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웹페이지(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22: 2018. 9. 28.)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및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축산 악취관련 민원이 2014년 2,838건에서 2016년 6,39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2016년 10월 기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사(11만 5천 농가) 중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허가 축사가 52%임.
- 음식물 폐기량은 가정에서는 물론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소비단계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 음식물 폐기량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지는 못함.
 - 국민 1인 1일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0.276kg에서 2014년 0.272kg으로 0.004kg(1.4%) 정도 감소한데 그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소형 음식점(70%), 대형음식점(16%), 집단급식소(10%), 유통단계(4%) 순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유통조리과정(57%), 먹고 남긴 음식물(30%), 보관하다 폐기하는 식재료(9%), 먹지 않은 음식물(4%) 순임.²⁶
- 푸드 마일리지는 먹거리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치임. 우리나라는 국가별 1인당 푸드 마일리지가 2007년까지는 일본보다 작았으나, 2010년의 경우 일본 푸드 마일리지 수준을 넘었으며 영국, 프랑스 등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먹거리 관련한 문제를 노출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나라가 수입 등 원거리 이동을 통한 먹거리 공급이 많으며, 즉 식량안보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²⁶ 국회입법조사처(2016. 10. 26., 지표로 보는 이슈 제68호) 자료 참조.

<표 2-7> 국가별 1인당 푸드 마일리지

단위: t·km/인

연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2003년	3,456	5,671	2,365	777
2007년	5,121	5,462	2,584	869
2010년	7,085	5,484	2,337	739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8050.pdf?Mode=PC>: 2018. 12. 14.)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2.5.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 지속

- 국가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 확대, 기후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신종 위해물질의 출현과 국가 및 지역 간 전파 가능성이 확대되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연이은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쉽사리 해소되고 있지 못함.
 - 가짜 백수오(2015년 5월), 살충제 계란(2017년 8월)은 물론 최근의 냉동 케이크로 인한 급식 식중독 사고(2018년 9월) 등 식품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시장개방 확대로 식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 구매가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품 등으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식품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사고가 다양화하고 글로벌화할 우려도 증대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신·변종 병원성 미생물 등이 지속적으로 출현·확산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 항생제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 쿠도아충 출현(2014년), 변종 노로 바이러스 출현(2016년), 콜레라균 재출현(2016년)

- 농약 사용량이 2012년 17.4천 톤에서 2016년 19.8천 톤으로 증가함.²⁷
- 유전자변형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여전하며, 나노기술, 유전자가 위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 상용화가 예상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과학적인 대응과 함께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됨.

2.6. 농업·농촌 및 먹거리 관련 인식 정체²⁸

- 농업·농촌 및 먹거리에 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은 국내 먹거리 생산기반 유지의 원동력이 되며, 정부의 원활한 농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 및 농식품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저성장 및 시장개방 시대에 농업·농촌이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할 만하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농업, 농촌 부문에 대한 세금 제공 유인이 낮으며,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을 수 없음.²⁹
- 2017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은 편임.³⁰ 그러나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²⁷ 통계청 통계포털 웹페이지(<http://kosis.kr>: 2018. 11. 2.)자료 참조.

²⁸ 송성환·박혜진(2018: 81-99, 농업농촌경제동향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참조.

²⁹ 김홍상 외(2017) 참조.

³⁰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임.

-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농업인 30.9%, 도시민 22.3%로 조사되었으며, 2007년 농업인 18.1%, 도시민 11.4%에 비해 각각 10%p이상 증가함.
- 또한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할 경우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당사자인 농업인의 인식이 도시민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도시민은 29.4%(부정적 37.3%), 농업인은 긍정적 15.4%(부정적 68.2%)이었음.
- 농촌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도시 대비 낮은 편이라는 의견이 높은 편이었음. 도시민의 51.7%, 농업인의 78.8%가 농촌의 생활수준을 도시 생활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비중은 2017년에 70%로 높은 수준인 반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7.9%에 불과하며(관심도),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자신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32.6%에 불과하였음(관련성 인식).
 - 특히 관련성 인식은 2013년에는 40.5%였으나 2017년에는 7.9%가 감소하여 32.6% 수준을 나타냄.
- 국민들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와 국내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시민의 45.9%가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16년의 52.6%에 비해 6.7%p 감소함.
 - ‘농산물 구입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2007년 대비 9.5%p 감소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은 14.5%p 증가함.

2.7.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미흡

- 농식품 산업은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 산업인 동시에 세계 시장 성장성, 고부가가치 창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유함.
 - 세계 식품산업은 자동차시장(1.3조 달러), IT시장(0.9조 달러), 철강시장(0.8조 달러)보다 5~8배 큰 규모의 시장으로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6.3조 달러임.
- 2015년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210조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68조 (2015년 기준) 중 식품·외식산업에 43.4%가 투입되는 등 국산 농산물의 중요한 소비기반임.
 - 식품제조업 규모는 102조 원, 외식업 108조 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각각 37.8%, 58.8% 증가함. 식품산업 전체로는 47.8%가 증가한 수치임.
 -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는 61조 원(2016년)으로 GDP의 4.1% 차지하며 식품·외식산업 종사자수는 233만 명(2016년)으로 2010년 대비 23.3% 증가하였으며, 식품제조 34만 명, 외식 199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1%를 차지함.
 - 국산농산물의 식품·외식 투입 비중은 2010년에 42.3%에서 2015년에는 43.4%로 43%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식품·외식산업은 사업체 중 5인 미만의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 (86.1%)하는 영세한 구조이며, 생산성을 나타내는 사업체당 매출액,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타 산업 대비 낮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수익성이 저조한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못함.
 - 2015년 기준 식품·외식분야 사업체는 약 71.5만 개이며, 종사자 수 2~4명 규모 사업체가 가장 큰 비중(59.8%)을 차지함.

- 종사자 5인 미만 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86.1%임에도 매출액은 이들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전체의 28.2%에 불과함.
- 농업의 경우에도 농업 부문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 인력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 인력 양성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 인력 비중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업 부문 미래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농업 부문 취업자 수 비중은 2010년 6.6%에서 2015년 5.2%로 감소함.
 - 전체 농업인력 중 30대 이하 비중은 2010년 6.4%에서 2015년 5.7%로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40세 미만 농업 종사 가구원 수는 11만 5,583명에서 2015년 6만8,168명으로 감소하였음.

2.8. 지역 사회·공동체 붕괴 위기

-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제사회적 불균형 확대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 농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공동체가 증가하고 있음. 지역사회·공동체 붕괴는 사회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 상권 축소, 일자리 부족 등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못함. 7개 분야, 17개 지표로 구성된 지역별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16년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대부분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함.
 - 4.5%의 지방중소도시가 생산·거주 기능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청년층 유출 가속화,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함.

3.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기존 농식품 정책은 경제·환경·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식품 관련 이슈·문제를 일부 영역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그러나 먹거리 관련한 문제·이슈가 농식품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 영역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으며, 농식품 관련한 환경·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부문별·영역별로 추진되는 제한적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한 정책성과를 달성하는데 한계에 도달함. 또한 기존의 생산 또는 산업적 관점과 경제 성장·발전에 초점을 맞춘 문제 해결 방식은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함.
- 최근 지속가능성이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고려 가치로 등장하면서 먹거리 분야에서 경제·사회·환경 간에 균형을 이룸으로써 푸드시스템 전반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두고 보다 포괄적인 정책대상·영역 또는 범위를 상정하고 농식품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음.
 - 환경 영역에서 주로 논의·적용되던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경제·사회·환경 전 영역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음. UN은 2015년 9월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은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 간의 균형을 의미함.
 -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푸드시스템 또는 먹거리 관련한 이슈 전반을 아우르면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생산자·공급자적 관점

을 탈피한 국민 전반을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 범위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시도가 전세계적으로 국가별·지역별로 확산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첫째, 농식품 관련한 이슈·문제의 복잡성·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면서 정부 정책 간 연계·통합에 의해 먹거리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산업발전에 초점을 맞춘 성장 우선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부 경제 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농식품 정책에서도 복지·분배, 고용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환경·생태영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미래를 고려한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으로서 확장됨. 이에 따라 푸드시스템 또는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의 추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를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제 3 장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실태

- 이 장에서는 정부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 조직 등 추진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먹거리 관련 정책의 추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먹거리 관련 정부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등을 검토함.

1. 추진 실태³¹

1.1. 추진 체계

1.1.1. 조직 구성

- 정부 먹거리 정책은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제기되는 식품수급(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음. 이들 먹거리 정책은 취급단계 및 영역별로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수

³¹ 황윤재 외(2018)를 참조하여 작성함.

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별로 수립·추진함. 정부는 이밖에 국가 먹거리 정책의 수립·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을 수립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 등을 통해 추진함.
- 정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과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심의·조정·합의·자문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수립·추진을 원활하게 함.

가. 중앙행정기관

- 먹거리 정책은 소관업무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산하여 수립·추진됨. 이들 기관은 품목별·영역별로 구분하여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수립·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공급, 식품산업 진흥 및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공급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영양·복지, 교육부, 국방부는 각각 정규교육 과정과 군대 등 특정계층 대상 급식관리, 환경부는 먹는 물,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 측면에서 농식품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함.
 - 또한 기획재정부(물가 전반), 산업통상자원부(통상, LMO), 여성가족부(가족·청소년) 등의 중앙행정기관 에서도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수립·추진함.

<표 3-1> 정부 부처별 농식품 정책 주요 추진 분야

부처명	주요 추진 분야
농림축산 식품부	농식품 생산·유통·수입 등 공급, 식품산업 진흥
산림청	임산물 공급
농촌진흥청	농업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보급, 농업·농촌 지도·교육
해양수산부	수산물 생산·유통·수입 등 공급
보건복지부	영양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교육부	교육과정 급식관리
국방부	군대 급식관리
환경부	먹는 물, 음식물쓰레기 관리
기획재정부	경제 정책 조정, 물가안정에 관한 업무 전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총괄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자료: 황윤재 외(2018) 참조.

나. 정부위원회

- 농식품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정부위원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이들 위원회는 소속기관 유형별로 ① 대통령 또는 ②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거나 ③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구분됨.
 -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의 경우 ①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범부처 위원회 형태로 구성·운영됨.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먹거리 관련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는 대표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있음. 이중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범정부 식품안전추진체계의 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먹거리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다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먹거리 관련 사항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친화식품, 식품안전관리(아동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녹색성장)을 목표로 농식품 분야 환경, 소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부처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들 위원회는 주관기관 이외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음.
 - 예컨대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상 해양수산부)는 주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음. 이에 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는 주관기관인 환경부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함.
-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을 소속으로 하여 개별적(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가 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등이 있음.

<표 3-2> 소속별 주요 정부 위원회

소속		주요 위원회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무총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중앙 행정 기관	범 부 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	생활보장위원회	
	독 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중앙협의회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위원회
환경부	환경정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자료: 황윤재 외(2018) 참조.

1.1.2. 법률 체계

-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법의 목적, 관리 대상 등에 따라 소관 업무별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의 법률은 비교적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은 영양 측면에서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은 농식품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나 복지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이밖에 산림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

회 등 중앙행정기관별로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들이 분산되어 있음.

-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농식품 관련 법령들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구성됨. 농식품 관련 기본법들은 국가 정책 방향 제시와 제도·정책의 체계화 등을 위해 제정되어 관련 일반법에 대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해양수산부)은 어촌 및 수산업, “산림기본법”(산림청)은 산림 및 임업 등에 관한 일반법들의 상위법임.
 - 이밖에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품안전, “사회보장기본법”(보건복지부)은 사회보장,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이상 환경부)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은 소비자 권익,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국무조정실)은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상위법으로서 기능을 함.³²

<표 3-3> 농식품 관련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령유형	관련 법령
농림축산 식품부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반법	식품산업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진흥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해수부)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해수부)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³²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함(관계부처 합동, 201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

소관부처	법령유형	관련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일반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반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중자산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반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산림청	기본법	산림기본법
	일반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반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기획재정부	일반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 자원부	일반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일반법	폐기물관리법
		지속가능발전법
여성가족부	일반법	물환경보전법
공정거래 위원회	기본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일반법	소비자기본법
국무조정실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국무조정실	기본법	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소관부처	법령유형	관련 법령

주 1: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들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함(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참조).

자료: 황윤재 외(2018) 참조.

1.1.3.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주요 먹거리 정책 추진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법정계획들은 추진목적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취급단계별로 농식품 수급, 안전, 건강·영양 등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주로 소비 단계 건강·영양, 환경부는 폐기·순환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단계 안전·품질 문제를 다루고 있음.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 단계를 정책 추진 범위로 하여 농식품 수급, 안전·품질은 물론 건강·영양,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포괄적·종합적 성격의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독립적인 소관기관으로 하여 수립·추진됨.

<표 3-4>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취급단계별>

소관부처	관련 계획	주요 내용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순환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	○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	○		○	○
	인삼산업종합계획	○	○	○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	○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	○	○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	○	○	○	

소관부처	관련 계획	주요 내용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국민건강증진계획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국무조정실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			○

자료: 황윤재 외(2018) 참조.

<표 3-5>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정책영역별

소관부처	관련 계획	주요 내용					
		수급	안전 품질	건강 영양	환경	산업	지역 공동체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	○	○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			○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		○	○	
	인삼산업종합계획	○	○			○	
식품의약품 안전처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			○
해양수산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	○		○	○	○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	○			○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	○				
보건복지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국민건강증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				
	자원순환기본계획				○		
환경부	국가환경종합계획				○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	○		○
	공정거래위원회		○				
국무조정실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	

주: 식량안보는 수급, 교역은 산업, 복지,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은 건강·영양으로 분류함.

자료: 황윤재 외(2018) 참조.

2. 주요 먹거리 계획 부문별 추진 내용

- 이 절에서는 먹거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먹거리 관련 법정계획들의 추진 목표 및 비전을 살펴보고, 농식품 정책 영역별로 법정계획의 세부 추진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를 검토함.
 - 정책영역은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환경·폐기, 식품산업, 지역·공동체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함.

<표 3-6> 검토대상 먹거리 관련 주요 정부 법정계획

정책 영역	정부 법정계획
식품수급 (식량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해양수산부)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환경부)
식품 안전·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기본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환경부)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건강·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교육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영양관리기본계획(보건복지부)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기본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환경부)
환경·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 ■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 ■ 자원순환기본계획(환경부)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환경부)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해양수산부)
지역·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해양수산부)

자료: 연구진 작성.

2.1. 정책 비전 및 목표

- 최근 다수의 먹거리 관련한 정부계획은 비전 및 목표를 통해 먹거리 정책이 소비·소비자(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가능성, 행복 등을 강조함.
 - 예컨대 기존에 농업·생산 및 산업 관점의 정책이 주를 이루던 최근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계획의 경우 ‘식품산업진흥계획’을 제외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소비, 국민, 지속가능, 건강, 안심, ‘식생활교육기본계획’ 국민, 삶의 질,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은 소비자, 상생 등을 목표·비전에서 제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과 어린이의 안전, 건강, 행복 등, 보건복지부는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서 국민, 영양, 건강 등을 강조함. 환경부는 환경적 관점에서 행복, 지속가능 또는 다른 부문과의 조화 등을 제시함.

<표 3-7> 주요 정부 법정계획 비전 및 추진 목표

주요 정부계획		비전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비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비전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식생활교육 활성화 ■ 관련부처 연계협력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식생활교육·체험기회 확대, 바른 먹거리 접근성 향상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도약 ■ 국산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확충으로 농업과의 동반성장 ■ 유망분야 육성, 취·창업 지원 등으로 식품분야 고용 확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사회구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규모 확대 ■ 유통비용 절감 	

주요 정부계획		비전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비전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어촌활력 제고 ■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비전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 세상
		목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비전	은 국민의 영양관리로 건강사회 구현
		목표	건강 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국토 환경 ■ 통합된 안심 사회 ■ 포용적 혁신 경제 ■ 글로벌 책임 국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자원순환기본계획	비전	저탄소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정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반 조성

자료: 연구진 작성.

2.2. 영역별 정책·사업

2.2.1. 식품수급(식량안보)

○ 생산 기반, 수급, 식량자급률 등 식품수급 및 국가 식량안보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사업은 농축수산물 생산·수급에 관한 업무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됨.

○ 이들 부처의 식량안보 관련 정책·사업을 담고 있는 주요 정부계획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이하 ‘수산업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소관) 등이 대표적임. 이밖에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가능계획’(이하 ‘지속가능계획’)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농식품 정책·사업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식품수급 및 식량안보 관련 정책·사업은 주로 생산기반 조성, 수급 안정성 확보, 식량자급률 제고 등과 관련이 있음.
 - 생산기반 관련하여 농업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지 확보, 밭작물 생산, 축산업은 종축개량, 수산업은 수산자원 보전·조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음.
 - 수급안정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체계 등 가격 안정 장치 마련, 경영위험관리, 유통체계 정비 등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제시됨.
 - 식량자급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업의 경우 농발계획은 쌀 관련 정책·사업들이 포함되며, 수산물의 경우 수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등의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사업들이 제시됨.

<표 3-8> 식량안보 관련 주요 정책·사업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생산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농지 보전 및 간척지 활용 - 밭작물 등 국내생산 확대 - 안정적 수요 확보 - 식량위기 대비 대응체계 마련 ■식물계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변동식물계 개편 ■축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축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숲 조성사업 - 연안바다목장 - 종묘방류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 확충 - 정밀 모니터링 자원조사 체계 구축 - 수산자원생태 조사 및 평가 추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 및 개별어획할당제(ITQ)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밭농업 활성화 - 답리작 확대 - 사료곡물 수입대체 -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수급안정 (유통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경영 안정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확대 -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및 경영비 절감 - 품목별 수급 조절 거버넌스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수급예측모델 고도화 - 품목별전국연합사업단 육성 ■ 경영위험관리시스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보험 대상품목, 보장범위 확대 -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단계적 인상 ■ 농업 경영희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 경영정상화 지원 ■ 생산조직 육성 등 유통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 이미지경매, 정가수익매매 확대 - 유통경로 다양화 ■ 축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조절체계 구축 -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실태조사, 수산식품 수급표 작성, 기초통계 확충 - 주요 어종별 글로벌 수급관리 도입 - 정부 비축물량 확대, 민간 수매지원 용자 등을 통한 수산물 수급 조절 지속 ■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통혁신 플랫폼 구축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인프라 확충 - 영세업종 및 어촌계 유통기반 지원 	
식량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생산 체계 마련 - 논 활용 다각화 - 쌀 고품질화 - 쌀 유통구조 개선 - 쌀 소비촉진 - 정부양곡 관리 효율화 - 목표가격 재설정 ■ 콩 등 수입의존도 높은 품목의 식량자급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자급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어업 생산능력 확충 - 생산부진품목 양식시설 지원 및 인프라 강화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요 지표

- 생산기반과 관련하여 농발계획은 식량자급률을 생산기반 조성의 적정성(성과)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며, 이밖에 수리안전담률, 배수개선율, 직불제개편유무 등이 관련이 있음. 수산업기본계획의 경우 수산자원량·생산량, 바다숲 조성, TAC, ITQ제도 도입 등 세부 사업 관련한 비교적 다양한 지표를 제시함. ‘지속가능기본계획’은 농업분야는 농지면적, 수리안전담, 수산업

분야는 수산자원량·어업량 등을 생산기반 관련한 지표로 제시함.

- 수급안정 관련하여 농발계획은 채소가격안정제, 기초생산자 조직,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비중,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중 등 관련 정책·사업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성과지표로 제시함. ‘수산업기본계획’은 비축품목 및 물량을 수급안정 관련 지표로 제시함.
- 식량자급률의 경우 대부분의 정부계획들이 공통적으로 성과지표로 제시함. 이밖에 농발계획은 직불제 개편, 벼 재배면적 등 세부 정책·사업 관련된 지표들을 성과지표로 제시함.

<표 3-9> 식량안보 관련 주요 지표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생산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급률(식량/곡물) ■ 수리안전답률 ■ 배수개선율 ■ 직불제 개편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량(톤) ■ 자원조사선(척) ■ 바다숲조성(개소, ha) ■ 바다목장조성(개소) ■ 제도도입(TAC, ITQ) ■ 연근해어업생산량 ■ 양식생산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면적 비율(가구당 농지면적) ■ 수리안전답 비율 ■ 수산자원량(만톤) ■ 양식어업량
수급안정/ 유통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가격안정제 비중(생산량대비) ■ 기초생산자 조직 ■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비중 ■ 정가수의매매 거래비중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국가재보험제도 손익분담방식으로 전환(울)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재해복구 지원단가 ■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 ■ 경영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공동이용 농가 - 조사료 자급률 ■ 발작물 공동경영체 ■ 의무자조금 조성 ■ 채소가격 안정제 목표 ■ 생산자 조직화, 도매시장 운영개선, 신유통경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품목 및 물량 ■ 유통단계 축소/물류 비중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 기초 생산자조직 - 통합마케팅 비중 - 정가수의매매 비중		
식량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급률(식량/곡물) ■ 벼 재배면적 ■ 쌀 가공산업 매출액(쌀 소비량) ■ 고품질 쌀 공급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

자료: 연구진 작성.

2.2.2. 식품안전·품질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농식품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함. 이밖에 먹는 물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함.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안전관리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이하 ‘수산업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환경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이하 ‘지속가능계획’)(이상 환경부 소관)이 식품안전 관련한 주요 정책·사업들을 담고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식품안전·품질 관련 정책·사업은 생산단계, 유통·소비단계에서의 농수축산 식품안전관리, 농식품인증표시, 소비자 참여·소통 강화(정보 제공) 등과 관련이 있음. 이밖에 환경부 먹거리 계획은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의 경우 위해성 평가, PLS 등 잔류물질 관리, GAP·HACCP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함. 축산물의 경우 사육환경 개선,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가 주된 정책·사업이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PLS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수산물은 생산환경 개선, PLS 도입 등을 통한 잔류물질 관리, 양식장 HACCP 확대가 주된 정책·사업임.
-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는 축산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품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식중독 예방 및 대응, 집단급식소 안전 관리, 유통 단계 잔류물질 관리, 위해식품 차단, 유통시설 환경 개선 등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제시함.
- 농식품 인증·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 GMO 등 주요 농식품 인증·표시 개선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이밖에 소비자 참여·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발계획과 수산업기본계획은 이력제 확대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안전계획은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과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을 포함함.
 - 이밖에 농발계획은 축산업 관련하여 닭고기 가격 의무 공시제를 제시함.
- 먹는 물 관리를 위해 환경계획과 지속가능계획에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지하수, 상수원 오염원 관리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표 3-10> 농식품 안전·품질 관련 주요 정책·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사 전 예 방 적 안 전 관 리 / 생 산 단 계 안 전 관 리	농 산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품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S 대비 ■ 농축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HACCP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 PLS 시행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가능 농약 확대 및 판매기록 관리 강화 ■ 재해 대응 농업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검역과 예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 기준규격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 평가 ■ 농산물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S 도입 - 소면적 재배 농산물 농약 관리 ■ 농약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 ■ 농산물 생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농업용수, 농자재 등 - 친환경 인증 기준에 환경오염 관리기준 마련 ■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친환경, HACCP 확대 ■ 건강한 농산물 소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농산물 소비 촉진 ■ 유통 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물질 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유해생물 위생관리 강화 	
	축 산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신고, 초동 대응, 생산자 책임 방역 - AI, 구제역 대응 - 매몰지 환경관리 ■ 축산사육환경 근본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사육기준 마련 - 시설기준 강화, 축사 기축관리 의무 부여 - AI 위험 지역 내 신규 허가 금지 - 허가기준, 과태료 벌칙 상향 등 - 무허가 축산 적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 기준규격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 평가 ■ 축산물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산란노계 전수 검사 및 검사기반 확충 -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 -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확대 ■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안전관리 강화 -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전환 ■ 축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기준·규격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 의약품 사용금지 물질 추가 지정 ■ 수산물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S 도입 - 잔류성 유해물질 모니터링 확대 ■ 수산용 의약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 - 수산용 의약품 관리 강화 - 수산용 의약품 제조업체어업인 등 지도·감독 강화 ■ 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오염원 관리 - 사전예방적 양식시스템 도입 ■ 수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사용 양식업체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식품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검사 확대 - HACCP 양식장 등록 확대 - 생산단계 위생 가이드라인제도 도입 - 백신지원사업 확대
	유통·소비 단계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을 통한 계란 유통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식품 위생관리제도 개선 -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 집단급식소 안전 관리 강화 -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 ■ 유통 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식품 차단 시스템 개선 -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 잔류물질 검사 강화 - 과학적 방법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통합식품안전정보망, 온라인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식품 등 8개 품목 및 집유업·유가공업 대상 HACCP 의무적용 단계적 확대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 상시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취약 업체 사전 지도·점검 강화 -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및 허위 과대·광고 차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기본계획] ■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 - 학교주변 업소 위생관리 강화			
농식품 인증·표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알권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 확대 - GMO 안전관리 강화 ■ 축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등급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인증 개선 및 강화 ■ 농축수산물 생산·제조 정보제공 확대(원산지 등) ■ 기술발전 변화 대비 사전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표시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알권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 확대(음식점, 수산물, 가공식품 등) ■ 농수산물 인증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농산물 관리 강화 - 수산물 인증제 단순화 - 포장·유통 수산물 의무표시제(포획방법, 권장소비기한, 영양, 취급주의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원산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표시제도 강화·확대
소비자 참여·소통 강화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알권리 강화(이력제 확대) ■ 축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고기 가격 의무 공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 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 개선 ■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표시·광고 체계 개선 - 식품안전정보 민간 확산 (식품안전정보 통합 제공 및 민간플랫폼과 연계) - 식품 영양위해 정보 제공 확대 ■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참여 - 소통 전략 - 소비자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먹는 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이하 급수관 의무 교체, 음수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생산·공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 물환경기준 선진화 ■ 수질 유해물질 환경배출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물질 확대 - 환경영향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적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고도화 및 누출사고 예방 ■ 녹조 저감 및 발생 최소화로 공공수역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물질 유입 차단 및 적정유속 확보로 사전예방 - 녹조 감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으로 소통 강화 ■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정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인프라 강화 ■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류·지천 중심으로 수질 개선 - 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감축 - 오염총량제에 의한 수질관리 기반 강화 - 농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 유도 ■ 물 순환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 전국토 물 저류·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 -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 	

주 1)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책·사업은 제외함.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요 지표

- 생산단계 주요 지표는 농약 관련한 지표가 주를 이루며(농약 등록수(품목), 판매기록 관리대상, 사용량, 적발률, 농약 분석기술 등), 이밖에 검사계획 또는 검사율, 적합률, 기준·규격 재평가(종), 화학비료 사용량, 가축전염병 발생률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유통·소비단계 지표는 유통단계 검사 및 위해차단 장치 마련(검사소 설치율, 차단시스템 적용 매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 위해 발생 규모(식중독 환자수), 안전 확보에 대한 인식(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등을 포함함.
- 농식품 인증표시는 GAP, HACCP 등 인증·표시 인증률(인증규모) 또는 이행률 등을 주로 지표로 활용함. 원산지의 경우 표시 이행률과 함께 표시대상 품목(음식점 원산지 표시)을 지표로 활용하기도 함.
- 소비자 참여·소통 강화에 관한 지표는 이력추적(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 이력제 품목)과 위해정보 조치율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됨.
- 먹는 물 관리 지표는 상수도 보급률, 물 공급 안정지수 등 깨끗한 물 공급에 관한 사항, 깨끗한 물 확보 수준, 고도정수처리 시설 비율, 감시물질 지정 항목, 수질오염지표 수 등 수질 및 오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표 3-11> 농식품 안전·품질 관련 주요 지표

		농발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환경 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방제대상 농약 직권 등록수(누계)	■기준·규격 재평가 (중) ■부정·불량 농약 적발률 ■농장단위 잔류물질 검사율(계란산란노계) ■농약 판매기록 관리대상(중)		■비료사용처방 발급건수 ■국내 최초 등록농약 분석기술 개발·보급 ■직권등록 농약 품목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 사용량	■조사계획(건수)
	축산물 안전관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기준·규격 재평가(중)			
	수산물 안전관리		■기준·규격 재평가(중)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기준 적합율			
유통·소비 단계 안전관리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율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 ■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식중독 환자수 (인구10만명 당)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시설 지원율			
농식품 인증·표시 강화		■원산지표시 이행률 ■GAP인증률 ■HACCP 인증률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GAP 인증농가 비율 ■HACCP제품 생산비율 ■양식장 HACCP 등록		■HACCP 적용비율 (식품/축산물) ■위해식품판매차단시 스템 설치 매장(누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수	■양식장 HACCP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소비자 참여· 소통 강화 (정보 제공)			■식품 위해정보 조치율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 수			■이력제 중점추진품목
먹는 물 관리				■상수도 보급률 ■깨끗한 물 확보 ■물 공급 안정지수 ■수질오염지표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깨끗한 물 확보 수준(수질등급달성) ■고도정수처리 시설 비율 ■감시물질 지정 항목	

자료: 연구진 작성.

2.2.3. 건강·영양

- 식생활교육, 건강·영양 관리·지원, 공공급식 등 건강·영양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건강·영양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담고 있는 주요 정부계획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하 ‘식생활기본계획’)(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영양관리기본계획’(보건복지부 소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식품안전계획’),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지속가능발전계획’(‘지속가능계획’, 환경부 소관) 등이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건강·영양 관련하여 식생활교육, 영양·건강 관리, 건강·영양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구축,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사업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음.
 - 식생활교육에 관한 정책·사업은 지속가능계획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이들 계획은 어린이 대상 식생활교육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밖에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전반에 대한 식생활교육이 제시되고 있음.
- 국민 영양·건강관리는 학교 과일간식지원 등 식품지원, 나트륨, 당류 등 건강위해요소 감소, 기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영양·건강 관리 및 이러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반 강화에 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정보제공은 건강·영양 관련한 홍보·정보를 제공하거나 확대·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제시함.

-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구축의 경우 농식품 바우처, 영양플러스사업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밖에 노인 취약계층 영양관리, 저소득층 아동 과일 제공, 다문화 가정 영양관리 등이 제시되고 있음.
-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어린이안전종합계획), 국산 및 지역산 식재료 사용(농발계획), 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영양관리(식품안전계획, 어린이안전종합계획) 등과 관련된 사업·정책을 주로 포함함.

<표 3-12> 건강·영양 관련 주요 정책·사업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영양관리 기본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식생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영양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대상 식생활교육 확대 - 식생활교육 표준교재 개발, 표준 콘텐츠 DB 구축 ■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대상 쌀 중심 식습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식습관 형성 - 밥상머리교육 통한 가족간 소통 활성화 - 바른식생활과 영양섭취 관련 지식 습득 ■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건강개선 및 성장발달 촉진 - 학교급식에 의한 식생활 실천지도 - 어린이집유치원 식생활교육 추진 - 대학생 주체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생활 실천 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추진 - 건강식생활 실천 참여 기회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식생활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교재 개발, 식생활 실천학교, 당류 저감 체험 교구 배포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교령자)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정 등), '건강 백세 영양관리 체험 교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 기반 강화 - 중고등학생 식품위생·영양교육 확대 ■ 어린이 참여 체험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식생활안전 교육·홍보 강화 - 어린이 식생활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실 활용 	
국민 영양·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영양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과일간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식품선택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 - 위해가능 영양소 섭취 저감화 ■ 개인 영양관리능력 향상 및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 서비스 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맞춤형 영양평가 관리도구 개발 및 보급 ■ 국민건강·영양 상태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영양조사 확대·개선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개선 - 지역사회 건강조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초·중·고등학교 비만예방 프로그램, 과일간식 지원) - 청소년(학교내 카페인 관리, 급식 관리) - 성인(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상담 및 과일바구니 사업 등 영양관리 지원 강화 ■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 학교 내 건강 식품 판매 유도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활성화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 당류,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섭취 균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영양정보제공 -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영양관리 기본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소비행태조사 개선 - 기타 영양문제 진단에 필요한 조사 개선 ■ 영양관리 근거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제개정 및 보급 - 식생활지침 제개정 및 보급 ■ 영양관리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양성분 국가 관리망 운영 및 영양성분 제공 - 기초영양DB 구축관리 - 국가표준식품성분 통합 DB 구축 및 활용 ■ 법·인력·재정적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제도 정비 - 영양관리 전문인력 양성 - 사업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 영양 관리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정보·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민관 연계·협력체계 구축 - 기초조사 연구 실시 -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 국제적 정보 교환 - R&D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있는 영양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영양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 성인 만성질환 예방 위한 중점 영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한 건강검진 사후 영양상담 서비스 사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식생활안전 지침 제정 - 업소 영양성분 표시 대상 확대 -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정보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량·저영양식품 표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영양관리 기본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제 도입 - 고카페인 함유 식품 색 상표시 정착 ■건강한 식생활 미디어 환 경조성 -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와 모니터링 확대 - 사전·사후 광고 관리 	
취약 계층 먹거리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 영양 개선 - 농식품 바우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수유부, 영유아 영 양관리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 굴·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접근성 강화 -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체계 강화 ■노인건강 위한 국가 영양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노인 취약계층 영양관 리 지원사업 ■지역사회 특화 영양사업 개발 및 운영 - 저소득층 이동 과일 제 공 및 영양교육 사업 운영 - 다문화 가정 영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 농식품 바우처 추진 - 학교급식 우수 지원 강화 - 영양플러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취약계층 식생활안 전교육 강화 - 다문화가족 등 식생활 안전 교육 실시 - 건강한 식생활 실천주간 지정·운영 등 캠페인 	
공공 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급식 품질 제고 -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확 대 및 안전성 강화(식 재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 학교급식지원센 터 계약재매 농가 안 전성 조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특화 영양사업 개발 및 운영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등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위한 위생관리 강화 - 식중독 발생 특성을 고 려한 원인별·대상별 맞춤형 홍보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영양관리 기본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 지역 농산물 사용 기반 마련(수의계약 제도 개선, 지역 농산물 우선사용 여건 마련) - 공공급식 운영기관 대상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관리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 안전급식 제공위한 급식소 맞춤형 정보 제공 - 부모 안심 급식관리 위한 쌍방향 모바일 앱 개발 및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영양수준 상향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급식 품질향상 지원체계 마련 - 감독 및 평가 환류시스템 강화 ■ 급식 수준 제고 위한 유관부처와의 협력 강화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요 지표

- 식생활교육 관련하여 식생활 만족도가 대표적으로 식생활교육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 지표로 활용됨. 이밖에 ‘식생활교육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19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들 지표 이외에 아침밥 결식률,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실천률, 교육 수혜율 등도 식생활교육 관련 성과지표로 먹거리 관련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음.
 - 식생활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함.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생활교육 정책의 주관부처로서 식생활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 정책·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19개 지표를 제시함.

- 영양·건강 관리 관련한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로는 지방, 나트륨, 당 등 특정 영양소 또는 과일·채소 등의 적정 섭취 인구 비율 또는 섭취량이 주로 활용됨. 이밖에 영양표시 이용 인구 비율, 아침 결식률 등도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공공급식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식품안전계획과 어린이안전종합계획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된 지표들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 센터 수 및 어린이 수혜율,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생 수 등이 활용됨.

- 정보제공 관련하여 칼로리 코디 앱을 통한 영양정보 제공 품목 수가 제시되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지표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19개 성과지표 중에서 홍보·정보·교류

부문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정도’,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초지식 갖고 있는 비중’은 정보 제공에 의한 궁극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분류할 수 있음.

<표 3-13>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19개 성과지표

영역	성과지표
가정	아침밥(식사) 먹기 실천율
	아침·저녁 가족동반식사횟수(일주일)
	식생활지침을 참고로 식생활을 하는 비율
학교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농림어업 체험을 경험한 학생비율
	청소년 과일 채소 1일 섭취량
지역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비율
	생활습관병 예방(치료)위해 식사 실천 비율
	시·도(시·군·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전국 시·군·구 민간(지역협의체) 결성
농업 · 환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율
	식재료의 국내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도
	먹을거리 제공자에게 감사하는 비율
전통 식문화	밥 중심 한국형 식사 비율
	김치를 직접 만들고 먹는 비중
	전통 식문화 체험·실천율
홍보·정보·교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정도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초지식 갖고 있는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참조.

<표 3-14> 건강·영양 관련 주요 지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영양관리 기본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식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만족도 ■ 대학생·성인 아침밥 결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만족도 (식생활교육에 관한 정부 대표 정책지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19개 성과지표는 별도표로 정리·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실천율 ■ 초등학교 식품안전·영양교육 수혜율 ■ 중고등학교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시 ■ 어린이 식생활안전체험관 설치·운영 근거마련 ■ 학교 및 유치원 등 텃밭가꾸기 확대 ■ 학교내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영양·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수준 지방 적정 섭취 인구 비율 ■ 나트륨 2,000mg/일 이하 섭취 인구 비율 ■ 적정 수준 당 섭취 인구 비율 ■ 과일·채소 500g/일 이상 섭취 인구 비율 ■ 가공식품 선택시 영양표시 이용 인구 비율 ■ 아침결식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 가공식품 당류 섭취열량 비중 ■ 식중독 환자수(명/십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식생활안전·영양수준 향상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업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일일 섭취량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로리 코드 앱 통한 영양정보 제공 품목수 	
공공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 및 어린이 수혜율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생 수 	

자료: 연구진 작성.

2.2.4. 환경·폐기

- 농식품 분야 환경·폐기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식품 생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환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환경·폐기 관련 정책·사업들을 담고 있는 주요 정부계획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이상 환경부 소관) 등이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환경·폐기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환경친화농업,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생산환경관리,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 폐기·순환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환경친화농업은 친환경농업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공익형 직불제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 및 풍력발전 시설 설립과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에 관한 사업을 포함함. 이밖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산림분야 목재펠릿 수급·유통에 관한 정책·사업을 제시함.
- 생물다양성 확보는 생물다양성 유지·증진과 지표종·향토종 보전·관리가 주요 내용이며, 생산환경 관리는 축사, 농업환경 및 연안·해양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온실가스감축 관련하여 농화학비료 사용 절감, 가축분뇨 처리 강화, 농어업

분야 화석연료 사용 축소,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됨.

- 기후변화 대응은 기상변화 예측 및 정보 제공(조기경보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업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시설, 품종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음.
- 폐기·순환관리는 지역 농업환경자원 관리 및 에너지화(축산 분뇨), 음식물쓰레기 배출 저감 및 에너지화 등에 대한 정책·사업을 주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3-15> 환경·폐기 관련 주요 정책·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환경 친화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제 공익적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 친환경농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반 구축, 저투입 농법 개발·보급, 인력 양성 - (유통)구조 개선, 판로 확대 - (소비)인증제도 개선, 소비자 신뢰와 가치인식 제고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개선 농업인 추진 활동 지원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시점사업) ■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쌀 재배 확대 및 질소 시비량 감축 등을 통한 품질 중심의 쌀 생산 체제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대상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품목군별 재배년도 및 소득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가 차등화 추진 - 권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용,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대 - 저투입 자원순환경 유기농업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관련 농가 경영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 영농형태양광 사업모델 개발 - 한국형 바이오메스 발전사업 검토 - 시설원예 분야 중심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및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력발전소 건설 지속 추진 - 양배수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 서남해안 방조제 유희부지 풍력발전기 설치 -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신품종 개발 - 바이오디젤용 유채품종 선발 및 안정 다수확 재배기술 확립 ■ 산림분야 목재펠릿 수급유통체계 정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신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펠릿 수급량 확보 - 전국 유통망 구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생물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 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생물자원,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 발굴 - 지표종·향토종(꽃가루 매개곤충 등) 보전·관리 ■ 환경친화적 농업·수산·산림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수산·산림분야 친환경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생물다양성이 높은 경작지 보전(다락논, 전통과수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 - 야생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기반 강화 -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및 위협요인 저감
생산 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사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고려 새로운 사육기준 마련 - 시설 기준 강화 - 가축사육업자 축사 및 가축관리 의무 부여 - 축산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 재해 대응 농업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유입 차단 등 농업용수 수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및 해양 생태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해양 서식처 보전·복원 -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보전 ■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정착 ■ 환경친화적 농업·수산·산림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정책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농업 온실가스 감축 인정 »환경보전활동시 가산 직불금 제공 -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 어업허가 관리 및 적정수준 수산자원량 유지 »TAC 제도 확대 »바다숲·바다목장 등 생태계 기반 통합자원관리 활성화 - 농업·수산·산림분야 친환경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어항 도입, 방류종묘인증제 확대,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함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해양환경모니터링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 연안·해양 보호구역 확대 - 해양수산생태계 건강성 유지·보전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어업허가관리 및 적정수준 수산자원량 유지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정책 확대 (TAC 확대/활성화)
온실 가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국가 감축 로드맵 농업: 5개 세부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 간단관계 면적 확대, 화학비료 사용 절감 -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및 양질조사료 보급 확대 - 농어업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통한 화석연료 사용 축소 - 지원제도 및 규제 도입 - 농업배출량 평가체계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 농어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용화기술 개발
기후 변화 (재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지도 등 선제적 재해대응 체계 구축 - 농가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 적응모델 개발·보급 - 기상정보, 위험정보, 영농기술정보 등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재해 대응 농업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 안전 영농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상 예측정보 생산, 재해발생 조기경보체계 구축 - 내재해형 첨단온실 신축 지원, 노후 온실 개보수 지원, 온난화 및 이상기상 대비 적응형 품종 개발·보급 - 기후변화 영향 5년마다 조사평가 및 공표 ■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R&D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재제/병충해 저항 품종 개발 - 신품종 육성, 열대야열대 작물 도입 - 고온저항성 가축유전자원 발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폐기·순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 농경지 양분 적정범위 기준 설정 - 경축순환 유기농업단지 육성 - 기업형 개별농가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 방류수질기준 강화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등 확충으로 20년까지 돼지분뇨 발생량의 50% 이상 처리 추진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산 ■ 폐자원 에너지화(음식물쓰레기자원화) ■ 자원순환형 지역공동체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을 거점으로 자원순환마을 조성(저탄소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분관리제 단계적 도입 - 농업환경지표 개발 - 최적영농기법 마련 -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시범사업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요 지표

- 환경친화농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며, 신재생에너지는 농업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규모가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생산환경관리는 수질 및 연안 등 오염 및 관리 수준, 온실가스 감축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기후변화 대응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이 성과지표로 활용됨. 이밖에 농식품분야 폐기·순환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지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율임.

<표 3-16> 환경·폐기 관련 주요 지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환경친화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화학비료 사용량 ■ 농약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규모(MW, 누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생물 다양성		■ 국가생물종 목록화수	■ 국가생물종 수
생산 환경리	■ 5년 평균 호소 수질기준 IV등급 초과 시설 수		■ 연안오염도 ■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비율 ■ 갯벌 면적 증감
온실 가스 감축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천톤CO2)
기후 변화 대응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
폐기 순환 관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율	

자료: 연구진 작성.

2.2.5. 식품산업³³

-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식품 생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주요 정부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식품산업진흥계획’(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이하 ‘수산업기본계획’)(해양수산부 소관) 등이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축산업 및 식품산업 부문에서의 산업 경쟁력 강화, 취창업, 인력양성 등과 주로 관련이 있음.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은 농축산업은 시설 스마트화·첨단화, 식품산업은 국산 식재료 사용, 첨단기술 적용, 우수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주로 추진됨.

³³ 식품산업은 농축산업을 포함한 먹거리 관련한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취창업은 농수축산업은 농지, 정착(안정)지원, 기술·경험 축적 기회 제공 등, 식품산업은 창업훈련 프로그램, 창업지원센터 활용(공간 제공) 등을 지원함. 인력육성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청년 등 직업교육과 비농업인력, 여성인력, 다문화가정 인력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인력 유입 등을 포함함.

<표 3-17> 식품산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쟁력 강화	농수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축사 보급 확대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농업 육성 - R&D, 빅데이터 등 혁신인프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 프로그램 구성·운영 - 생산현장 문제해결 맞춤형서비스 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정책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농공융합형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 지역연계형 식품중소기업 정책지원 우대 - 농협과 지역 내 식품중소기업간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산업 규모화 및 첨단화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외식기업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기업 구매보증보험제도 도입 - 가공용 품종 이용 활성화 협의회 운영 및 기업 연계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 - 지역별·분야별 우수 외식업 지구 발굴 ■ 농산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 고부가 소재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소재 산업화기술개발' 사업 추진 - 소재 탐색을 위한 국내외 기능성 원료 DB 구축 및 '기능성 원료 은행' 구축 검토 ■ 인프라 개편 및 창업·경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거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중소식품기업 대상 찾아가는 교육지원 - 우수농공융합형중소기업 바우처 지급을 통한 경영 지원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창업지원 LAB, 외식창업인규베이팅 통해 창업희망자 실습기회 제공 ■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유망 분야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농식품DB' 구축 및 관련 법 제정 - 민간의 고령친화식품 개발·투자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식품산업진흥법 제정 - 지역특성 반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확대 조성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확충 - 산지 가공시설 확충 - 마른김 제조공장 가공용수 정수 시설 지원 추진 ■ 수산식품 부가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중소 가공업체 발굴·지원 통해 고부가 간편식품 개발 및 상품화 촉진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취창업	농수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농 선발 및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안정자금 지원 - 농신보 우대보증 개선 - 임대농지 우선 공급 - 영농 기술과 경험 축적 기회 제공 ■ 전문경영체로 성장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활용능력 강화 - 농업법인 설립 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선정 가점 부여 ■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수립 의무화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스마트농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창업지원 Lab' 및 식품벤처센터 활용 - 의식분야 창업 희망 청년 시설·공간 제공 - 민간 연계 실습형·체험형 창업훈련 프로그램 확산 ■ 청년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인턴십 확대,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취업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분야 투자 펀드(투자조합) 결성하여 자본 조달 방식 다양화 - 정부에서 수산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자펀드를 결성, 성장가능성 있는 수산경영체에 투자하여 자금조달 지원 -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수산 연관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융자하여 우수기술 실용화 및 수출상품 개발 등 촉진 - 성장단계별 1:1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추진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창업 희망자, 농업인 등이 자유롭게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조성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재직자) ■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제공 및, 식품산업 기술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진입인력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지원센터 지속 운영 - 특성화교육 지원 지속을 통한 수산계 고교 졸업생 수산분야 취업률 제고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로 활용 수산분야 취업 촉진 - 다문화가정어업인 등 신규 어업인 대상 어촌정착 및 어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수산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 - 수산계대학시설 및 전문인력 풀 등 활용한 수산전문가 양성 과정 지속 추진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등 수산업경영인에게 어업 경영기반 마련 자금 지원 지속 - 신지식인 후계인력 양성 멘토로 활용
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혁신 성장 선도 융복합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농대·미래농고·영농창업 특성화대학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 - 청년 귀농 희망자 장기 실습교육 사업 도입 - 농·공대 협업 프로그램 확대로 비농업 분야 우수 인재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재직자) ■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제공 및, 식품산업 기술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진입인력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지원센터 지속 운영 - 특성화교육 지원 지속을 통한 수산계 고교 졸업생 수산분야 취업률 제고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로 활용 수산분야 취업 촉진 - 다문화가정어업인 등 신규 어업인 대상 어촌정착 및 어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수산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 - 수산계대학시설 및 전문인력 풀 등 활용한 수산전문가 양성 과정 지속 추진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등 수산업경영인에게 어업 경영기반 마련 자금 지원 지속 - 신지식인 후계인력 양성 멘토로 활용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요 지표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성과지표는 주로 스마트 축사, 스마트 팜 조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취창업의 경우 취업자(종사자) 수, 청년 일자리 창출 수 등을 활용함. 인력육성은 교육인원이 주요 지표임.

<표 3-18> 식품산업 관련 주요 지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경쟁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축사 보급 ■ 스마트팜 확대(시설/축산)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농식품 융합연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50억 원 이상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취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외식분야 취업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분야 종사자 수 ■ 식품·외식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경영인 ■ 수산계 고교 취업률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 어선 승선근무 예비역
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경영인 ■ 신지식인 선정

자료: 연구진 작성.

2.2.6. 지역·공동체

- 농식품 분야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은 농식품 생산·공급 및 농어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주요 정부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직거래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지역·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지역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활성화, 6차산업, 지역농업공동체 육성, 전통식문화, 도농상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역 푸드플랜(지역먹거리종합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 푸드플랜과 함께 농림축산식품에서 수행함.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매장 확대 지원, 학교급식 및 외식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 홍보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6차산업은 농어업·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를 의미하며, 경영지원, 주민(주체) 교육 등을 실시하며, 특화마을 조성을 추진함. 지역농업공동체 육성은 지역 사회적 농업 및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꾸러미 활성화 등을 포함함.
- 전통식문화 관련한 사업·정책은 농어업·농어촌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 있음. 농발계획은 전통식문화 우수성 확보, 수산업기본계획은 어촌 전통문화 계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밖에 ‘식생활교육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식생활 교육적 관점에서 전통식문화 계승·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도농상생은 농업·농촌체험교육을 포함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와 도시 농업 활성화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

<표 3-19>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지역·공동체 관련 사항

영역	세부과제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식생활 실천 확산 - 세대별 바른 식생활 실천으로 국민건강 증진 - 지역전문인력 양성 - 지역 푸드체인 주체들과 밀착형 교육 추진
농업과의 연계/ 환경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정비 - 어린이·청소년 농업체험 교육 활성화 - 식생활교육과 로컬푸드 운동 연계 추진 - 환경친화적 식생활교육 확산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문화 체험기회 확대 - 전통·향토음식 적극적 도입과 활용 - 전통음식과 요리방법에 대한 가치 제고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20> 지역·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사업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직거래기본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역 푸드플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수립 지역 내 순환체계 마련 관련 농림사업 일괄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먹거리 통합 관리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전국으로 확산 		
지역 생산 체계 구축	-	-	-	-	-
로컬푸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조직 육성 등 유통체계 혁신 직거래, 소비자 판매채널 확대 등 유통경로 다양화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 지원 및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외 직거래 장터, 인터넷몰 등으로 인증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푸드 직매장 경영안정 및 활성화 안정적 운영 위한 단계별 지원 대형 소비자 공략 위한 광역형 직매장 설치 지원 직거래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산업화 유도 위한 다양한 형태 직매장 설치·지원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가공 활성화 및 외식연계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 이용 확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 활성화, 직거래 서포터즈 운영 명절 등 소비 집중 시기 온오프라인 특관행사 개최 공공기관 대상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확대 지역특산물 연계 로컬푸드형 직매장 확대 타 협동조합(농협, 생협 등)과 연계사업으로 수산물 전문매장(송인숍) 확대 수산물 온라인 사이버 직매장 일원화(공영홈쇼핑 활성화) aT 농산물 직거래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 직거래 촉진 협력체계 구축 		
6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경제활동 다각화 (융복합산업) 개별 산업주체 육성, 지역단위 발전체계 구축·확산 (관광) 지역·음식·숙박·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 6차산업화 추진 어촌산업 경영지원 주민 교육 확대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어촌어항 통합개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6차산업 발굴·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직거래기본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운영 주체 역량 제고, 농촌관광등급제 개편으로 품질관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촌 여메니티 자원 보존·개선 - 브랜드 전략 수립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특화프로그램 개발 - 체험마을 내실화(등급제 운영) - 체험시설 현대화 - 체험마을 세계화 	
지역농업 공동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조직 육성 - 모델 연구 및 사회적농업법 제정 추진 ■ 생산조직 육성 등 유통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마케팅조직 지속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CSA 모델 발굴 ■ 꾸러미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러미 운영·관리시스템 보급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어업인 유통기반 조성 - 어촌계 등의 공동판매 사업을 지원 - 공동체 등에 대한 포장재 지원 검토 	
지역 간 제휴확대					
전통 식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문화 우수성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진흥 법적 근거 마련 - 한식전통주 해설사 도입 - 한국술 연구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전통문화 계승 	
도농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단체 농촌사회공헌 활동과 농촌 재능나눔 캠페인 연계 - 농업·농촌 체험·교류 기회 확대 -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 확대 ■ 도시농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텃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도시농업단체와 농업인단체 협의체 활성화 - 도시농업법 개정 추진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연계 어린이 식생활체험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과정을 도입하여 농어촌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확대 -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중 도농교류 프로그램 확대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요 지표

-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추진 정책·사업의 성과와 비교적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예컨대 지역 푸드플랜의 경우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 로컬푸드 활성화는 직거래 규모, 6차산업은 6차산업지구 수, 농촌관광객 수, 어가 소득 등을 지표로 활용함. 지역농업 공동체 육성의 경우 사회적농업 실천 농장 육성, 도농상생은 도시농업 참여자, 농어촌 체험과정 도입 학교 및 학생 수 등이 중 지표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경우 전통식문화 체험·실천율이 활용되며, 해당 지표는 설문조사(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지표임.

<표 3-21> 지역·공동체 관련 주요 지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지역 푸드플랜	■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			
지역 생산 체계 구축				
로컬푸드 활성화	■ 직거래규모		■ 수산물 직거래 비중 ■ 공영홈쇼핑 매출액	
6차산업	■ 지역단위 6차산업 네트워크/6차산업화지구 ■ 농촌관광객수		■ 도시근로자 대비 어가소득	■ 6차 산업화지구 수
지역농업 공동체 육성	■ 사회적농업 실천 농장 육성			
지역 간 제휴확대				
전통 식문화				
도농상생	■ 농촌재능나눔 참여시간 ■ 도시농업 참여자 수	■ ‘농어촌체험과정’ 도입 초·중·고 학교 수 및 학생 수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22>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19개 성과지표

영역	성과지표
지역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비율
	생활습관병 예방(치료)위해 식사 실천 비율
	시·도(시·군·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전국 시·군·구 민간(지역협의체) 결성
농업 · 환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율
	식재료의 국내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도
	먹을거리 제공자에게 감사하는 비율
전통 식문화	밥 중심 한국형 식사 비율
	김치를 직접 만들고 먹는 비중
	전통 식문화 체험·실천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참조.

제 4 장

국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이 장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가치, 기존의 국가 먹거리 정책과 향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주요 조사결과는 기존 연구의 생산자, 전문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함.³⁴

1. 먹거리 가치와 기존 정책 인식과 평가

- 일반국민의 경우 전반적으로 농업·농촌 정책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평균 3.44점, 5점 척도 기준) 보다는 일상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3.83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 실제로 개별 국민에 대한 실제 영향도 농업·농촌 정책 및 관련 문제 보다는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가 큰 것으로 인식하였음<표 4-2>.
 - 농업·농촌 정책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은 50대 이상에서 평균 3.60점

³⁴ 전국적으로 일반국민 1,000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국민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황윤재 외(2018)의 일환으로 추진된 생산자 150명, 전문가 7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함.

(5점 척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3.92점), 동지역(3.87점),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개별 국민에 대한 영향의 경우 농업·농촌 정책 및 관련 문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3.86점)에서,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는 여성(4.22점), 학력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커진다고 인식하였음.

<표 4-1> 농업·농촌 및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농업·농촌 정책 및 관련 문제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
전체(일반국민)		3.44	3.83
연령	19세~29세	3.08	3.55
	30대	3.29	3.71
	40대	3.49	3.81
	50대	3.62	4.03
	60대	3.74	4.10
성별	남성	3.42	3.75
	여성	3.45	3.92
거주지역(1)	수도권	3.38	3.81
	충청권	3.44	3.89
	호남권	3.52	3.92
	대경권	3.53	3.84
	동남권	3.49	3.83
거주지역(2)	읍/면	3.44	3.75
	동	3.43	3.87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37	3.74
	200~300만 원 미만	3.45	3.75
	300~400만 원 미만	3.35	3.77
	400~500만 원 미만	3.55	3.91
	500~600만 원 미만	3.52	3.98
	600~800만 원 미만	3.22	3.72
	800만 원 이상	3.58	4.01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47	3.83
	대학 이상	3.42	3.82
	대학원 이상	3.51	3.95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2> 농업·농촌 및 먹거리 문제의 개별 국민에 대한 영향(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농업·농촌 정책 및 관련 문제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
전체(일반국민)	3.76	4.06
연령	19세~29세	4.01
	30대	3.98
	40대	4.02
	50대	4.09
	60대	4.26
성별	남성	3.91
	여성	4.22
거주지역(1)	수도권	4.08
	충청권	4.10
	호남권	4.08
	대경권	4.09
	동남권	4.00
	강원권	3.90
거주지역(2)	읍/면	3.97
	동	4.10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02
	200~300만 원 미만	4.03
	300~400만 원 미만	4.01
	400~500만 원 미만	4.11
	500~600만 원 미만	4.13
	600~800만 원 미만	4.07
	800만 원 이상	4.08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96
	대학 이상	4.08
	대학원 이상	4.09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일반국민들은 농업·농촌 정책과 먹거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4-3>.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대체로 3.00점(5점 척도 기준) 내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2.99점)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3.05점)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음.

<표 4-3> 농업·농촌 및 먹거리 정책 전반 만족도(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농업·농촌 정책	먹거리 정책
전체(일반국민)		2.99	3.05
연령	19세~29세	2.95	3.01
	30대	2.91	2.95
	40대	3.02	3.05
	50대	3.08	3.11
	60대	2.99	3.10
성별	남성	2.92	3.00
	여성	3.07	3.09
거주지역(1)	수도권	2.96	2.99
	충청권	2.92	2.99
	호남권	3.12	3.24
	대경권	3.11	3.20
	동남권	3.02	3.06
	강원권	2.90	2.86
거주지역(2)	읍/면	2.91	2.96
	동	3.03	3.08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92	2.94
	200~300만 원 미만	2.97	2.99
	300~400만 원 미만	2.98	3.11
	400~500만 원 미만	3.02	3.12
	500~600만 원 미만	3.02	3.07
	600~800만 원 미만	3.02	3.05
	800만 원 이상	3.01	2.97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03	3.13
	대학 이상	3.00	3.06
	대학원 이상	2.92	2.84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다양한 먹거리 정책 이슈 중에서 일반국민들은 식품안전성(52.6%)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26.0%), 농산물수급(14.6%), 로컬푸드(11.5%), 음식물쓰레기(식품낭비)(10.2%)순으로 비교적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남<표 4-4>. 또한 향후에도 식품안전성(41.1%), 기후변화(31.8%)의 중요성이 특히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농산물수급(14.1%), 로컬푸드(10.3%)에 대한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함<표 4-5>.

<표 4-4> 먹거리 정책 분야 이슈 관심도(일반국민)

단위: %

구분	기후변화	식품 안전성	국민 건강·영양	일자리 (인력)	취창업	식품·외식 산업	취약계층 먹거리	농산물 수급	공공급식	음식물 쓰레기	식량자급	로컬푸드	농식품 수출	4차산업	도농교류	식생활·영양교육	식문화 인식
전체(일반국민)	26.0	52.6	8.5	8.8	3.2	2.9	3.1	14.6	3.9	10.2	4.2	11.5	3.3	7.0	0.9	2.6	3.6
연령	19세~29세	5.1	7.6	1.7	2.2	1.0	1.0	1.9	0.8	3.1	0.8	2.1	0.9	2.1	0.0	0.6	0.8
	30대	5.8	10.0	2.5	1.8	0.8	0.6	2.1	0.4	1.6	0.7	2.8	0.4	1.4	0.1	0.4	0.8
	40대	5.8	12.8	1.5	1.8	0.4	0.8	3.5	1.3	1.9	0.9	3.0	1.1	1.4	0.3	0.6	0.5
	50대	5.8	13.3	1.8	1.9	0.6	0.3	3.5	0.8	2.3	0.7	2.6	0.5	1.4	0.2	0.7	0.7
	60대	3.5	9.0	1.0	1.1	0.5	0.2	3.8	0.6	1.3	1.1	1.0	0.4	0.7	0.4	0.3	0.7
성별	남성	13.1	24.4	4.5	4.6	2.0	1.6	8.7	2.7	4.3	2.9	4.8	1.9	4.2	0.4	1.4	1.6
	여성	12.9	28.2	4.0	4.2	1.2	1.4	6.0	1.2	5.8	1.3	6.7	1.4	2.8	0.6	1.1	2.0
거주 지역(1)	수도권	13.6	26.3	4.6	4.2	1.7	1.6	7.1	2.0	5.4	2.5	5.9	1.3	3.5	0.4	1.3	2.1
	충청권	3.5	5.3	0.5	0.7	0.1	0.2	1.2	0.3	1.1	0.6	1.2	0.2	0.8	0.1	0.3	0.4
	호남권	2.6	5.4	0.9	1.2	0.2	0.2	1.5	0.2	1.3	0.1	1.6	0.7	0.5	0.1	0.3	0.5
	대경권	2.0	5.2	1.0	0.9	0.4	0.4	1.9	0.4	1.1	0.3	1.0	0.9	0.4	0.1	0.3	0.2
	동남권	3.9	8.6	1.1	1.5	0.6	0.4	2.6	0.9	1.1	0.5	1.4	0.3	1.7	0.2	0.4	0.4
거주 지역(2)	강원권	0.4	1.9	0.3	0.3	0.1	0.2	0.3	0.1	0.1	0.2	0.4	0.0	0.2	0.1	0.0	0.1
	읍/면	6.9	15.2	2.6	3.2	1.3	0.8	4.5	1.1	2.9	0.9	4.5	1.0	2.6	0.1	0.5	1.2
월 가구소득	동	19.1	37.4	6.0	5.7	1.9	2.2	10.1	2.8	7.3	3.3	7.0	2.3	4.4	0.8	2.0	2.4
	200만 원 미만	3.2	5.2	0.8	1.3	0.4	0.3	2.2	0.2	1.0	0.5	1.2	0.5	1.1	0.1	0.2	0.6
	200~300만 원 미만	4.8	9.4	1.7	1.4	0.8	0.7	2.3	0.6	1.2	0.8	1.9	0.8	0.8	0.3	0.5	0.8
	300~400만 원 미만	4.5	9.4	0.9	1.6	0.6	0.7	2.7	0.6	2.2	0.8	1.8	0.8	0.9	0.1	0.4	0.8
	400~500만 원 미만	4.8	10.5	1.8	1.6	0.3	0.6	2.8	1.0	2.0	0.7	2.4	0.5	1.3	0.1	0.3	0.5
	500~600만 원 미만	3.0	6.8	1.2	1.3	0.5	0.2	1.7	0.7	1.4	0.6	1.6	0.3	0.4	0.2	0.5	0.5
	600~800만 원 미만	2.5	6.0	1.5	0.8	0.4	0.3	1.7	0.7	1.4	0.4	1.8	0.4	1.6	0.0	0.3	0.1
800만 원 이상	3.2	5.3	0.5	0.9	0.2	0.1	0.3	1.3	0.2	1.0	0.4	0.8	0.1	0.8	0.1	0.5	0.3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7	9.6	1.0	2.0	0.6	0.3	2.8	0.5	1.6	0.6	1.7	0.6	0.6	0.0	0.5	0.9
	대학 이상	18.7	37.3	6.7	5.9	2.2	2.4	10.2	2.8	7.6	3.1	8.8	2.5	5.5	0.8	1.7	2.2
	대학원 이상	2.6	5.8	0.8	1.0	0.4	0.3	1.7	0.5	1.0	0.6	1.1	0.2	0.9	0.1	0.3	0.4

주1) 순위별 응답에 가중치한 결과임(1순위 3, 2순위 2, 3순위 1).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5> 먹거리 정책 분야 향후 중요성 증가 이슈 평가(일반국민)

단위: %

구분	기후변화	식품 안전성	국민 건강·영양	일자리 (인력)	취창업	식품·외식 산업	취약계층 먹거리	농산물 수급	공공급식	음식물 쓰레기	식량자급	로컬푸드	농식품 수출	4차산업	도농교류	식생활·영양교육	식문화 인식	
전체(일반국민)	31.8	41.1	8.7	9.0	3.6	2.9	3.6	14.1	5.0	9.1	7.1	10.3	3.4	8.8	1.0	2.7	4.5	
연령	19세~29세	5.2	5.8	1.6	2.2	0.6	0.8	1.1	2.7	1.3	2.5	1.2	2.3	0.9	2.2	0.2	0.8	1.2
	30대	7.0	7.7	1.7	1.8	0.6	0.5	0.9	1.9	1.3	1.8	1.7	2.3	0.6	1.4	0.1	0.5	1.1
	40대	8.0	10.1	1.7	1.5	0.7	1.2	0.6	3.1	0.9	2.4	1.6	2.4	1.0	1.4	0.2	0.6	0.7
	50대	7.7	10.5	2.1	2.0	1.0	0.3	0.7	3.6	0.8	1.5	1.8	1.9	0.6	1.9	0.2	0.5	0.9
	60대	3.8	7.1	1.7	1.5	0.7	0.1	0.2	2.8	0.8	1.0	0.9	1.5	0.4	1.8	0.3	0.4	0.6
성별	남성	15.0	19.4	5.0	5.1	2.0	1.6	1.9	8.1	2.7	4.6	3.3	5.0	1.7	5.0	0.6	1.4	2.5
	여성	16.8	21.8	3.7	3.9	1.6	1.3	1.7	6.0	2.3	4.6	3.9	5.4	1.8	3.8	0.4	1.3	2.0
거주 지역(1)	수도권	17.0	20.6	4.7	4.7	1.9	1.5	1.7	6.7	2.6	5.0	3.8	5.5	1.6	4.0	0.3	1.2	2.3
	충청권	3.7	4.5	0.8	0.8	0.3	0.4	0.4	1.4	0.5	0.6	0.7	1.0	0.4	0.7	0.1	0.2	0.4
	호남권	3.6	4.6	0.7	1.0	0.3	0.4	0.3	1.5	0.4	0.9	0.7	1.1	0.4	1.1	0.1	0.3	0.4
	대경권	2.7	3.5	1.0	1.0	0.5	0.2	0.2	1.7	0.8	0.7	0.5	0.9	0.3	1.3	0.1	0.4	0.8
	동남권	4.3	6.8	1.4	1.4	0.5	0.4	0.8	2.3	0.6	1.5	1.2	1.5	0.5	1.5	0.5	0.6	0.6
거주 지역(2)	강원권	0.6	1.2	0.2	0.2	0.2	0.1	0.1	0.5	0.1	0.5	0.3	0.4	0.1	0.3	0.0	0.1	0.1
	읍/면	9.9	11.9	2.0	2.2	1.1	1.1	1.4	4.1	1.4	2.6	2.7	3.1	1.4	2.4	0.4	0.9	1.5
월 가구 소득	동	21.9	29.2	6.7	6.8	2.5	1.8	2.1	10.0	3.6	6.5	4.4	7.2	2.1	6.4	0.6	1.8	3.0
	200만 원 미만	3.6	4.1	1.0	1.2	0.5	0.5	0.7	1.7	0.7	0.8	0.9	1.0	0.5	1.2	0.0	0.4	0.7
	200~300만 원 미만	5.5	7.2	1.8	1.7	0.7	0.6	0.6	2.6	1.0	1.5	0.9	1.4	0.6	1.8	0.2	0.4	0.7
	300~400만 원 미만	5.6	7.3	1.2	1.6	0.7	0.5	0.6	2.8	1.0	1.6	1.3	1.6	0.6	1.3	0.2	0.4	1.0
	400~500만 원 미만	5.8	8.6	1.5	1.5	0.6	0.6	0.7	2.3	0.9	1.8	1.4	2.4	0.7	1.5	0.2	0.4	0.8
	500~600만 원 미만	3.8	5.4	1.3	1.1	0.4	0.2	0.4	1.7	0.5	1.3	0.9	1.5	0.5	1.3	0.0	0.3	0.4
	600~800만 원 미만	4.0	4.8	1.0	1.0	0.5	0.3	0.5	1.5	0.5	1.0	1.1	1.4	0.4	0.9	0.2	0.4	0.7
800만 원 이상	3.5	3.8	0.9	0.8	0.4	0.1	0.1	1.5	0.4	1.0	0.7	1.0	0.1	0.9	0.2	0.4	0.2	
학력 수준	고졸 이하	5.6	7.1	1.4	1.6	0.7	0.3	0.5	2.8	1.0	1.2	1.3	1.7	0.7	1.7	0.2	0.4	0.5
	대학 이상	22.4	29.5	6.4	6.4	2.5	2.2	2.9	9.9	3.4	6.9	5.2	7.7	2.4	6.2	0.8	2.1	3.6
	대학원 이상	3.8	4.5	1.0	1.0	0.4	0.3	0.2	1.4	0.5	1.1	0.6	0.9	0.4	0.9	0.0	0.2	0.4

주1) 순위별 응답에 가중치한 결과임(1순위 3, 2순위 2, 3순위 1).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일반국민들은 정부 먹거리 정책의 가장 주요한 목적을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29.9%)인 것으로 평가함. 다음으로 고품질 안전·건강 먹거리 공급(16.2%), 농식품의 합리적 가격 유지(15.1%) 순으로 주요한 목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6>.
 - 50대(38.3%),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먹거리 정책의 주요한 목적으로 평가함.
 -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은 19~29세(12.3%), 읍/면 지역(7.0%)에서 주로 먹거리 정책의 주요 목적인 것으로 인식함.
 - 농식품의 합리적 가격 유지는 19~29세(17.9%), 남성(17.9%), 읍/면 지역(17.3%), 고졸 이하(20.5%)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함.
 - 안정적 식량공급은 여성(9.6%), 동 지역(8.9%), 월 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요하게 평가함.
 -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의 경우 남성(18.3%), 학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주요한 목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음.
 - 환경보호/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40대(11.4%), 여성(11.4%), 월 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13.5%)에서 상대적으로 먹거리 정책의 주요한 목적인 것으로 평가함.
 - 고품질 안전·건강 먹거리 공급의 경우 40대(20.6%), 여성(18.9%), 동 지역(16.9%), 월 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19.8%)에서 상대적으로 먹거리 정책의 주요한 목적으로 인식함.

<표 4-6> 정부 먹거리 정책의 주요 목적 평가(일반국민)

단위: %

구분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경제(산업) 성장(발전) 일자리 창출	농식품 합리적 가격 유지	안정적 식량공급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공급)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안전 건강 먹거리 공급	
전체(일반국민)	29.9	6.5	15.1	8.3	14.8	9.2	16.2	
연령	19세~29세	22.6	12.3	17.9	10.8	14.9	7.7	13.8
	30대	31.6	5.1	15.3	6.6	14.8	10.7	15.8
	40대	27.6	4.8	14.0	6.1	15.4	11.4	20.6
	50대	38.3	6.2	14.5	7.9	15.0	7.5	10.6
	60대	27.9	3.9	13.6	11.0	13.6	8.4	21.4
성별	남성	28.9	7.1	17.9	7.1	18.3	7.1	13.6
	여성	30.9	5.9	12.2	9.6	11.2	11.4	18.9
거주 지역(1)	수도권	27.5	7.5	14.3	7.9	14.5	10.4	17.9
	충청권	29.7	5.9	14.9	7.9	16.8	9.9	14.9
	호남권	38.7	6.6	19.8	5.7	9.4	3.8	16.0
	대경권	29.3	8.1	16.2	8.1	17.2	7.1	14.1
	동남권	34.6	3.8	14.1	12.2	14.7	9.0	11.5
	강원권	17.2	0.0	13.8	6.9	24.1	13.8	24.1
거주 지역(2)	읍/면	29.7	7.0	17.3	7.0	13.3	11.0	14.7
	동	30.0	6.3	14.1	8.9	15.4	8.4	16.9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33.6	7.8	15.5	8.6	13.8	6.9	13.8
	200~300만 원 미만	31.4	9.7	13.1	8.6	10.3	8.6	18.3
	300~400만 원 미만	27.8	2.8	19.9	4.5	18.8	10.8	15.3
	400~500만 원 미만	28.9	5.8	14.7	8.4	15.3	8.9	17.9
	500~600만 원 미만	29.4	11.9	13.5	4.8	14.3	9.5	16.7
	600~800만 원 미만	29.8	5.0	14.0	14.0	19.8	6.6	10.7
	800만 원 이상	29.2	2.1	13.5	11.5	10.4	13.5	19.8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1.0	7.6	20.5	7.0	12.3	8.2	13.5
	대학 이상	30.2	6.2	13.8	8.4	14.8	9.4	17.2
	대학원 이상	26.4	6.6	15.1	9.4	18.9	9.4	14.2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일반국민의 경우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2.91점, 5점 척도 기준), 특히 환경·폐기(2.59점) 관련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7>.

- 30대(2.85점),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대(2.80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책 충분성을 낮게 평가함.

<표 4-7> 정부 먹거리 정책 충분성 평가(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식량안보 (공급)	식품안전· 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 공동체	평균	
전체(일반국민)	2.98	2.92	3.02	2.97	2.59	2.96	2.91	
연령	19세~29세	3.00	3.10	3.08	2.99	2.64	2.94	2.96
	30대	2.99	2.86	2.94	2.87	2.49	2.92	2.85
	40대	2.96	2.81	3.07	3.00	2.60	2.96	2.90
	50대	2.96	2.95	3.07	3.01	2.68	3.02	2.95
	60대	2.97	2.85	2.92	2.97	2.53	2.94	2.86
성별	남성	2.94	2.96	3.06	2.97	2.63	2.91	2.91
	여성	3.02	2.87	2.99	2.97	2.56	3.01	2.90
거주 지역(1)	수도권	2.92	2.87	2.98	2.94	2.51	2.90	2.85
	충청권	2.89	2.86	2.94	2.93	2.47	2.89	2.83
	호남권	3.15	2.95	3.11	3.07	2.79	3.17	3.04
	대경권	3.08	3.01	3.13	3.04	2.82	3.08	3.03
	동남권	3.04	3.03	3.08	2.99	2.67	2.95	2.96
	강원권	2.97	2.79	3.00	3.03	2.59	3.03	2.90
거주 지역(2)	읍/면	2.94	2.88	2.99	2.99	2.57	2.99	2.90
	동	2.99	2.93	3.03	2.96	2.60	2.94	2.91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2.90	2.83	2.89	2.99	2.65	2.91	2.86
	200~300만 원 미만	3.03	2.95	2.99	3.02	2.70	3.05	2.96
	300~400만 원 미만	2.88	2.77	2.96	2.92	2.41	2.88	2.80
	400~500만 원 미만	3.05	3.05	3.08	2.99	2.69	2.98	2.98
	500~600만 원 미만	2.98	2.93	3.05	2.92	2.58	2.98	2.90
	600~800만 원 미만	3.06	2.99	3.12	2.97	2.72	3.06	2.99
	800만 원 이상	2.91	2.82	3.07	2.99	2.31	2.82	2.82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00	2.86	2.89	2.95	2.57	2.95	2.87
	대학 이상	2.99	2.93	3.05	2.98	2.61	2.98	2.92
	대학원 이상	2.86	2.87	3.01	2.95	2.51	2.83	2.84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일반국민의 경우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였음(3.81 점, 5점 척도 기준)<표 4-8>. 특히 환경·폐기(2.59점) 관련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3.89점), 동 지역(3.83점)에서 먹거리 정책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음.

<표 4-8> 정부 먹거리 정책 중요성 평가(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식량안보 (공급)	식품안전· 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 공동체	평균
전체(일반국민)		3.85	4.08	3.85	3.65	3.89	3.56	3.81
연령	19세~29세	3.83	4.04	3.89	3.64	3.88	3.59	3.81
	30대	3.63	3.93	3.73	3.55	3.79	3.45	3.68
	40대	3.89	4.13	3.84	3.65	3.92	3.55	3.83
	50대	3.88	4.08	3.83	3.67	3.89	3.56	3.82
	60대	4.05	4.24	3.99	3.78	3.97	3.69	3.95
성별	남성	3.85	3.98	3.78	3.59	3.79	3.45	3.74
	여성	3.86	4.18	3.92	3.71	3.98	3.67	3.89
거주 지역(1)	수도권	3.84	4.09	3.88	3.68	3.88	3.56	3.82
	충청권	3.91	4.06	3.87	3.65	3.96	3.51	3.83
	호남권	3.80	3.93	3.82	3.71	3.84	3.62	3.79
	대경권	3.79	4.03	3.69	3.60	3.81	3.46	3.73
	동남권	3.90	4.17	3.88	3.60	3.92	3.64	3.85
거주 지역(2)	강원권	3.90	4.21	3.69	3.52	3.97	3.52	3.80
	읍/면	3.84	4.05	3.79	3.58	3.83	3.54	3.77
	동	3.86	4.09	3.88	3.68	3.91	3.57	3.83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3.77	3.95	3.81	3.63	3.81	3.48
	200~300만 원 미만	3.82	4.08	3.85	3.60	3.82	3.53	3.78
	300~400만 원 미만	3.86	4.15	3.89	3.67	3.95	3.58	3.85
	400~500만 원 미만	3.91	4.06	3.78	3.67	3.94	3.60	3.83
	500~600만 원 미만	3.93	4.14	3.94	3.69	3.94	3.67	3.88
	600~800만 원 미만	3.79	4.07	3.77	3.65	3.89	3.50	3.78
	800만 원 이상	3.86	4.06	3.95	3.66	3.82	3.57	3.82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89	4.04	3.82	3.68	3.90	3.57	3.82
	대학 이상	3.84	4.07	3.84	3.63	3.86	3.55	3.80
	대학원 이상	3.89	4.20	3.96	3.80	4.03	3.60	3.91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 정책 충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생산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2.85점, 5점 척도 기준), 정책 중요성은 전문가(4.20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함<표 4-9>.

- 일반국민, 생산자, 전문가 모두 정책 충분성의 경우 환경·폐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정책 중요성은 일반국민은 식량안보·품질(4.08점), 생산자는 식량안보(4.43점), 전문가는 식량안보(4.40점)와 식품안전·품질(4.39점), 건강·영양(4.34점)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먹거리 관련 정책의 충분성과 중요성(그룹별 비교)

단위: 점

구분		식량안보 (공급)	식품안전· 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 공동체	평균
정책 충분성	일반국민	2.98	2.92	3.02	2.97	2.59	2.96	2.91
	생산자	2.61	3.15	3.11	2.75	2.43	2.70	2.79
	전문가	2.76	3.04	2.81	2.94	2.40	3.13	2.85
정책 중요성	일반국민	3.85	4.08	3.85	3.65	3.89	3.56	3.81
	생산자	4.43	4.19	4.17	3.94	3.99	3.81	4.09
	전문가	4.40	4.39	4.34	3.89	4.13	4.06	4.2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현재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다부처로 분산되어 먹거리 관련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2.65점, 5점 척도 기준)<평균 4-10>.

- 특히 40대(2.43점), 남성(2.51점)에서 낮게 평가하였음.

<표 4-10> 다부처 체계 먹거리 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단위: %, 점

구분		비중(%)			평균 (5점 척도)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함	
전체(일반국민)		47.0	27.9	25.1	2.65
연령	19세~29세	24.6	35.9	39.5	3.10
	30대	45.4	30.1	24.5	2.70
	40대	56.6	23.7	19.7	2.43
	50대	51.1	28.2	20.7	2.53
	60대	57.1	20.8	22.1	2.51
성별	남성	53.5	24.0	22.4	2.51
	여성	40.2	31.9	27.8	2.79
거주지역(1)	수도권	47.9	25.7	26.3	2.65
	충청권	54.5	25.7	19.8	2.48
	호남권	40.6	26.4	33.0	2.86
	대경권	39.4	35.4	25.3	2.73
	동남권	46.2	33.3	20.5	2.61
	강원권	58.6	24.1	17.2	2.38
거주지역(2)	읍/면	47.0	30.7	22.3	2.58
	동	47.0	26.7	26.3	2.68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1.4	35.3	23.3	2.73
	200~300만 원 미만	48.6	25.7	25.7	2.64
	300~400만 원 미만	48.9	25.6	25.6	2.60
	400~500만 원 미만	45.8	27.4	26.8	2.68
	500~600만 원 미만	50.8	27.8	21.4	2.55
	600~800만 원 미만	43.8	28.1	28.1	2.71
	800만 원 이상	49.0	28.1	22.9	2.64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6.2	30.4	23.4	2.63
	대학 이상	45.5	28.2	26.3	2.68
	대학원 이상	58.5	21.7	19.8	2.44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그룹별로 전문가들이 다부처 분산 먹거리 정책 수립·추진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1.80점, 5점 척도 기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산자(2.19점), 일반국민(2.65점) 순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표 4-11>.

<표 4-11> 다부처 체계 먹거리 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인식(그룹별 비교)

단위: 점

구분	비중(%)			평균 (5점 척도)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함	
일반국민	47.0	27.9	25.1	2.65
생산자	67.3	16.0	16.6	2.19
전문가	84.3	8.6	7.1	1.8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일반국민들은 기존의 먹거리 정책에서 소비자, 생산자, 식품산업적 관점이 다소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인식은 40대(2.68점, 5점 척도 기준), 남성(2.78점), 읍/면 지역(2.75점), 강원권(2.59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12>.

<표 4-12> 먹거리 정책에서 소비자·생산자·식품산업 관점 균형 있는 반영 수준 평가(일반국민)

단위: %, 점

구분		비중(%)			평균 (5점 척도)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리함	
전체(일반국민)		34.1	45.5	20.4	2.82
연령	19세~29세	20.5	50.8	28.7	3.08
	30대	37.2	41.8	20.9	2.81
	40대	36.4	50.4	13.2	2.68
	50대	36.1	43.6	20.3	2.80
	60대	40.9	39.0	20.1	2.73
성별	남성	36.6	42.5	20.9	2.78
	여성	31.5	48.6	19.9	2.85
거주지역(1)	수도권	36.5	43.4	20.0	2.78
	충청권	39.6	40.6	19.8	2.75
	호남권	21.7	52.8	25.5	3.05
	대경권	29.3	50.5	20.2	2.85
	동남권	31.4	50.0	18.6	2.85
	강원권	48.3	31.0	20.7	2.59
거주지역(2)	읍/면	34.0	49.3	16.7	2.75
	동	34.1	43.9	22.0	2.84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9.3	54.3	16.4	2.84
	200~300만 원 미만	32.6	45.7	21.7	2.89
	300~400만 원 미만	37.5	43.2	19.3	2.76
	400~500만 원 미만	35.8	43.2	21.1	2.78
	500~600만 원 미만	35.7	46.8	17.5	2.77
	600~800만 원 미만	32.2	44.6	23.1	2.88
	800만 원 이상	33.3	42.7	24.0	2.81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2.7	49.1	18.1	2.80
	대학 이상	32.9	46.9	20.2	2.83
	대학원 이상	44.3	30.2	25.5	2.74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일반국민들은 소비자, 생산자, 식품산업적 관점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13>.
 - 소비자 관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충청권(2.53점) 또는 강원권(2.55점), 저소득층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

- 생산자 관점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읍/면 지역(2.69점),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 또한 식품산업적 관점은 남성(2.88점)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3> 먹거리 정책에서 소비자·생산자·식품산업적 관점별 반영 수준 평가(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소비자 관점	생산자 관점	식품산업적 관점	
전체(일반국민)	2.73	2.76	2.93	
연령	19세~29세	2.82	2.90	3.12
	30대	2.76	2.81	2.93
	40대	2.69	2.62	2.85
	50대	2.69	2.79	2.96
	60대	2.67	2.65	2.79
성별	남성	2.70	2.75	2.88
	여성	2.75	2.76	2.99
거주지역(1)	수도권	2.70	2.72	2.91
	충청권	2.53	2.70	2.82
	호남권	2.80	2.79	3.03
	대경권	2.96	3.00	2.98
	동남권	2.76	2.73	3.03
	강원권	2.55	2.72	2.79
거주지역(2)	읍/면	2.72	2.69	2.93
	동	2.73	2.78	2.94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1	2.58	2.87
	200~300만 원 미만	2.81	2.84	3.00
	300~400만 원 미만	2.66	2.72	2.88
	400~500만 원 미만	2.77	2.80	2.98
	500~600만 원 미만	2.71	2.75	2.90
	600~800만 원 미만	2.79	2.81	2.95
	800만 원 이상	2.68	2.74	2.92
학력 수준	고졸 이하	2.70	2.77	2.87
	대학 이상	2.74	2.77	2.97
	대학원 이상	2.63	2.66	2.79

자료: 설문조사 결과.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인식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94점, 5점 척도 기준)<표 4-14>.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연령대, 소득, 학력수준이 증가할수록 보다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의 필요성(일반국민)

단위: %, 점

구분		비중(%)			평균 (5점 척도)
		불필요	보통	필요	
전체(일반국민)		1.9	25.6	72.5	3.94
연령	19세~29세	3.1	33.3	63.6	3.79
	30대	2.0	31.6	66.3	3.82
	40대	0.9	25.0	74.1	4.01
	50대	1.8	18.5	79.7	4.00
	60대	1.9	19.5	78.6	4.06
성별	남성	2.4	26.2	71.5	3.94
	여성	1.4	25.0	73.6	3.93
거주지역(1)	수도권	1.6	23.2	75.2	3.98
	충청권	2.0	24.8	73.3	3.96
	호남권	1.9	30.2	67.9	3.92
	대경권	4.0	25.3	70.7	3.87
	동남권	0.6	32.7	66.7	3.85
거주지역(2)	강원권	6.9	17.2	75.9	3.86
	읍/면	1.7	27.3	71.0	3.93
월 가구소득	동	2.0	24.9	73.1	3.94
	200만 원 미만	1.7	37.1	61.2	3.82
	200~300만 원 미만	2.3	30.3	67.4	3.85
	300~400만 원 미만	2.3	25.6	72.2	3.93
	400~500만 원 미만	1.6	21.6	76.8	3.99
	500~600만 원 미만	1.6	23.0	75.4	3.98
	600~800만 원 미만	1.7	23.1	75.2	3.99
학력 수준	800만 원 이상	2.1	17.7	80.2	4.00
	고졸 이하	0.6	35.1	64.3	3.84
	대학 이상	2.2	25.6	72.2	3.93
	대학원 이상	1.9	10.4	87.7	4.16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의 필요성을 보다 더 크게 평가하였으며(4.29점, 5점 척도 기준), 다음으로 이러한 인식은 생산자(4.17점), 소비자(3.94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의 필요성(그룹별 비교)

단위: %, 점

구분	비중(%)			평균 (5점 척도)
	불필요	보통	필요	
소비자	1.9	25.6	72.5	3.94
생산자	5.4	16.0	78.7	4.17
전문가	8.5	5.7	85.8	4.29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관점으로 일반국민은 소비자 관점(57.5%)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하였으며, 생산자의 경우 생산자 관점(58.7%),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관점(33.3%) 순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상당수의 전문가들의 경우 소비자 관점이라고 응답하였음(66.7%)<표 4-16>.

<표 4-16>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시 우선 고려 관점(그룹별 비교)

단위: %

구분	일반국민	생산자	전문가
식품산업 관점	22.2	8.0	15.5
소비자 관점	57.5	33.3	66.7
생산자 관점	20.3	58.7	17.9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할 경우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세부 실천계획까지 제시하는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57.3%)<표 4-17>.
- 세부 실천계획을 포함하는 형태로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50-60대, 충청권(62.4%), 월 가구소득 400만 원대 이상, 학력수준이 대학원 이상(65.1%)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7>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의 방향(일반국민)

단위: %

구분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 제시	정부 대응전략까지 제시	정부 세부 실천계획까지 제시
전체(일반국민)		9.2	33.5	57.3
연령	19세~29세	8.2	42.1	49.7
	30대	8.7	40.8	50.5
	40대	9.2	28.1	62.7
	50대	10.1	26.9	63.0
	60대	9.7	31.2	59.1
성별	남성	10.4	33.9	55.7
	여성	7.9	33.1	58.9
거주지역(1)	수도권	9.2	32.2	58.5
	충청권	6.9	30.7	62.4
	호남권	12.3	31.1	56.6
	대경권	6.1	37.4	56.6
	동남권	8.3	39.7	51.9
	강원권	20.7	27.6	51.7
거주지역(2)	읍/면	8.0	33.7	58.3
	동	9.7	33.4	56.9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2	33.6	55.2
	200~300만 원 미만	8.0	36.0	56.0
	300~400만 원 미만	10.2	38.1	51.7
	400~500만 원 미만	9.5	30.0	60.5
	500~600만 원 미만	7.1	34.1	58.7
	600~800만 원 미만	9.1	33.1	57.9
	800만 원 이상	9.4	27.1	63.5
학력 수준	고졸 이하	8.8	34.5	56.7
	대학 이상	9.5	34.2	56.3
	대학원 이상	7.5	27.4	65.1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정부 세부 실천 계획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비중은 생산자(74.0%)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가 69.0%, 일반국민은 57.3%였음.
 - 일반국민의 경우 정부 대응 전략까지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33.5%로 다른 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표 4-1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그룹별 비교)

단위: %

구분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 제시	정부 대응전략까지 제시	정부 세부 실천계획까지 제시
일반국민	9.2	33.5	57.3
생산자	8.0	18.0	74.0
전문가	7.1	23.8	69.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먹거리 관련한 주요한 가치들 중에서 일반국민들은 안전성(4.42점, 5점 척도 기준)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속가능성(4.10점), 충분성(4.03점)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표 4-19>.³⁵
 - 60대의 경우 대체로 대부분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 이밖에 접근성은 여성(4.03점),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4.00점), 이용성은 여성(3.88점), 동 지역(3.81점), 안전성은 40대 이상, 여성(4.54점), 동 지역(4.44점),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대(4.52점), 지속가능성은 여성(4.21점), 경제성은 여성(3.97점), 학력 수준이 대학원 이상(4.03점)인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³⁵ 설문조사에서 충분성은 식량안보, 자급률 등의 먹거리 공급 수준, 접근성은 영양·건강, 소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접근 수준, 이용성은 식생활교육, 농식품표시 등을 통한 먹거리 관련한 교육·홍보·정보 등의 이용가능성, 안전성은 식품안전, 지속가능성은 친환경, 동물복지, 농업환경 등 먹거리 관련한 환경적 지속성, 경제성은 먹거리의 산업적 가치, 경쟁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됨.

<표 4-19> 먹거리 관련 주요 가치 중요성 평가(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충분성	접근성	이용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	경제성
전체(일반국민)		4.03	3.92	3.77	4.42	4.10	3.88
연령	19세~29세	3.93	3.93	3.79	4.30	4.06	3.79
	30대	3.89	3.86	3.70	4.36	4.08	3.82
	40대	4.05	3.87	3.78	4.46	4.14	3.89
	50대	4.05	3.92	3.74	4.43	4.04	3.85
	60대	4.29	4.05	3.84	4.57	4.23	4.08
성별	남성	4.02	3.81	3.66	4.31	3.99	3.79
	여성	4.05	4.03	3.88	4.54	4.21	3.97
거주지역(1)	수도권	4.03	3.94	3.79	4.43	4.12	3.88
	충청권	4.15	3.96	3.77	4.50	4.24	3.89
	호남권	3.94	3.86	3.77	4.34	3.99	3.84
	대경권	4.10	3.90	3.72	4.36	4.08	3.90
	동남권	4.03	3.91	3.77	4.43	4.03	3.90
	강원권	3.90	3.62	3.52	4.41	4.10	3.66
거주지역(2)	읍/면	4.02	3.83	3.68	4.38	4.06	3.84
	동	4.04	3.95	3.81	4.44	4.12	3.89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97	4.00	3.72	4.31	4.06	3.84
	200~300만 원 미만	3.98	3.90	3.70	4.34	4.06	3.77
	300~400만 원 미만	4.11	3.98	3.83	4.52	4.15	3.92
	400~500만 원 미만	3.99	3.88	3.72	4.38	4.12	3.92
	500~600만 원 미만	4.16	3.90	3.86	4.47	4.10	3.97
	600~800만 원 미만	3.98	3.86	3.79	4.45	4.09	3.83
	800만 원 이상	4.08	3.92	3.78	4.47	4.14	3.89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06	3.91	3.83	4.37	4.06	3.97
	대학 이상	4.02	3.91	3.74	4.41	4.10	3.83
	대학원 이상	4.05	4.00	3.83	4.53	4.18	4.03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먹거리 관련한 주요한 가치들 중에서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안전성(4.42점, 5점 척도 기준)이 주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밖에 지속가능성(4.10점), 충분성(4.30점) 등의 가치가 비교적 종합전략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20>.
 - 60대, 여성의 경우 대체로 대부분의 가치에 대해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와 남성에 비해 높았음.
 - 이밖에 충분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대(4.11점), 접근성은 동 지역(3.95점),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성은 동 지역(3.81점),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3.86점), 안전성은 동 지역(4.44점),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대(4.52점), 지속가능성은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대(4.15점), 경제성은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3.97점), 대학원 이상(4.03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그룹별로 검토한 결과, 일반국민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가치가 안전성(4.40점), 지속가능성(4.11점), 충분성(4.04점) 순인 것으로 평가하였음<표 4-21>. 생산자는 안전성(4.49점), 충분성(4.48점), 지속가능성(4.27점), 경제성(4.23점) 순으로 높게 평가함. 이밖에 전문가들의 경우 안전성(4.46점), 지속가능성(4.36점), 충분성(4.26점), 접근성(4.18점), 이용성(4.06점) 순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생산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안전성, 지속가능성, 충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0> 주요 먹거리 관련 가치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반영 필요성(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충분성	접근성	이용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	경제성	
전체(일반국민)	4.03	3.92	3.77	4.42	4.10	3.88	
연령	19세~29세	3.93	3.93	3.79	4.30	4.06	3.79
	30대	3.89	3.86	3.70	4.36	4.08	3.82
	40대	4.05	3.87	3.78	4.46	4.14	3.89
	50대	4.05	3.92	3.74	4.43	4.04	3.85
	60대	4.29	4.05	3.84	4.57	4.23	4.08
성별	남성	4.02	3.81	3.66	4.31	3.99	3.79
	여성	4.05	4.03	3.88	4.54	4.21	3.97
거주지역(1)	수도권	4.03	3.94	3.79	4.43	4.12	3.88
	충청권	4.15	3.96	3.77	4.50	4.24	3.89
	호남권	3.94	3.86	3.77	4.34	3.99	3.84
	대경권	4.10	3.90	3.72	4.36	4.08	3.90
	동남권	4.03	3.91	3.77	4.43	4.03	3.90
거주지역(2)	강원권	3.90	3.62	3.52	4.41	4.10	3.66
	읍/면	4.02	3.83	3.68	4.38	4.06	3.84
	동	4.04	3.95	3.81	4.44	4.12	3.89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97	4.00	3.72	4.31	4.06	3.84
	200~300만 원 미만	3.98	3.90	3.70	4.34	4.06	3.77
	300~400만 원 미만	4.11	3.98	3.83	4.52	4.15	3.92
	400~500만 원 미만	3.99	3.88	3.72	4.38	4.12	3.92
	500~600만 원 미만	4.16	3.90	3.86	4.47	4.10	3.97
	600~800만 원 미만	3.98	3.86	3.79	4.45	4.09	3.83
학력 수준	800만 원 이상	4.08	3.92	3.78	4.47	4.14	3.89
	고졸 이하	4.06	3.91	3.83	4.37	4.06	3.97
	대학 이상	4.02	3.91	3.74	4.41	4.10	3.83
	대학원 이상	4.05	4.00	3.83	4.53	4.18	4.03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21> 주요 먹거리 관련 가치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반영 필요성(그룹별 비교)

단위: 점

구분	충분성	접근성	이용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	경제성
일반국민	4.04	3.90	3.81	4.40	4.11	3.90
생산자	4.48	3.93	3.85	4.49	4.27	4.23
전문가	4.26	4.18	4.06	4.46	4.36	3.81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서 제시된 비전인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비전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3.70점, 5점 척도 기준)<표 4-22>.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여성(3.75점),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3.81점)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4-2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비전의 적절성(일반국민)

단위: %, 점

구분		부적절	보통	적절	평균 (5점 척도)
전체(일반국민)		5.7	30.4	63.9	3.70
연령	19세~29세	3.1	33.8	63.1	3.69
	30대	6.1	36.7	57.1	3.64
	40대	8.3	25.9	65.8	3.68
	50대	3.1	29.5	67.4	3.76
	60대	8.4	26.0	65.6	3.76
성별	남성	7.9	29.9	62.2	3.66
	여성	3.5	30.9	65.7	3.75
거주지역(1)	수도권	6.1	30.1	63.9	3.71
	충청권	7.9	27.7	64.4	3.63
	호남권	1.9	27.4	70.8	3.89
	대경권	8.1	33.3	58.6	3.57
	동남권	3.2	34.0	62.8	3.72
	강원권	10.3	27.6	62.1	3.66
거주지역(2)	읍/면	6.3	31.0	62.7	3.69
	동	5.4	30.1	64.4	3.71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8	37.9	54.3	3.61
	200~300만 원 미만	5.7	28.6	65.7	3.74
	300~400만 원 미만	4.5	31.3	64.2	3.72
	400~500만 원 미만	6.3	31.1	62.6	3.67
	500~600만 원 미만	4.0	25.4	70.6	3.81
	600~800만 원 미만	5.8	30.6	63.6	3.64
	800만 원 이상	6.3	28.1	65.6	3.73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7	40.9	54.4	3.62
	대학 이상	5.7	28.5	65.8	3.72
	대학원 이상	7.5	26.4	66.0	3.7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서 제시된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등 4개 아젠다에 대해서도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음(3.83점, 5점 척도 기준)<표 4-23>.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3.89점), 동 지역(3.85점),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3.90점),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합전략(안)에서 제시한 아젠다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아젠다의 적절성(일반국민)

단위: %, 점

구분	부적절	보통	적절	평균 (5점 척도)	
전체(일반국민)	3.7	25.3	71.0	3.83	
연령	19세~29세	4.6	32.3	63.1	3.69
	30대	5.6	30.1	64.3	3.73
	40대	2.6	24.1	73.2	3.88
	50대	2.6	20.3	77.1	3.90
	60대	3.2	19.5	77.3	3.97
성별	남성	5.5	26.8	67.7	3.77
	여성	1.8	23.8	74.4	3.89
거주지역(1)	수도권	3.7	25.3	70.9	3.84
	충청권	4.0	29.7	66.3	3.71
	호남권	2.8	29.2	67.9	3.87
	대경권	6.1	19.2	74.7	3.75
	동남권	1.9	24.4	73.7	3.90
	강원권	6.9	20.7	72.4	3.83
거주지역(2)	읍/면	4.3	27.7	68.0	3.79
	동	3.4	24.3	72.3	3.85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3	31.0	64.7	3.77
	200~300만 원 미만	2.9	26.9	70.3	3.86
	300~400만 원 미만	4.0	26.1	69.9	3.84
	400~500만 원 미만	2.6	22.6	74.7	3.85
	500~600만 원 미만	2.4	20.6	77.0	3.90
	600~800만 원 미만	5.0	30.6	64.5	3.73
	800만 원 이상	6.3	18.8	75.0	3.86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1	30.4	65.5	3.77
	대학 이상	3.6	24.3	72.1	3.84
	대학원 이상	3.8	23.6	72.6	3.88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서 제시된 4개 아젠다 중에서 정책적 시급성은 건강한 먹거리(4.14점, 5점 척도 기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24>.
 - 건강한 먹거리는 40대(4.28점), 여성(4.27점), 소득이 증가할수록, 학력 수준이 대학원 이상(4.24점)인 경우 정책적 시급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는 60대(3.92점), 여성(3.90점), 고졸 이하 학력 수준(3.94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함.
 - 생태친화적 먹거리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4.03점),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정책적 시급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밖에 더불어 사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3.95점), 월 평균 가구 소득 500만 원대(3.96점), 고졸 이하(3.92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시급하다고 평가함.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서 제시된 4개 아젠다 중에서 정책적 중요성은 건강한 먹거리(4.14점, 5점 척도 기준)를 가장 높게 평가함<표 4-25>.
 - 건강한 먹거리는 여성(4.30점),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4.20점), 학력 수준이 대학원 이상(4.25점)인 경우 정책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는 60대(3.86점), 여성(3.90점), 월 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대(3.82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 생태친화적 먹거리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4.03점), 월 평균 가구 소득 500만 원대(3.99점)에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 이밖에 더불어 사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3.93점),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3.99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표 4-2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아젠다별 정책적 시급성(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전체(일반국민)	4.14	3.76	3.85	3.82	
연령	19세~29세	3.90	3.58	3.68	3.67
	30대	4.10	3.68	3.72	3.69
	40대	4.28	3.74	3.93	3.89
	50대	4.22	3.87	3.93	3.93
	60대	4.19	3.92	4.02	3.88
성별	남성	4.02	3.61	3.68	3.69
	여성	4.27	3.90	4.03	3.95
거주지역(1)	수도권	4.14	3.75	3.87	3.81
	충청권	4.11	3.79	3.90	3.87
	호남권	4.25	3.94	3.93	3.94
	대경권	4.08	3.67	3.70	3.80
	동남권	4.10	3.67	3.78	3.77
	강원권	4.41	3.79	4.00	3.69
거주지역(2)	읍/면	4.10	3.74	3.84	3.80
	동	4.16	3.76	3.86	3.83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00	3.78	3.82	3.78
	200~300만 원 미만	4.04	3.78	3.85	3.81
	300~400만 원 미만	4.19	3.76	3.86	3.85
	400~500만 원 미만	4.19	3.81	3.90	3.86
	500~600만 원 미만	4.21	3.75	3.95	3.96
	600~800만 원 미만	4.14	3.53	3.67	3.59
	800만 원 이상	4.24	3.88	3.90	3.84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17	3.94	3.96	3.92
	대학 이상	4.12	3.70	3.83	3.79
	대학원 이상	4.24	3.85	3.81	3.87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2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아젠다별 정책적 중요성(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전체(일반국민)		4.14	3.73	3.86	3.79
연령	19세~29세	3.96	3.58	3.73	3.64
	30대	4.17	3.72	3.77	3.67
	40대	4.20	3.68	3.85	3.79
	50대	4.17	3.84	3.94	3.93
	60대	4.22	3.86	4.06	3.92
성별	남성	3.99	3.57	3.70	3.65
	여성	4.30	3.90	4.03	3.93
거주지역(1)	수도권	4.13	3.74	3.87	3.75
	충청권	4.13	3.73	3.92	3.89
	호남권	4.11	3.86	3.99	3.93
	대경권	4.11	3.64	3.75	3.77
	동남권	4.19	3.67	3.78	3.78
	강원권	4.41	3.72	3.90	3.69
거주지역(2)	읍/면	4.15	3.71	3.84	3.78
	동	4.14	3.74	3.87	3.79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08	3.73	3.91	3.81
	200~300만 원 미만	4.04	3.69	3.81	3.73
	300~400만 원 미만	4.16	3.77	3.84	3.75
	400~500만 원 미만	4.17	3.82	3.86	3.82
	500~600만 원 미만	4.20	3.78	3.99	3.99
	600~800만 원 미만	4.13	3.53	3.71	3.61
	800만 원 이상	4.26	3.78	3.97	3.84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12	3.82	3.95	3.91
	대학 이상	4.13	3.69	3.84	3.74
	대학원 이상	4.25	3.87	3.89	3.89

자료: 설문조사 결과.

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정책 평가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주요 먹거리 관련 정책 영역에 대해서 그간의 정책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일반국민들은 식량안보(37.9%), 식품안전·품질(25.3%), 건강·영양(16.6%) 순으로 비교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하였음<표 4-26>.
 - 식량안보의 경우 연령대가 대체로 증가할수록, 동 지역(39.0%), 고졸 이하 학력 수준(42.7%)에서 비교적 정책성과를 낮게 평가함. 또한 식품안전·품질의 경우 여성(28.0%), 읍/면 지역(27.2%),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대(28.2%)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건강·영양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남성(19.0%), 식품산업은 30대(11.9%), 800만 원 이상 고소득(10.4%)에서 정책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함.
 - 환경/폐기는 19~20세 젊은 연령대(11.1%), 남성(7.0%), 읍/면 지역(8.0%), 지역/공동체의 경우 19~20세 젊은 연령대(9.6%), 남성(7.7%), 학력 수준이 대학 이상(6.5%)인 경우 대체로 그간의 정책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였음.

<표 4-26>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정책성과 미흡 영역(일반국민)

단위: %

구분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공동체
전체(일반국민)		37.9	25.3	16.6	8.2	6.4	5.6
연령	19세~29세	29.9	25.3	15.9	8.2	11.1	9.6
	30대	36.7	24.1	13.6	11.9	7.5	6.1
	40대	40.9	25.3	15.2	7.9	5.8	4.8
	50대	40.2	25.6	18.2	6.6	4.3	5.1
	60대	41.8	26.2	21.0	6.1	3.2	1.7
성별	남성	35.0	22.6	19.0	8.7	7.0	7.7
	여성	41.0	28.0	14.2	7.7	5.8	3.4
거주지역(1)	수도권	37.6	24.4	16.5	8.2	7.3	6.0
	충청권	37.3	25.4	19.8	8.9	4.0	4.6
	호남권	39.0	27.4	16.4	8.2	4.4	4.7
	대경권	37.0	26.6	15.8	8.1	6.4	6.1
	동남권	40.6	25.6	15.2	7.7	6.0	4.9
	강원권	31.0	26.4	18.4	8.0	9.2	6.9
거주지역(2)	읍/면	35.3	27.2	16.2	7.3	8.0	5.9
	동	39.0	24.4	16.8	8.5	5.8	5.5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7.9	26.1	18.4	7.5	6.3	3.7
	200~300만 원 미만	37.9	25.1	16.6	8.4	6.5	5.5
	300~400만 원 미만	36.0	28.2	16.5	8.0	6.8	4.5
	400~500만 원 미만	40.5	24.6	15.1	8.8	4.2	6.8
	500~600만 원 미만	37.6	27.0	17.7	5.6	8.2	4.0
	600~800만 원 미만	39.9	21.2	15.7	8.8	6.3	8.0
	800만 원 이상	34.4	23.3	17.4	10.4	8.0	6.6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2.7	25.7	15.8	8.2	5.3	2.3
	대학 이상	36.7	25.3	16.6	8.1	6.7	6.5
	대학원 이상	38.4	24.2	17.6	8.8	6.3	4.7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주요 정책영역 중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하여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대체로 식품안전·품질(41.7%), 환경/폐기(20.9%), 식량안보(17.9%) 순으로 높게 평가함<표 4-27>.
 - 식량안보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남성(21.0%),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23.5%), 식품안전·품질은 대체로 40대 이상, 여성(45.1%), 월 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대(46.3%), 고졸 이하(45.0%)에서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건강·영양의 경우 30대(11.1%),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식품산업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8.3%),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밖에 환경/폐기는 여성(24.1%), 읍/면 지역(22.6%),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대(25.4%), 지역/공동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대(7.2%)인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하여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 조사대상 그룹별로 일반국민은 식품안전/품질(41.7%), 환경/폐기(20.9%), 식량안보(17.9%) 순으로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생산자는 식량안보(40.9%), 식품안전/품질(28.0%) 순으로, 전문가의 경우에도 생산자와 유사하게 식량안보(33.7%), 식품안전/품질(29.4%) 순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통해서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음<표4-28>.

<표 4-27>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현재 대응 시급성(일반국민)

단위: %

구분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공동체	
전체(일반국민)	17.9	41.7	8.7	6.0	20.9	4.8	
연령	19세~29세	15.4	35.0	9.1	10.1	21.4	9.1
	30대	14.3	40.3	11.1	8.0	20.4	6.0
	40대	17.3	44.9	8.0	4.8	21.9	3.1
	50대	20.9	43.6	9.0	4.0	20.0	2.6
	60대	22.3	44.6	5.6	3.2	20.6	3.7
성별	남성	21.0	38.5	8.9	8.3	17.7	5.6
	여성	14.7	45.1	8.4	3.7	24.1	3.9
거주지역(1)	수도권	17.4	40.7	8.8	6.9	21.5	4.8
	충청권	20.5	41.9	9.2	5.9	17.2	5.3
	호남권	14.8	41.8	10.1	6.3	22.3	4.7
	대경권	20.5	42.4	7.4	3.7	21.9	4.0
	동남권	17.5	44.7	9.2	4.7	19.2	4.7
거주지역(2)	강원권	21.8	41.4	1.1	5.7	23.0	6.9
	읍/면	17.3	40.3	8.9	5.3	22.6	5.6
	동	18.1	42.3	8.6	6.3	20.1	4.5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7.2	43.7	8.0	5.5	22.4
	200~300만 원 미만	19.8	37.9	9.1	6.7	19.2	7.2
	300~400만 원 미만	17.6	41.5	6.3	4.0	25.4	5.3
	400~500만 원 미만	14.7	43.9	10.2	6.8	21.6	2.8
	500~600만 원 미만	23.5	39.4	7.4	5.6	18.3	5.8
	600~800만 원 미만	15.7	46.3	8.8	7.4	16.8	5.0
	800만 원 이상	17.4	39.9	11.5	6.6	20.8	3.8
학력 수준	고졸 이하	17.5	45.0	9.6	3.3	21.8	2.7
	대학 이상	17.8	41.2	8.5	6.5	20.6	5.3
	대학원 이상	19.2	40.3	8.2	6.9	21.1	4.4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2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현재 대응 시급성(그룹별 비교)

단위: %

구분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공동체
일반국민	17.9	41.7	8.7	6.0	20.9	4.8
생산자	40.9	28.0	12.2	8.4	6.7	3.8
전문가	33.7	29.4	11.9	3.2	8.3	13.5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주요 정책영역 중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미래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 영역으로는 일반국민들의 경우 식품안전/품질(3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량안보(25.5%), 환경/폐기(20.7%) 순이었음<표 4-29>.
 - 식량안보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남성(29.5%), 읍/면 지역(26.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29.4%), 학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안전/품질은 30-50대, 여성(34.5%), 동 지역(32.1%),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건강·영양의 경우 30대(9.2%), 여성(8.1%), 식품산업은 19~29세(13.3%), 남성(10.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 이상, 대학원 이상(13.8%)에서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폐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23.6%), 월 평균 가구소득 300-500만 원대, 지역/공동체는 남성(6.4%),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을 주요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생산자, 전문가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4-30>.
 - 일반국민은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식품안전/품질(31.3%), 식량안보(25.5%), 환경/폐기(20.7%) 순으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생산자의 경우 식량안보(40.9%)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식량안전/품질이 18.0%였음. 전문가의 경우에도 식량안보라고 응답한 비중이 46.4%에 달하며, 이밖에 식품안전/품질이 18.7%였음.

<표 4-29>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미래 중장기 대응 필요성(일반국민)

단위: %

구분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공동체	
전체(일반국민)	25.5	31.3	7.7	9.3	20.7	5.5	
연령	19세~29세	22.2	26.3	6.2	13.3	24.1	7.9
	30대	18.0	34.2	9.2	10.0	21.4	7.1
	40대	28.4	33.6	7.5	6.0	19.9	4.7
	50대	28.9	32.9	7.5	7.9	19.1	3.7
	60대	29.7	28.1	8.4	10.0	19.3	4.5
성별	남성	29.5	28.2	7.3	10.6	17.9	6.4
	여성	21.3	34.5	8.1	7.9	23.6	4.6
거주지역(1)	수도권	26.3	30.6	6.7	9.5	20.8	6.0
	충청권	28.4	32.7	8.6	8.6	16.8	5.0
	호남권	24.5	31.1	8.8	8.8	21.7	5.0
	대경권	26.6	28.3	8.8	11.1	22.2	3.0
	동남권	21.4	32.7	8.5	7.9	23.1	6.4
	강원권	21.8	41.4	9.2	10.3	11.5	5.7
거주지역(2)	읍/면	26.9	29.4	7.1	8.7	22.1	5.8
	동	24.9	32.1	8.0	9.5	20.1	5.4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7.3	33.3	9.2	8.0	18.7	3.4
	200~300만 원 미만	25.1	30.7	8.0	10.3	20.0	5.9
	300~400만 원 미만	26.1	28.8	5.7	6.4	25.6	7.4
	400~500만 원 미만	25.4	30.5	7.7	9.5	23.7	3.2
	500~600만 원 미만	29.4	30.7	8.7	10.1	15.9	5.3
	600~800만 원 미만	21.8	35.5	6.9	10.2	17.9	7.7
	800만 원 이상	22.2	31.6	8.7	11.5	19.8	6.3
학력 수준	고졸 이하	23.6	32.9	6.6	8.4	24.6	3.9
	대학 이상	25.4	31.9	8.0	8.8	20.0	5.9
	대학원 이상	28.6	24.8	7.2	13.8	19.5	6.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3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미래 중장기 대응 필요성(그룹별 비교)

단위: %

구분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공동체
일반국민	25.5	31.3	7.7	9.3	20.7	5.5
생산자	40.9	18.0	11.3	9.3	12.0	8.4
전문가	46.4	18.7	8.7	6.0	12.7	7.5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세부정책이슈별로 분석한 결과, 기존의 정책성과가 미흡한 영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현재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 또는 미래 중장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영역으로 대체로 공통적으로 사전예방 농식품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 환경친화적 농업 추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표 4-31~표 4-33>.
 - 일반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사전예방 농식품 안전관리(14.5%),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11.9%),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10.8%) 등이 상대적으로 정책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현재 시급하게 대응되어야 할 세부정책이슈로도 사전예방 농식품 안전관리(14.2%),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11.5%),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11.3%)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음.
 - 미래 중장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14.0%), 환경친화적 농업 추진(10.9%), 사전예방 농식품 안전관리(10.2%)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표 4-3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세부정책이슈 정책성과 미흡 영역(일반국민)

단위: %

구분	사정예방 농식품 안전관리	식품안전관 리 소비자 참여 확대	식생활 교육 활성화	국민건강 영양 관리 강화	농식품 생산기반 구축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취약계층 먹거리 불균형 해소	환경친화적 농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 소비	농식품 폐기 순환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확립	농식품 분야 취업 활성화 인력 육성	식품산업 진흥 수출 확대	지역 먹거리 공동체 조직 및 활성화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전체(일반국민)	14.5	10.8	3.0	7.0	6.6	3.7	6.1	8.9	11.9	8.6	6.4	4.6	2.1	3.1	2.7	
연령	19세~29세	10.8	7.9	3.8	8.6	6.6	4.8	8.3	7.8	9.8	11.7	5.1	5.9	2.2	3.9	2.6
	30대	13.5	11.3	3.5	6.7	5.6	3.8	7.3	10.1	11.3	8.6	5.0	4.3	3.0	3.4	2.7
	40대	14.6	11.9	2.4	6.6	6.9	3.8	6.1	8.5	12.1	7.0	7.9	4.8	1.8	2.8	2.9
	50대	16.4	12.2	2.5	6.8	7.4	3.2	5.1	8.5	12.9	7.4	6.5	4.1	1.5	3.1	2.4
	60대	17.1	10.3	2.6	6.5	6.4	2.9	3.4	10.0	13.2	8.6	7.5	3.7	2.3	2.5	3.0
성별	남성	14.1	9.3	3.3	7.7	8.2	4.3	6.6	8.4	10.1	7.5	7.2	4.7	2.2	3.2	3.3
	여성	14.8	12.5	2.6	6.4	5.0	3.2	5.7	9.4	13.7	9.6	5.5	4.5	2.0	3.1	2.1
거주 지역(1)	수도권	14.9	10.0	3.0	6.9	6.9	3.4	6.2	9.0	12.0	9.3	6.5	4.4	2.0	2.9	2.6
	충청권	15.9	10.7	2.6	7.6	6.7	3.0	6.3	7.2	13.1	6.7	7.3	4.2	2.1	4.0	2.6
	호남권	14.2	11.1	3.6	8.6	5.0	3.8	6.7	10.3	11.1	7.4	7.1	4.5	1.9	3.0	1.8
	대경권	12.6	10.6	3.7	7.1	5.2	5.6	6.4	8.7	11.4	6.6	4.8	6.4	4.0	3.3	3.6
	동남권	13.8	13.5	2.3	6.0	6.9	3.7	5.4	8.0	12.6	9.2	5.8	4.9	1.6	3.3	2.9
	강원권	13.1	11.7	2.1	6.9	9.7	5.9	4.1	12.8	5.2	10.3	7.6	2.8	1.4	3.1	3.4
거주 지역(2)	읍/면	13.8	10.2	2.9	6.1	6.9	3.9	6.4	8.4	12.1	8.8	5.5	5.5	2.6	3.7	3.3
	동	14.7	11.1	3.0	7.5	6.5	3.6	6.0	9.1	11.8	8.5	6.8	4.2	1.9	2.9	2.5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5.4	10.7	2.7	6.0	6.9	4.6	7.8	10.4	13.0	7.4	6.4	2.4	1.6	3.2	1.4
	200~300만 원 미만	14.2	11.8	2.7	6.7	7.1	4.5	7.0	7.4	11.5	9.9	4.8	4.6	2.2	2.6	2.9
	300~400만 원 미만	14.3	9.9	2.6	6.7	7.2	3.2	5.6	9.2	13.1	7.9	7.4	4.0	2.3	3.6	3.0
	400~500만 원 미만	13.6	11.1	3.9	7.1	5.8	3.7	6.6	8.9	10.6	9.0	6.9	5.9	1.4	2.7	2.6
	500~600만 원 미만	16.8	9.8	2.1	6.7	7.1	2.8	5.5	9.0	11.6	7.7	5.6	5.5	2.5	4.2	3.2
	600~800만 원 미만	12.8	10.7	3.6	8.3	5.8	4.5	4.8	7.6	13.6	7.3	7.3	5.5	2.6	3.5	2.3
	800만 원 이상	14.5	11.9	2.9	8.3	6.0	2.6	5.2	10.6	9.5	10.5	6.5	3.3	2.5	2.2	3.4
학력 수준	고졸 이하	17.3	11.0	3.3	7.0	5.8	2.9	6.3	10.1	12.9	8.1	5.7	2.7	2.7	2.5	1.8
	대학 이상	13.5	11.0	2.8	7.2	6.7	3.9	6.2	8.6	11.8	8.7	6.6	5.0	2.0	3.3	2.7
	대학원 이상	16.5	9.7	3.3	6.2	7.2	3.7	5.3	9.2	10.4	8.1	6.5	4.6	2.2	2.8	4.2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3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세부정책이슈별 현재 시급성 평가(일반국민)

단위: %

구분	사정예방 농식품 안전관리	식품안전관 리 소비자 참여 확대	식생활 교육 활성화	국민건강 영양 관리 강화	농식품 생산기반 구축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취약계층 먹거리 불균형 해소	환경친화적 농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 소비	농식품 폐기 순환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확립	농식품 분야 취약업 활성화 인력 육성	식품산업 진흥 수출 확대	지역 먹거리 공동체 조직 및 활성화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전체(일반국민)	14.2	11.5	2.8	8.6	7.1	3.7	6.6	8.9	11.3	7.1	6.7	4.2	2.4	2.7	2.4	
연령	19세~29세	10.3	9.5	2.9	8.0	5.8	4.2	10.4	8.9	9.3	9.9	6.5	5.9	2.9	2.9	2.5
	30대	15.4	11.1	3.1	9.5	6.4	4.3	8.2	8.3	11.3	5.5	6.1	4.1	2.7	2.4	1.7
	40대	14.7	11.4	3.1	9.3	5.3	4.3	5.4	7.8	11.7	7.1	7.0	4.4	2.8	3.1	2.5
	50대	14.2	13.1	2.2	8.0	9.2	3.1	5.6	9.5	12.1	6.3	6.8	3.2	1.9	2.6	2.3
	60대	16.5	12.1	2.7	7.9	8.8	2.1	3.2	10.1	11.9	6.6	6.9	3.4	1.8	2.4	3.5
성별	남성	12.4	10.6	2.7	9.9	8.1	4.4	7.2	8.1	10.3	6.4	7.0	4.2	2.8	2.7	3.1
	여성	16.0	12.4	2.9	7.2	5.9	2.9	6.0	9.6	12.3	7.7	6.3	4.3	2.1	2.7	1.8
거주 지역(1)	수도권	13.4	11.5	2.8	7.8	7.5	3.6	7.1	9.2	11.4	7.3	6.6	4.5	2.6	2.5	2.4
	충청권	16.1	11.2	4.4	8.7	6.8	3.9	6.0	7.8	10.0	6.8	5.5	4.6	1.3	3.6	3.3
	호남권	15.7	11.6	3.7	12.0	5.2	2.5	5.8	9.1	10.8	6.5	5.8	4.2	2.7	3.3	1.3
	대경권	12.5	10.6	2.3	8.1	7.0	4.4	5.6	8.3	9.9	8.2	8.6	4.9	3.9	2.5	3.1
	동남권	15.1	11.3	1.5	8.8	7.2	4.0	7.1	8.3	13.2	6.3	7.2	3.2	2.1	2.5	2.1
	강원권	15.9	14.8	2.8	8.6	6.9	5.5	4.8	12.1	9.7	6.6	4.5	1.7	0.0	2.4	3.8
거주 지역(2)	읍/면	13.4	11.3	2.6	7.9	6.5	4.1	7.2	8.8	12.6	7.2	5.5	4.1	3.4	3.2	2.3
	동	14.5	11.5	2.9	8.9	7.3	3.5	6.4	8.9	10.7	7.0	7.1	4.3	2.0	2.5	2.5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5.0	12.8	2.8	8.5	7.6	4.0	7.2	9.6	11.0	6.5	6.2	2.7	1.4	2.2	2.5
	200~300만 원 미만	13.3	11.5	2.7	8.2	8.0	3.7	7.3	8.1	10.3	8.1	5.4	5.7	2.5	3.1	2.2
	300~400만 원 미만	14.2	12.0	2.2	8.4	7.3	3.0	6.1	9.4	12.1	8.1	6.5	3.8	2.3	2.6	2.0
	400~500만 원 미만	12.9	10.8	3.2	9.2	7.5	3.5	7.9	8.2	11.5	6.6	8.3	3.8	2.6	2.0	1.9
	500~600만 원 미만	14.7	11.1	2.9	7.4	6.8	3.6	5.6	8.1	12.1	6.8	6.7	5.4	2.8	2.5	3.6
	600~800만 원 미만	14.5	10.4	3.6	10.5	5.5	4.4	5.5	8.7	11.1	5.5	5.7	4.9	3.3	3.9	2.6
	800만 원 이상	15.8	11.7	2.0	7.6	5.6	4.3	5.8	11.1	10.6	7.3	7.8	2.7	1.9	3.0	2.7
학력 수준	고졸 이하	14.9	11.4	3.2	8.9	7.4	2.5	6.3	9.1	13.3	7.2	5.3	3.7	2.3	2.6	1.9
	대학 이상	13.8	11.5	2.8	8.5	6.9	3.9	6.8	8.9	11.0	7.0	7.1	4.3	2.4	2.8	2.2
	대학원 이상	15.5	11.4	2.2	8.4	7.5	4.2	5.9	8.4	9.7	7.1	5.8	4.6	2.6	1.9	4.8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3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세부정책이슈별 미래 중장기 대응 필요성 평가(일반국민)

단위: %

구분	사정예방 농식품 안전관리	식품안전관 리 소비자 참여 확대	식생활 교육 활성화	국민건강 영양 관리 강화	농식품 생산기반 구축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취약계층 먹거리 불균형 해소	환경친화적 농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 소비	농식품 폐기 순환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확립	농식품 분야 취업 활성화 인력 육성	식품산업 진흥 수출 확대	지역 먹거리 공동체 조직 및 활성화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전체(일반국민)	10.2	7.8	2.9	7.2	7.9	3.3	4.5	10.9	14.0	6.6	8.0	5.1	3.8	3.1	4.9	
연령	19세~29세	7.0	6.7	3.2	6.9	8.5	4.0	7.4	10.4	11.3	8.4	7.6	6.4	4.1	4.2	3.9
	30대	11.3	7.1	2.6	7.1	6.6	5.1	5.4	11.7	13.2	6.4	9.2	4.0	4.3	2.4	3.7
	40대	10.7	8.3	1.9	7.5	7.7	2.8	3.9	10.0	14.9	6.4	8.1	5.5	3.8	3.1	5.4
	50대	10.9	9.1	3.0	7.7	8.3	2.5	3.2	10.8	15.8	5.8	7.8	4.4	3.3	2.6	5.0
	60대	10.8	7.5	3.9	6.8	8.8	2.1	2.3	11.7	14.7	5.8	7.1	5.0	3.4	3.4	6.7
성별	남성	8.7	7.9	3.0	8.0	9.5	4.3	4.7	9.8	12.5	6.1	7.6	5.6	4.1	3.2	5.1
	여성	11.6	7.7	2.7	6.5	6.3	2.3	4.2	12.0	15.6	7.1	8.4	4.5	3.4	2.9	4.7
거주 지역(1)	수도권	9.6	6.9	2.7	6.5	8.0	3.6	4.6	11.0	13.9	7.1	8.4	5.5	3.4	3.6	5.2
	충청권	12.6	7.1	2.4	8.5	9.3	3.3	5.0	10.4	13.6	5.9	5.9	4.6	3.5	2.4	5.5
	호남권	10.3	10.1	4.3	10.1	5.8	2.9	3.9	10.3	12.1	7.3	8.9	4.5	3.4	2.2	4.0
	대경권	10.3	7.8	3.3	6.1	7.5	2.5	3.5	9.6	14.8	6.6	9.0	6.5	5.7	2.8	4.0
	동남권	10.1	9.5	2.5	7.6	8.6	3.1	4.9	11.0	15.1	4.7	7.0	3.8	4.3	2.8	4.9
	강원권	11.4	8.6	1.4	7.6	7.6	3.8	3.1	15.5	15.9	6.6	6.6	3.4	2.8	3.1	2.8
거주 지역(2)	읍/면	9.9	7.4	3.0	6.6	8.3	3.6	4.2	10.1	15.1	7.1	8.3	5.0	4.0	3.5	3.9
	동	10.3	8.0	2.8	7.5	7.8	3.2	4.6	11.2	13.6	6.4	7.8	5.1	3.7	2.9	5.3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0.6	9.4	3.4	6.5	6.6	2.4	6.8	12.4	13.2	7.2	6.3	5.2	2.9	2.7	4.3
	200~300만 원 미만	8.7	8.1	2.7	7.8	8.9	3.3	4.7	12.2	11.0	6.5	8.6	5.0	3.3	3.9	5.3
	300~400만 원 미만	11.3	7.8	1.6	6.4	8.1	3.5	4.8	10.3	16.2	7.6	6.8	4.5	3.0	3.8	4.4
	400~500만 원 미만	9.9	7.6	2.6	7.6	7.8	3.1	4.4	10.6	15.1	5.5	9.2	4.5	4.9	2.5	4.6
	500~600만 원 미만	11.2	5.0	3.7	7.1	6.9	5.3	3.8	9.9	12.8	6.7	9.2	6.0	4.2	2.1	6.0
	600~800만 원 미만	9.6	8.8	3.6	7.7	8.8	3.1	4.0	10.6	15.0	6.0	7.2	5.4	3.9	3.2	3.4
	800만 원 이상	10.1	8.1	2.9	7.6	7.8	2.1	2.5	9.6	14.9	6.9	8.1	5.5	4.1	3.1	6.7
학력 수준	고졸 이하	11.9	9.0	3.3	7.3	8.2	1.9	5.2	10.4	13.2	7.0	5.5	5.1	4.2	2.5	5.4
	대학 이상	9.6	8.0	2.7	7.3	7.8	3.6	4.5	10.6	14.4	6.5	8.2	5.3	3.7	3.4	4.4
	대학원 이상	11.2	4.8	2.9	6.5	8.3	3.3	3.5	13.3	13.0	6.4	10.3	3.3	3.5	2.3	7.4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그룹별로 현재 시급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정책이슈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14.2%),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11.5%),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11.3%), 생산자는 농식품 생산·공급기반 구축(14.0%), 국민 건강·영양관리(13.7%),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12.5%), 전문가는 농식품 생산·공급기반 구축(13.5%),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13.0%), 공공급식 체계 구축(11.2%)가 중요하다고 응답함<표 4-34>.
-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일반국민은 환경친화적 농업(10.9%),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10.2%), 생산자는 농식품 생산기반 구축(13.0%),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12.2%), 국민건강영양관리(11.9%),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11.1%), 전문가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확립(14.5%), 농식품 생산·공급기반 구축(14.5%)이 중요하다고 평가함<표 4-34>.

<표 4-3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정책이슈별 대응 필요성 평가(그룹별 비교)

단위: %

구분	시급한 대응 필요			중장기적 대응 필요		
	일반국민	생산자	전문가	일반국민	생산자	전문가
(1)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	14.2	9.2	13.0	10.2	11.1	9.5
(2)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	11.5	12.5	6.5	7.8	12.2	4.3
(3) 식생활교육 활성화	2.8	6.1	5.5	2.9	6.7	8.0
(4) 국민건강영양관리	8.6	13.7	6.4	7.2	11.9	6.9
(5) 농식품 생산·공급기반 구축	7.1	14.0	13.5	7.9	13.0	14.5
(6) 공공급식 체계 구축	3.7	4.4	11.2	3.3	4.0	6.1
(7) 취약계층 먹거리 불균형 해소	6.6	4.4	6.3	4.5	4.7	5.0
(8) 환경친화적 농업 추진	8.9	8.2	4.0	10.9	8.4	5.7
(9)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	11.3	9.6	5.8	14	9.3	8.8
(10) 농식품 폐기 관리 강화	7.1	1.4	2.0	6.6	1.9	3.1
(11)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확립	6.7	4.4	15.6	8	4.4	14.5
(12) 농식품 분야 취창업 활성화/인력 육성	4.2	3.3	2.6	5.1	3.5	2.3
(13) 식품산업 진흥(경쟁력 강화)	2.4	1.8	0.8	3.8	1.8	1.7
(14) 지역 먹거리 공동체의 조직 및 활성화	2.7	3.3	3.9	3.1	3.3	3.7
(15) 4차산업 대응 통한 농식품 부가가치 증진	2.4	3.7	2.7	4.9	3.9	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역량 평가

- 일반 국민들은 기존 먹거리 정책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인식이 높지는 않았음(3.03점, 5점 척도 기준). 60대(2.84점), 읍/면 지역(2.95점),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2.88점), 대학원 이상(2.84점)에서 특히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3.57점, 5점 척도 기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3.61점), 동 지역(3.60점), 학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35>.
- 조사대상 그룹별로는 생산자(2.53점)와 전문가들(2.55점)이 특히 기존 정책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으며,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생산자(4.12점), 전문가(4.25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36>.

<표 4-3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 평가(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기존 정책에서의 상향식 의사결정의 충분성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의 중요성
전체(일반국민)		3.03	3.57
연령	19세~29세	3.03	3.49
	30대	3.14	3.52
	40대	3.07	3.62
	50대	3.04	3.56
	60대	2.84	3.69
성별	남성	3.04	3.53
	여성	3.03	3.61
거주지역(1)	수도권	2.99	3.56
	충청권	2.93	3.58
	호남권	3.21	3.58
	대경권	3.09	3.52
	동남권	3.13	3.63
	강원권	2.83	3.62
거주지역(2)	읍/면	2.95	3.51
	동	3.07	3.60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8	3.59
	200~300만 원 미만	3.11	3.66
	300~400만 원 미만	2.90	3.56
	400~500만 원 미만	3.11	3.44
	500~600만 원 미만	3.09	3.50
	600~800만 원 미만	3.04	3.69
	800만 원 이상	3.09	3.61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02	3.52
	대학 이상	3.06	3.58
	대학원 이상	2.84	3.6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36>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 평가(그룹별 비교)

단위: 점

구분	일반국민	생산자	전문가
기존 정책에서의 상향식 의사결정의 충분성	3.03	2.53	2.5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의 중요성	3.57	4.12	4.25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먹거리 가치와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역량 등이 중요함. 일반국민들은 먹거리 관련한 가치와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농촌(3.55점, 5점 척도 기준), 민간단체(3.50점), 지역주민(3.30점) 순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함<표 4-37>.

<표 4-37>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이해관계자들의 먹거리 가치와 이슈에 대한 관심(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지역주민	민간단체	지자체		지역		
			광역시	기초	도시	농촌	
전체(일반국민)	3.30	3.50	3.16	3.04	3.11	3.55	
연령	19세~29세	3.25	3.41	3.12	3.09	3.05	3.75
	30대	3.21	3.44	3.12	3.08	3.13	3.67
	40대	3.32	3.56	3.19	2.99	3.08	3.48
	50대	3.43	3.57	3.17	2.99	3.16	3.47
	60대	3.26	3.47	3.19	3.09	3.11	3.38
성별	남성	3.30	3.47	3.15	3.03	3.06	3.53
	여성	3.30	3.52	3.17	3.05	3.15	3.58
거주지역(1)	수도권	3.32	3.50	3.20	3.04	3.10	3.64
	충청권	3.10	3.43	2.89	2.82	2.95	3.30
	호남권	3.36	3.57	3.26	3.24	3.21	3.57
	대경권	3.53	3.68	3.26	3.22	3.20	3.63
	동남권	3.22	3.38	3.06	2.96	3.08	3.42
거주지역(2)	강원권	3.10	3.38	3.14	3.07	3.14	3.28
	읍/면	3.18	3.37	3.09	2.96	2.97	3.40
	동	3.35	3.55	3.19	3.08	3.16	3.62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5	3.41	3.04	2.96	3.08
	200~300만 원 미만	3.27	3.49	3.09	2.96	3.14	3.62
	300~400만 원 미만	3.18	3.44	3.08	3.01	3.04	3.53
	400~500만 원 미만	3.39	3.59	3.25	3.13	3.18	3.62
	500~600만 원 미만	3.29	3.52	3.27	3.06	3.09	3.44
	600~800만 원 미만	3.44	3.39	3.17	3.14	3.16	3.63
	800만 원 이상	3.29	3.61	3.24	3.03	3.02	3.61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29	3.42	3.10	2.97	3.19	3.49
	대학 이상	3.31	3.51	3.16	3.06	3.09	3.57
	대학원 이상	3.27	3.54	3.25	3.07	3.10	3.52

자료: 설문조사 결과.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은 대체로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민간단체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함(3.20점, 5점 척도 기준)<표 4-39>. 조사대상 그룹별로는 공통적으로 민간단체, 농촌 지역이 대체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국가 먹거리 전략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동반되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음<표 4-40>.
 - 일반국민이 농촌지역,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가장 크다고 평가한 반면, 생산자는 대체로 전반적인 평가가 낮은 편이나 농촌지역이 다소 역량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3.13점).
 - 전문가들의 경우 민간단체(3.93점)의 역량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농촌지역(3.65점), 광역기초단체(3.43점)가 상대적으로 역량이 큰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4-39>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지역주민	민간단체	지자체		지역		
			광역	기초	도시	농촌	
전체(일반국민)	2.96	3.20	3.07	2.92	3.01	3.14	
연령	19세~29세	2.82	3.08	3.11	2.96	3.03	3.22
	30대	2.93	3.13	3.04	2.92	2.99	3.14
	40대	2.96	3.27	3.06	2.88	2.96	3.08
	50대	3.11	3.32	3.08	2.90	3.05	3.19
	60대	2.98	3.18	3.05	2.95	3.01	3.03
성별	남성	2.92	3.13	3.07	2.84	2.94	3.09
	여성	3.01	3.27	3.07	3.00	3.07	3.19
거주지역(1)	수도권	2.95	3.15	3.08	2.90	3.02	3.17
	충청권	2.78	3.11	2.80	2.72	2.88	2.97
	호남권	3.06	3.37	3.17	3.05	3.06	3.07
	대경권	3.08	3.25	3.10	2.91	2.94	3.14
	동남권	3.03	3.27	3.13	2.99	3.08	3.21

	강원권	2.83	3.21	3.10	3.00	2.93	2.97
거주지역(2)	읍/면	2.84	3.09	2.97	2.85	2.91	3.05
	동	3.02	3.25	3.11	2.95	3.05	3.17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94	3.21	2.99	2.86	2.97	3.16
	200~300만 원 미만	2.97	3.22	3.13	2.98	3.07	3.11
	300~400만 원 미만	2.89	3.15	3.06	2.86	2.99	3.24
	400~500만 원 미만	3.04	3.29	3.16	2.97	3.06	3.20
	500~600만 원 미만	3.00	3.25	3.02	2.91	2.93	3.06
	600~800만 원 미만	2.95	3.08	3.02	2.95	3.00	3.07
	800만 원 이상	2.96	3.16	3.05	2.84	2.96	3.03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03	3.23	3.03	2.92	3.08	3.15
	대학 이상	2.97	3.20	3.07	2.92	2.99	3.17
	대학원 이상	2.80	3.14	3.11	2.88	2.97	2.9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4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관련인들의 역량(그룹별 비교)

단위: 점

구분	지역주민	민간단체	지자체		지역	
			광역	기초	도시	농촌
일반국민	2.96	3.20	3.07	2.92	3.01	3.14
생산자	2.63	3.00	2.99	3.01	2.97	3.13
전문가	3.29	3.93	3.43	3.37	3.31	3.65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먹거리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히 생산자단체(4.18점, 5점 척도 기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였음<표 4-41>.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별로 대체로 4.00~4.20점 내외로 중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6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60대(4.38점), 동 지역(4.20점), 월 평균 가구소득 400-500만 원대에서 중요성이 큰 것으로 인식하였음.
 - 산업계에 대해서는 60대(3.93점), 동 지역((3.86점), 시민단체의 경우 60대(4.04점), 여성(3.99점), 동 지역(3.85점),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3.91점)에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전문가의 경우 60대(4.08점), 여성(3.84점), 일반시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40대(4.00점), 여성(4.02점),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대(4.01점)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함.

<표 4-4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에서 역할의 중요도(일반국민)

단위: 점

구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	
전체(일반국민)	4.06	4.10	4.10	4.18	3.84	3.80	3.75	3.88	
연령	19세~29세	3.95	4.02	4.09	4.13	3.80	3.70	3.67	3.74
	30대	3.99	4.03	4.07	4.06	3.74	3.62	3.65	3.84
	40대	4.15	4.16	4.14	4.19	3.88	3.89	3.73	4.00
	50대	4.04	4.09	4.04	4.17	3.85	3.80	3.72	3.85
	60대	4.18	4.21	4.16	4.38	3.93	4.04	4.08	3.99
성별	남성	4.05	4.05	4.02	4.11	3.74	3.62	3.67	3.75
	여성	4.07	4.15	4.18	4.25	3.94	3.99	3.84	4.02
거주 지역(1)	수도권	4.09	4.11	4.13	4.18	3.84	3.77	3.75	3.87
	충청권	3.98	4.07	4.11	4.11	3.76	3.81	3.76	3.94
	호남권	4.16	4.08	4.08	4.25	3.86	3.99	3.74	3.92
	대경권	4.07	4.03	4.10	4.17	3.86	3.79	3.90	3.83
	동남권	3.97	4.15	4.04	4.15	3.84	3.79	3.71	3.87
	강원권	3.90	3.97	3.83	4.24	3.90	3.76	3.66	4.07
거주 지역(2)	읍/면	4.01	4.06	4.04	4.12	3.77	3.70	3.69	3.81
	동	4.08	4.11	4.12	4.20	3.86	3.85	3.78	3.91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4.00	4.01	4.04	4.03	3.79	3.79	3.66	3.83
	200~300만 원 미만	4.04	4.13	4.11	4.15	3.75	3.82	3.70	3.82
	300~400만 원 미만	4.05	4.14	4.05	4.18	3.83	3.79	3.88	3.92
	400~500만 원 미만	4.16	4.18	4.15	4.25	3.85	3.83	3.75	3.95
	500~600만 원 미만	4.02	4.13	4.13	4.24	3.90	3.91	3.88	4.01
	600~800만 원 미만	4.04	3.99	4.09	4.17	3.86	3.69	3.57	3.88
	800만 원 이상	4.07	4.01	4.10	4.18	3.92	3.75	3.81	3.71
학력 수준	고졸 이하	4.06	4.13	4.10	4.23	3.85	3.95	3.85	3.93
	대학 이상	4.07	4.09	4.09	4.16	3.82	3.77	3.73	3.86
	대학원 이상	4.00	4.09	4.13	4.18	3.92	3.78	3.75	3.93

자료: 설문조사 결과.

제 5 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현황

- 이 장에서는 프랑스, 호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국가 푸드플랜) 수립 관련한 동향과 추진 체계, 주요내용과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주요국들의 국가별 먹거리 전략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함.³⁶

1. 프랑스

1.1. 최근 동향

- 프랑스는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농식품 정책과 공공 정책의 연계를 기반으로 공공식품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에 따라 2010년에 “농어업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LMAP)”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공식품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식품프로그램(le Programme National

³⁶ 황윤재 외(2018)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일부 참조함.

pour l'Alimentation: PNA, National Food Program)'을 수립·발표함.³⁷ 2010년에 수립된 PNA는 4개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이들 목표를 근간으로 구성된 4개 축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2개 축 등 총 6개 축으로 구성되었음.

- 2010년 PNA 6개 축: ① 모든 국민의 고품질 농식품 접근 촉진(제1축) ② 식품 공급 개선(제2축) ③ 식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 개선(제3축) ④ 프랑스 식품과 요리 문화유산 유지 및 촉진(제4축) ⑤ 식품 R&D 강화(제5축) ⑥ PNA 홍보 강화(제6축) 등

○ 그러나 2014년에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 농업, 식품, 및 임업분야에서 직면한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식품·산림미래법(Loi d'avenir pour l'agriculture, l'alimentation et la forêt: LAAAF)”이 제정되면서, 동법과 2010년 PNA 수립 이후 4년 간의 공공 식품정책의 추진 경험과 새로운 비전을 반영하여 2014년 12월 PNA를 수정하여 발표함.³⁸

○ 2014년에 수립된 PNA는 동 프로그램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존의 6개축을 4개축으로 수정하고 세부 내용도 보다 구체화함.

- 2014년 PNA 4개축: ① 사회 정의(제1축) ② 청소년 식생활 교육(제2축) ③ 식품 낭비 대응(제3축) ④ 지역 먹거리 정착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

³⁷ “농어업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은 농민 소득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 정책 수립 및 농지 감소 대응을 위한 농업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됨. 법령은 공공식품정책의 정의와 실행, 국가식품프로그램의 범위와 함께 프랑스 농업 및 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업 및 임업 분야 실현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프랑스 법률 정보 웹사이트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2521587&categorieLien=id>: 2018 8. 18.)

³⁸ “농업·식품·산림미래법”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측면에서 농업, 식품 및 임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농업 및 농식품 부문의 경제 및 환경적 성과, 농경지 보호, 농식품 정책, 건강, 식생활교육, 임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제4축) 등

- 2010년 PNA와 2014년 PNA의 주요 변화와 특징은 다음과 같음. 2010년에 비해 2014년 PNA는 정책 대상, 내용 및 수단 등이 구체화되면서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이 강조되고, 기존에 공급 관련 이슈의 일부이던 식품 낭비를 별도 축으로 분리하여 강조함.
 - ① 2010년 PNA에서 실행을 뒷받침해 주던 2개축(제5축 식품 R&D 강화, 제6축 PNA 홍보 강화)이 2014년 PNA에서 제외되었으며, 제2축(식품 공급 개선)도 2014년 PNA의 제3축과 제4축으로 나뉘짐.
 - ② 2010년 PNA의 제1축과 2014년 PNA 제1축은 세부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14년 PNA에서 사회 정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요 정책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줌.
 - ③ 2010년 PNA 제3축의 정책 대상을 ‘청소년’ 정책수단(방법)은 ‘식생활’로 구체화하여 2014년 PNA 제2축(청소년 식생활교육)에 반영함.
 - ④ 2010년 PNA 제2축에 식품 공급 개선 관련 사안들과 같이 포함되어 있던 식품 낭비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2014년 PNA 제3축을 수립함.
 - ⑤ 2010년 PNA 제4축을 정책 대상을 ‘지역’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제3축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 농산물 소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4년 PNA 제4축을 수립함.

1.2. 추진 체계

1.2.1. 법령 근거

- “농업현대화법”과 “농업·식품·산림미래법”은 국가식품프로그램 범위, 역할 등을 명시하면서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함. 이중 “농업현대화

법”은 공공식품정책 추진 목적과 정의, 역할 등을 명시하며, 이러한 공공식품정책의 틀 속에서 PNA의 실행전략의 범위를 제시함.

- “농업현대화법”은 PNA가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식문화, 공공급식, 환경·폐기, 지역 등에 관한 실행전략을 제시하도록 명시함.
- “농업·식품·산림미래법”은 PNA와 관련하여 PNA의 역할과 함께 동 프로그램의 수립·추진과정에서 국가식품위원회(Le Conseil National de l’Alimentation: CNA)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표 5-1> 프랑스 농업현대화법 주요 내용: 공공식품정책 및 국가식품프로그램 관련

구분	주요 내용
공공식품정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 조건에서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안전하고 다양하며 충분한 양의 좋은 맛과 영양 품질을 지닌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국민에게 제공 ■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국민의 요구, 제약 및 영양적 필요에 따라 식품섭취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마련
공공식품정책 정의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식품정책은 정부가 국가식품프로그램에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경제상임위원회(higher council of orient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agricultural and food economy), 국가소비위원회 의견 수렴(the National Council of the Consumption) ■ 국가식품위원회(National Food Council)는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에 기여 ■ 정부는 매3년마다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
국가식품프로그램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전략 제공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적정 양과 품질의 농식품에 대한 접근(특히 빈곤인구) - 농식품 안전성 - 인간 또는 동물에 의해 소비되는 동식물의 건강(health) - 미각, 식품 균형 및 다양성, 특정계층의 니즈, 위생규범, 농산물 원산지과 생산방식 및 환경에 대한 농작업의 영향에 관한 교육 및 정보 - 상업적 주장과 소비자 정보 간 형평성 - 농식품 맛과 영양 품질 - 환경을 존중하고 폐기를 제한하는 농식품 생산 및 유통 방식 - 근거리 공급망 개발과 생산자와 가공업자 간 지리적 근접성 촉진 - 공공 및 민간 부문 급식(음식조달업, catering)에서 지역 농산물 공급 - 프랑스 식품 및 음식 문화유산
지방정부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권한기관)은 공공식품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해 제품 생산자, 가공업자 및 유통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자료: 프랑스 법률정보 웹사이트(<https://www.legifrance.gouv.fr>: 2018. 11. 12.) 참조.

<표 5-2>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미래법 주요 내용: 국가식품프로그램 및 국가식품위원회

구분	주요 내용
국가식품프로그램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프로그램은 사회정의, 청소년식생활교육(식교육), 음식낭비 대응을 고려하여 농식품 정책의 목표를 결정 ■ 지방에 정책 관련 명확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 ■ 관련법(공중보건법) 상 영양 및 건강의 정의와 관련 지침을 준수하면서 식품, 지역 및 제철식품 간 또는 식품공급의 영양적 및 감각적 품질 간 균형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 및 정보 분야에서 실천 범주 제안 ■ 국가식품프로그램은 농업생산자, 가공업자 및 소비자 간 근거리 공급망 및 지리적 근접성 개발을 장려하며, 농식품 품질 및 원산지 표시를 바탕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급식에 제철 농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국가식품프로그램과 지역 지속가능농업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조치들은 지역식품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지방정부와 소비자 간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 농업과 식품 품질 발전
국가식품위원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국민 기대 분석, 공개토론(public debate) 조직, 이행과정 모니터링 등에 기여 - 공공논의는 지역경제, 사회 및 환경 위원회에 의해 지역별로 조직 가능
식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건강 국가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국가식품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식품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이 교육 및 지역교육프로젝트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

자료: 프랑스 법률정보 웹사이트(<https://www.legifrance.gouv.fr>) 참조.

1.2.2. 관련 조직

- 국가식품프로그램은 농림수산식품부(minist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를 주무부처로 하고 보건, 소비, 환경, 법무, 교육 등을 소관업무로 하는 다양한 중앙부처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추진됨. 이밖에 국가식품위원회(CNA)가 국가식품프로그램(PNA)의 개발에 참여하고 실행을 모니터링함.

- CNA는 농업, 소비, 보건 분야 장관이 임명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55명의 위원으로 구성³⁹

- CNA는 독립자문기구로 국가식품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수행함. 국가식품위원회는 국가식품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검토·분석하고, 공개토론을 조직하는 등 국가식품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프로

³⁹ 55명의 위원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농업생산자, 운송 및 기술, 유통, 외식, 주요 노조 등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함. 이밖에 식품안전·환경·노동 관련 국가기관, 농업, 보건·의료 분야 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장협회(Association of mayors of France), 지역협회 등 포함

그램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참여함.

- 이밖에 부처 간 먹거리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정·합의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및 모니터링 위원회(Comité national d’orientation et de suivi: CNOS)’, ‘부처 간 집행위원회(Comité exécutif interministériel: CED)’, ‘부처별 워킹그룹(Groupes de travail interministériels: GTI)’ 등의 조직을 운영함.

1.3. 주요 내용: 2014년 프로그램

- 2014년 PNA를 구성하는 4개축은 ① 사회 정의(제1축) ② 청소년 식생활 교육(제2축) ③ 식품 낭비 대응(제3축) ④ 지역 먹거리 정착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제4축) 등임.

1.3.1. 제1축: 사회정의

- 제1축 사회정의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보장과 형평성 해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제1축은 주요 목표와 추진과제의 초점을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상대적 소외 영역(형무소, 병원 및 노인 요양원 등)에 두고 있음.
- 제1축은 정책적 목표를 단순히 식품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양적 충족에 두고 있지 않음. 동 축에서는 영양·위생 등 품질이 보장된 식품의 공급을 위한 방법과 농식품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체계 개발을 모색함. 또한 식품을 사회 복귀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표 5-3>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1축 사회정의

구분	주요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지원과 교육·사회적 지원 활동을 결합한 연합 프로젝트 중점 추진 ■ 식품 기부, 식품관련 직업 등을 매개로 한 사회 복귀와 경제 활동 창출 ■ 관계기관 간 협력 하에 서민 계층 지역에 초점을 맞춘 PNA 활동 추진 ■ 위생·영양적 관점에서 양질의 식품에 대한 접근과 함께 프랑스형 식생활 모델 보존·장려 ■ 2014년 2월 농업·농식품·산림부의 식품 품질 협약의 일환으로 공급 식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체 협약 포함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기대와 필요를 고려한 식품 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취약계층지원기금(FEAD)에서 지원되는 식품 품질(영양·위생) 보장 • 식품지원 관리 단체의 공공지원 대상 한계와 실제 수요에 따라 지원 물량 측정 • 농산물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식품지원 체계 개발 ■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식품 공급 질적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품질 협약: 공급 식품의 영양뿐만 아니라 농식품 생산·가공·유통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제도 ■ 형무소 식품 관련 직업 훈련과정 개발을 통한 직업 복귀 혜택 부여 ■ 형무소 식품 공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조리사 간 교류, 음식물 낭비 퇴치를 위한 활동 개발 등(법무부 협력) ■ 병원 및 노인 요양원 등 단체 급식 참여 공공 관계자 관심 제고

1.2.2.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 제2축은 학교 수업, 방과후 활동(과외활동), 학교급식 등을 활용한 식생활교육과 바른 식습관 홍보 추진을 주요 목표로 함. 또한 식생활교육을 식생활·식습관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식품 분야 직업에 관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제2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학교 간 협력과 농업·사회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함. 또한 식품산업 분야 미래 인력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인식하여 직업 훈련 및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식생활교육 기반 구축의 경우 디지털(온라인) 활용이 확산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온라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5-4>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구분	주요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업·과의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식생활교육과 바른 식습관 홍보 ■ 학교급식을 활용한 청소년 식생활교육 지원 ■ 젊은 계층 식품 관련 직업교육 추진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방 정부(교육부, 교육감 등)과 학교 식생활교육 담당 교사 간 협력 ■ 온라인 교육 및 교육 방법 자료 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교육 도구 제공 ■ 식품산업체가 식품 관련 가이드(정보)를 학교에 전국적으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을 위한 과일’, ‘급식의 즐거움’, ‘맛 수업’ 등 ■ 농업-사회 간 연결을 위한 활동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및 식품 분야 전문가 방문, 교육용 정원 설립 등 ■ 식생활 다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세계 식문화에 대한 교육 ■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직업 훈련 실시(단체 급식 조리사) ■ 교육 및 학생 대상 박람회 등을 통해 식품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1.2.3. 제3축: 식품 낭비 대응

- 제3축에서는 2025년까지의 식품 낭비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캠페인, 홍보 등과 식품 기부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표 5-5>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3축 식품 낭비 대응

구분	주요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차원에서 식품 낭비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여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낭비를 202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1인당 연간 20kg(미개봉 포장식품 7kg 포함) 음식 쓰레기 배출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식품 낭비 협약(농업·농식품·산림부)의 일환으로 공모전 개최 및 우수 사례 등 활용·확산 ■ 국가 음식 낭비 투쟁일(10월 16일)을 중심으로 식품 낭비 대응을 위한 활동의 결집 유지 ■ 폐기 제품 기부를 편리하게 하고 이러한 제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복귀 활동 증진

1.2.4. 제4축: 지역 먹거리 정책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

- 제4축은 지역 먹거리 이용 활성화 및 가치 증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단체급식(공공급식)을 식품 분야 사회정의 실현 및 지역 먹거리 이용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 플랫폼 개발,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함.

<표 5-6>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4축 지역 먹거리 정책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

구분	주요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급식에 근접지역 제품 40% 사용을 목표로 설정(2017년),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근거리 농산물 공급 플랫폼 개발과 공급 농식품의 질적 개선, 식품 낭비 대응 등 우선 추진 • 단체급식은 식품 공공정책의 중심이며, 식품 분야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양질의 식품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 • 근거리 농식품 공급, 농식품 다양성 및 계절성 유지, 농촌 지역 경제·사회적 발전 보장의 중요 역할 수행 ■ 농업 생산-경제-환경 연계한 추진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식품 프로젝트 개발 • 기존의 관련 대책(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역 계획- PRAD 등)들과의 연계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 및 관련인 등이 결합하여 지역 생산 가치 증대, 지역 재배치 및 식품 주변의 사회적 연결 창출 논리로 지역 이해 관계자의 기대치 충족 ■ 단체급식을 위한 근거리 농식품 공급 플랫폼 개발, 근거리 공급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제공 ■ 원산지 확인 표시를 통한 식품 유산 가치 증대

1.3. 주요지표⁴⁰

- 제1축(‘모든 국민의 고품질 농식품 접근 촉진)에서는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학교 식생활교육 및 지원, 의료/요양시설 급식 개선 등의 추진과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함.
 - 기부금액, 지원 대상자(혜택자) 수 등 대부분 정량지표를 활용하나, 학교 급식 식재료 관련하여 정성지표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활용함.

⁴⁰ 2010년 PNA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정리함(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4).

<표 5-7>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1축

정책 영역	주요 지표
제1축 모든 국민의 고품질 농식품 접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기부 활성화(식품 및 현금 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기부 웹사이트 방문자수 - 식품 기부자 수 - 식품 총 기부금액 - 식품 지원 받는 지방 또는 공동체 수 ■ 식품 지원 조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지원 참여 협회 ■ 공공텃밭 개발·공유 및 사회편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텃밭 조성 지역 ■ 음식 낭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된 프로젝트 수 - 가치화된 식료품 양 [학교 식생활교육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과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신청 학생 수 ■ 학교급식 품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부적합률(또는 적합률) ■ 학교급식 연계 식생활교육(<즐거운 학교급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학교급식> 현장에 서명한 학교 수 ■ 영양과 경제성 고려한 학교급식 식재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만족도 - 대학식당 친환경 농산물 구입 수준 평가 ■ 대학 영양 교육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실시 건수 - 전문영양 상담건수 ■ 학교급식 종사자 교육·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교육 참여 지자체, 개인, 학생식당 수 - 훈련받은 검사관(지자체) 수 [의료/요양시설 급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음식 제공으로 노인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후 식판(잔반 양 평가) ■ 식단·식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 사례 활용하여 급식 개선한 병원(양로원) 수 ■ 입원환자 신선과일 채소 제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복지, 비용/효용 비율, 삶의 질 등 평가 [노인 식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식사배달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만족도 측정→수혜자 행동 측정 ■ 식품 관련 정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사이트 배포 정보 유용성

○ 제2축(‘식품 공급 개선’)의 경우 농업 생산과 품질, 위생·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이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

- 식품 공급 개선 프로그램(정책·사업 등)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채소 관련 활동 경험 기관 수, 환경농업 인증, 농산물 직거래 등 참여 농민 수, 농약 감소 참여 농장 등 참여 규모를 측정함
- 식품위생 향상 수준을 관찰하기 위해 외식업체 위생검사 부적합 판정 건수를 활용하며, 품질 개선에 관한 활동과 개선 수준을 관찰하기 위해 품질보증에 관한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식품 공급 비율과 공공급식의 경우 품질(맛)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
- 이밖에 생산단계에서의 농식품 품질에 관한 다양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혁신적 농업생산 방식의 수 또는 개발·등록된 채소 품종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함.

<표 5-8>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2축

정책 영역	주요 지표
제2축 식품 공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보증에 관한 단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협약 체결 건수 - 단체협약에 의한 식품 공급비율 ■ 기초생산품 접근 개선(건강식품 판매 자판기 설치,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판기 수 - 채소 관련 특별활동 경험 기관 수 ■ 공공급식 품질(맛)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식품위생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업체 위생검사 부적합 판정 건수 ■ 지속가능한 생산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 인증 참여 농민 수 - 농약 감소 참여 농장(시범 및 실험 농장) - 수산물 환경마크 발행 수 ■ 소비자 제품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 대상 ■ 농업 생산방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된 혁신적 농업생산방식 수 ■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채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품종 수 ■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직거래 참여 농민 수 ■ 음식물 낭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낭비 관련 연구 프로그램 - 자발적 협약 수 - 관련 포탈 방문자 수 및 교육교재 다운로드 수, 종이교재 배포 수

- 제3축(‘식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 개선’)은 주요 지표로 교육을 통한 인력 개발 현황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함. 농교육 부문의 자격증 취득자 또는 농업 전공 고등학생 수를 지표로 활용하며, 기업-농업 고등학교 또는 식품분야 고등학교 간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 기업(전문가) 규모, 관련 프로젝트 규모 등을 검토함.

<표 5-9>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3축

정책 영역	주요 지표
제3축 식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 개선	[농식품 분야 미래인력 육성] ■ 농교육 부문 농업관련 직업, 기술 교육 - 관련 자격증(중등기술사) 취득 학생 수 - 농업 전공 고등학생 수 ■ 기업-농업 고등학교 연계 - 프로젝트 수, 협력기업 수 ■ 식품분야 고등학교 연계(농업, 외식, 관광(숙박) 등) -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 수, 프로젝트 추진 활동

- 제4축(‘프랑스 식품과 요리 문화유산 유지 및 촉진’)의 경우 지역 식문화 유산 가치 보전·확산에 관한 정책·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함.
 - 성과지표를 통해 지역 음식·식품 현황(지역 음식(요리법) 수)과 외식업체 등에서의 지역 식문화 활용 현황을 점검함(전통식당 우수 요리사 칭호 수여자 수, 지역 농수산물 사용 및 제공 인증 식당 수 등).
 - 지역 식문화 유산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현황과 성과를 측정함(지역 식품관련 장인 프로모션 수, 관련 행사 참여 협력기관 수, 관련 웹페이지 접속자수 등).

<표 5-10>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4축

정책 영역	주요 지표
제4축 프랑스 식품과 요리 문화유산 유지 및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식문화 유산 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음식(요리법) 수 - 지역 식품관련 장인 프로모션(홍보) 수 - 유럽문화유산의 날 행사 참여 협력기관 수(전통식품) - 전통식당 우수 요리사 칭호 받은 요리사 수 - 지역 농수산물 사용 식당 수 - 지역 우수맛집 정보 제공 웹페이지 접속자수 및 지정 맛집 수 - 전통음식 제공 인증 식당 수

2. 호주

2.1. 추진 동향

- 호주는 2010년 7월 총선 과정에서 노동당 정부가 국가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총선 이후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함.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관한 수립을 위한 절차는 농무부 주관 하에 정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2013년 5월 호주 최초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National Food Plan’이 수립·발표됨. 그러나 호주 먹거리 종합전략(‘National Food Plan’)은 2013년 9월 총선 결과 노동당이 정권 유지에 실패하면서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10년에 시작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절차는 2011년 이슈 보고서(issue paper)를 통해 광범위한 관련 업계 및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청취 결과 보고서 작성, 녹색(Green Paper) 작성을 거쳐

2013년 최종 계획이 발표됨.

- 2013년 5월 ‘National Food Plan’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9월에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총선 결과 자유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2.2. 추진 체계

-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은 ①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행정기관과 ② 자문기관인 식품정책실무그룹(‘Food Policy Working Group’)을 통해 이루어짐.
 - 연방행정기관 중에서 농무부가 호주 국가 푸드플랜 수립의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이밖에 재무부, 외교통상부, 기후변화·에너지효율부 등을 포함한 총 13개 연방정부 행정기관들이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 참여함.⁴¹
 - 농무부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전략적 조언을 얻기 위해 식품정책실무그룹을 구성함. 실무그룹은 2명의 소비자 및 건강(health) 관련 대표자를 포함하여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Federation’) 및 호주 식품잡화위원회(‘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등 총 13명으로 구성됨.
- 이밖에 호주 정부는 국가 푸드플랜 실행 과정에서 자문 및 조정기능을 담당할 호주식품위원회(‘Australian Council on Food’)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정권 교체와 함께 국가 푸드플랜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동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구성되지 않음.

⁴¹ 농무부, 기후변화·에너지효율부, 교육고용노사관계부, 재정·규제완화부, 외교통상부, 가족·주택·지역사회·원주민부, 호주외곽·지역개발·지방정부부, 보건·노인복지부, 인프라·교통부, 총리내각부, 혁신·산업·과학·토착민부, 지속가능성·환경·수자원·인구·지역사회부, 재무부 등

- 호주식품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Food’)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실행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전략의 기획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정부 대표, 산업계 대표, 공중보건 대표, 지역사회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식품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기관·단체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프랑스와 달리 ‘National Food Plan’의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음.

2.3. 주요 내용

- 호주 ‘National Food Plan’은 ‘지속가능하며, 경쟁력·회복력이 있는 식품공급을 통한 식품접근성 보장’을 비전으로 하여 2025년을 목표 달성 기한으로 두고 ① 수출성장 ② 산업번영 ③ 국민 ④ 지속가능한 농식품 등 4개 영역과 이들 영역과 관련된 16개 장기목표와 장기목표별 2~8개 세부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함.
 -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들은 농수산업, 교육, 인력·기술, 환경·에너지, 건강, 인프라·운송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함.⁴²
 - 2025년 장기 목표와 함께 5개년 단기 목표도 제시함.
- 호주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출 성장 영역은 2개 장기 목표, 4개 단기목표, 12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됨. 농식품 수출과 교역, 투자 강화 등을 장기목표로 하여 농식품 시장 자유화 확대, 시즌 및 신규 시장 유지 및 확대,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전략을 제시함.

⁴² 미국 USDA 해외농업지원국 웹페이지(https://gain.fas.usda.gov/Recent%20GAIN%20Publications/National%20Food%20Plan_Canberra_Australia_5-29-2013.pdf; 2018. 10. 15.)를 참조함.

<표 5-11>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수출 성장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 농식품 수출 45% 증가 (GDP 증가에 기여)	수출 기회 증가를 위해 국제 농식품 시장 자유화 확대 실현	1.1. WTO 다자간 협상 진척 1.2. 지역 및 양자 간 무역 협상 추진 및 이행 1.3. 목표지향적·효과적·지속적 양자간 협상 통해 무역 장벽 감소
	기존 및 신규 시장 유지 및 확대	1.4. 기술적 시장접근 협상 해결 노력 1.5. 국제표준개발 지원(12. 6 참고) 1.6.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 1.7. 호주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무역 파트너 요구 충족 (11.1, 11.2, 11.3, 11.7 참고) 1.8. 무역장벽 대응, 무역 기회 활용 가능 시장 정보기관 조직 (특정식품산업 대상 전담시장접근연락관 마련)
2. 농식품 무역, 국가간 투자관 계 강화, 호주 이익 증진 역 량 강화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특히 아시아)	2.1. 호주 외교 네트워크 자원을 확대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농식품 관련 시장 접근 확대 - 해외 농업 상담사 확대하여 주요·신흥 시장 참여 확대
	국제 및 지역 공급망을 바탕으로 호주 식품 및 기타 서비스 회사의 참여 강화(아시아 지역 중점)	2.2. B2B 연결망 구축 및 업체간 관계 강화 위한 산업계 지원 2.3. 아시아의 신식품 수요 및 선호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산업계와 협력 - 아시아 식품 시장 연구 기금 설립 - 아시아 시장 개척 연구: 미래 아시아 식품 수요 보고서 시리즈 2.4. 다양한 시장 대상 농식품, 서비스 및 기술 등에 대한 고객 중심 무역 활성화 서비스 제공

- 산업번영 영역은 10개 장기 목표와 16개 단기 목표, 56개 추진 전략을 제시함. 이들 추진 전략은 고품질·안전 식품 공급, 식품공급망 개선, 산업 인력 육성, 공공 인프라 투자,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농산업 번영을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을 제시함.

<표 5-12>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산업변영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3. 고품질, 혁신, 안전, 지속가능한 식품·서비스 기술을 반영한 세계적인 식품 브랜드 보유	고품질,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서의 호주의 국제적 명성 강화 (특히 아시아 지역)	3.1. 타킷 마케팅, 홍보, 적절한 브랜드 작업을 위해 호주 기업과 협력 (15.16 참조) - 업계와 협력하여 브랜드 호주 글로벌 식품 전략(Brand Australia Global Food Strategy) 개발 및 제공	
		3.2. 호주의 세계적 식품 안전 관리 및 생물안보시스템 홍보	
4. 농업 생산성 30% 증가	식품공급망 혁신 투자	4.1. 세계적 농촌 R&D 시스템 유지·개선	
		4.2. 민간/공공 부문 참여 통한 효과적 농촌 평생교육 시스템 (extension system) 장려	
		4.3. 가능한 폭 넓은 경제적 조치를 활용하여 식품업체 혁신 장려(예: R&D 세제 혜택, 지적재산권시스템)	
		4.4. 투자, 협업, 프로그램 및 규제 개선 등 타깃 활동 지원	
		4.5. 사람환경에 안전한 기술 및 노허우(생명공학 포함) 채택을 위한 장애물 제거	
		4.6. 생산부문, 공급체인 및 최종소비자 니즈 반영한 전략적 요구에 연구, 개발 및 extension 투자 집중	
	농업온실가스 배출을 감소 하면서 생산자들이 저탄소 경제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7. 국내 및 국제 탄소 시장에서 농민 기회 창출	
		4.8. 생산자 및 토지소유자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또는 탄소농작업활동(Carbon Farming Initiative)을 통한 탄소 저장에 인센티브 제공	
		4.9. 연구, 시도(trialling) 및 extension 요소에 대한 정부 투자가 완화 및 적응을 목표로 하는지 확인	
		4.10. 기후변화 대비(적응)하는 식품업체 및 지역사회 역량 구축	
	가문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경제 변화에 대한 식품·농업 관련 업체의 적응 능력 및 회복력 제고	4.11. 가문과 기타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 지원	
		4.12. 정부 위기 지원 기금에 대한 의존에 벗어나 위기관리 및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4.13. 정부 개입이 적응을 방해되지 않도록 보장	
		4.14. 식품업체와의 협의·협력 등 농업 대상 국가적응체제 개발	
식품산업 투자 장려	식품산업 투자 장려	4.15. 식품산업 국내외 투자 장려 - 투자 홍보 및 유인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투명성 제고	
		사업 투입자원에 대한 접근 지원	4.16. 사업 투입자원에 대한 잘 규제되고 경쟁적인 시장 장려
			4.17.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식품 및 동물 유전자 자원에 대한 접근 촉진
5.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통해 규모와 역량을 증진 하면서 호주 식품제조산업 혁신 증가	식품공급망 혁신에 투자	5.1. 훈련, 개선된 네트워킹, 협력을 통해 식품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산업혁신구역 마련(4.3-4.6 참조)	
		5.2. 호주 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의 2억3천6백만달러 규모 산업전환연구프로그램 첫단계를 통해 식품제조업 혁신 및 성장 지원	
6. 학교 졸업 후 자력취득 비율 증가로 호주 농수산업 인력 기술 기반 확립	국가 훈련 및 인력 프로그램, 산업관계시스템 지원을 통해 숙련·비숙련 인력 육성 경로 개선과 산업인력 진입 지원	6.1.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식품산업 훈련 및 기술 개발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장	
		6.2. 토착민, 청소년, 이동가능한 노년층을 포함하여 더 많은 호주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식품산업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	
		6.3. 식품산업 노동 수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주민프로그램 개선 가능성 확인	
		6.4. 기술 및 인력개발 활동을 통해 식품산업 내 아시아에 대한 인식 조성(2.2 참고)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7. 비용효율적·효과적으로 시장에 식품을 수송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지원하면서, 호주의 인프라와 생물안보시스템은 성장하는 식품산업 지원	공공인프라 투자 외래해충 및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신속한 생물안보시스템 유지	7.1. 인프라 계획 및 기타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제공 개선을 위해 식품산업 및 소비자 수요에 관한 자료기반 구축 2025년까지 식품산업 향후 인프라 수요 분석 7.2. 국가 인프라 우선순위 결정, 계획, 투자와 규제에 식품공급망 필요성 적절히 고려 7.3. 지역사회를 위한 식품 연관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민간투자 및 효과적 공공-민간 파트너십 장려 7.4. 규제 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동식물 건강상태를 지원하여 호주 식품산업 고생산비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통합된 생물안보 시스템이 핵심 요소) 보다 통합·조직화된 내륙 생물안보시스템 구축 새로운 동식물 및 질병 침입에 대응하여 위험-수익기반 국가근절전략 시행
8. 생산성 향상 및 혁신 추진, 글로벌 시장과의 관계 창출하며, 식품산업 디지털경제 참여 증가	-	8.1. 식품업체와 소비자가 국가광대역통신망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도록 장려
9. 사업비 절감으로 호주가 세계에서 효율적 규제 국가 상위 5위에 포함	보다 효율적이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식품산업 규제를 통해 사업 수행 용이성 향상 식품 및 식품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력 및 효율성 촉진	9.1. 지방(주 및 준주)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규제 체제의 효과성 개선 9.2. 지역사회에 이익 제공하는 산업의 규제 부담 절감 노력 9.3. 모범 사례 규제 영향 평가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규제 부담 절감 노력 9.4. 식품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유효성 지속 검토 9.5. 식품공급망 전반에 대한 생산성위원회 검토 9.6. 식품공급망을 통한 경쟁 및 공정거래 촉진(주로 강력한 경쟁 및 소비자법, 독립적 시행을 통해) 9.7. 식품업체가 생산적·효율적 공급망을 창출하는 관계와 행동규범을 수립하도록 장려, 식품공급망 관계 구축 9.8.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경쟁법에 부합되도록 산업 자율규제 노력 지원과 모니터링
10. 외딴 지역 거주자 및 취약계층 대상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높은 수준의 식품보장 확보	호주 식품공급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기에 충분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지역 및 수입식품 포함 비상상황에서의 식량 공급 연속성 가장 취약한 가정 및 외딴 지역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및 지역사회 식품불안정성 감소	10.1. 식품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는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식품산업 유지 10.2. 식품수입 허용을 위한 공동이용시장정책 접근법 유지 10.3. 중요 인프라 탄력성 전략하에서 식품공급망 탄력성 향상 위해 업계와 협력 10.4. 강한 경제 유지와 와 취약계층 고용 기회 개선 10.5. 소득지원 및 개별식품보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10.6. 식품 관련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가구 예산과 우선순위 지출을 돕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지속 10.7. 정부보조금 및 과제 시스템을 통해 식품불안정을 경험한 사람들을 돕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 제공 10.8. 토착민 공동체에 영양,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증진하고, 국가와 지방(주 및 준주)정부 프로그램 연계 강화를 위해 원주민·토레스해협 섬 거주민 만성 질병 기금 하에서 계획 시행 10.9. 외딴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식품보장을 위한 국가전략 검토 및 발생하는 변화에 필요한 조치 이행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0.10 위험 직면 인구를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건강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식량보장과 소비 모니터링
		10.11 지역사회상점허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북부 외곽지역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11. 호주 수출품의 평판을 제고 하면서 호주는 식품안전 확보 세계 상위 3개국으로 인식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지속 검토 및 개선	11.1. 중앙 정부, 지방(주 및 준주)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접근법 유지
		11.2. 활용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고 적절한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식품기준 개발 및 유지
		11.3.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법 지속 선별적 식품안전 개입 - 자료 수집 및 이해의 효율성 추구, 식품안전 R&D 우선순위 설정 - 정보, 자료, 모범사례 공유 위해 국가 및 국제 협력 파트너십 및 연계 구축
		11.4. 식인성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며, 잠재적 이슈를 예측하고 조사하는 역량 강화
		11.5. 명확한 제품 정보,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안전 취급 관련 소비자 홍보·교육
		11.6. 국제적으로 일관된 식품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위험 및 증거 기반 국제 식품 기준 개발에 참여
		11.7. 위해식품의 효율적 시장 회수를 포함한 식품안전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정부 간 협력 파트너십의 지속적 개발과 유지

○ 호주 먹거리 종합전략의 대부분의 영역들이 산업에 관련된 반면 국민 영역은 3개 장기 목표, 6개 단기 목표, 17개 추진 전략을 통해 식품 정보 제공과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식품 관련 결정을 지원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그러나 국민 영역에서 호주 정부 추진전략의 범위는 국내(‘국민’)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원조를 통해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 식품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들은 식품표시 보완·개선에 관한 사항이 중점을 이루고 있음. 이밖에 지역사회의 식품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자 함.
- 어린이들의 식품 생산에 대한 이해 증진이 주요 장기 목표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자원 개발, 학습능력개발 등을 지원함.

<표 5-13>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국민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2. 식품 관련 결정 위해 필요한 정보의 국민 제공	식품선택 지원 정보 즉시 이용 가능	12.1. 의사결정을 가이드하는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식품표시 정보 개선
		12.2. 소비자 가치와 연계하여 식품표시를 하도록 업계주도 자기 규제 및 공동규제 접근법 지원
		12.3.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및 산업 이해 향상 - 원산지의무표시를 모든 비포장 1차 식품으로 확대 고려 - 공급업체 위험 행위 수준과 성격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 준수 및 집행 프로그램 발전 - 2015 호주 소비자 조사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반응 평가
		12.4. 사전시장 승인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및 비규제 조치 적용 방법에 대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
		12.5. 식품표시 논리에 대한 정부의 합의된 조치 이행: 식품 표시법 및 정책 검토
		12.6. 소비자에게 추가 가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표시를 보완하는 사업계 자발적 움직임 지원
	선택에 영향을 주고, 사회망 구축하는 지역사회 식품 관련 활동 참여 기회 확대	12.7. 새로운 보조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식품관련 활동 수립·관리 지원
		12.8. 조직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정보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식품활동 지원 - 지역사회식품활동프로그램에 기금 지원
13. 호주 어린이의 식품 생산에 대한 이해 증진	교사들에게 농식품에 관한 교육 자료 제공	13.1. 호주 교육과정 내 농식품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 및 전문학습능력 개발 인력자원 개발에 투자
14. 개발도상국 농민의 신농업기술 접근을 지원하여 세계식량안보에 기여	빈곤 감소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효과적인 개발 파트너 역할 지속	14.1. 개발도상국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및 개발 원조 제공
		14.2. 개발도상국 식품생산 증가 위해 R&D 전문 지식 공유
		14.3. 호주 원조규모를 2017-18년까지 국민 총소득의 0.5%로 증가 시켜서 2011-11년 수준보다 두배 이상 규모로 증가
		14.4. 국제 농업연구 파트너십 강화로 세계 경제 개발 및 식량안보 지원
	개발도상국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식품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계 농식품시장 추가적 개혁	14.5. 국제무역포럼을 통한 모든 국가의 세계무역체제 규칙 준수 지지
		14.6.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함께 적절한 국제, 지역 및 국가 경제 및 무역 정책지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위기식품지원 지속	14.7. 개발도상국 세계 시장 참여 지원 위한 무역 관련 개발 원조 제공
		14.8. 위기상황 긴급식량 원조가 가능하도록 국제 인도적 구호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금 제공

○ 호주 먹거리 종합전략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영역을 통해 농식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음식물 쓰레기 감소 등 2개 장기 목표와 4개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개 추진 전략을 제시함.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농식품을 생

산하기 위한 현장 적용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관련부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 1인당 음식 쓰레기 감소를 위해 폐기물을 감소하고 자원화하는 정책·사업의 시행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식품 프로그램도 1인당 음식 쓰레기 감소를 위한 주요한 추진 전략으로 활용함.

<표 5-14>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농식품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5.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과 생산성 및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적 관행 채택	지속가능, 혁신적 관리기법 채택하는 생산자 및 어업 경영체 수와 지역 증가	15.1. 'Caring for our Country'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혁신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생산자 지원 자연 자원 관리와 관련된 농업, 지역사회 및 기타 그룹의 지식과 역량 증대 -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장 관행의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기업, 기관, 부문별, 시장 및 공급망 기반 활동 협력
		15.2. 다부문 토양 연구, 개발 및 extension 전략 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연구 투자
		15.3. 지속가능한 식품생산과 토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15.4. 국가 물 계획과 국가 수질 관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주 및 준주)과 지속 협력
		15.5. 농장 단계와 이후 단계 물 사용 효율을 위한 개선을 포함하여, 1,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the Future) 계획에 대한 개혁을 계속하여 전개
		15.6. 이 계획의 지속가능 부문 제한 조정 메커니즘과 일치시키면서, 지방정부(주 및 준주)와 협약을 통해 머레이-달링 유역계획 이행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농장 관계 효율을 2024년까지 실시
		15.7. 곤충 수분에 관한 연구에 계속 투자하고 (벌을 해치는) 바로아 응애의 호주 정착에 대응하는 꿀벌산업과 수분지속전략 (Honey Bee Industry and Pollination Continuity Strategy Should Varroa Become Established in Australia)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해주체들과 협력
		15.8. 새로운 침입을 관리하기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잡초 및 해충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 시행
		15.9.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수산업과 해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어획 가능한 어류 어획량과 방법 규제
		15.10. 'Caring for our Country' 프로그램을 통해 - 혁신 촉진 범위 확대와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어민들이 지속가능하고 환경영향이 적은 방식을 채택하도록 지원 - 도시 수로와 해안 환경 복구·유지 활동에 투자
	호주 자연자원 기반 관리에 있어서 산업계와 사회의 연대와 참여 확대	15.11. 자연자원 관리 이슈 대응, 역량 강화, 계획 수립, 의식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 Landcare(주, 호주 토지보호 관련 기구), 농업시스템그룹,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계속하여 활성화하고 투자
		15.12. 자연자원 관리 성과를 실현하는 Landcare와 다른 단체들에 조언을 제공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력자들의 네트워크 지원 - Landcare의 조력자들은 농업연수와 식품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들과 상호작용하며 활동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5.13. 산업전반의 국가 지속가능성 우선순위에 관한 정부 자문을 제공 하는 지속가능농업자문위원회 설립 - 육지 관리 및 천연 자원 관리에 관한 조언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National Landcare Council(국가토지보호위원회) 지원
	지속가능성 설명과 자연자원에 대한 이해 제고 개선	15.14. 환경정보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경정보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국가계획 시행 15.15. 토지이용, 토양, 지표 표지, 잡초, 유해동물, 토지관리 관행 및 자원 사용자의 동기에 관한 자료와 정보 수집, 분석, 배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조사에 투자 15.16. 농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을 포함하여 호주의 청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준 높은 자격(장점)을 명확히 찾아내고 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농업계와 협력(추진 경로 3.1 참조) 15.17. 생산 관련 잔류 화학 물질 잔류량 평가와 최소화 위해 산업계와 협력 15.18. 영연방 관리 어업에 대한 어업현황보고서 계속 발표
16. 1인당 음식 쓰레기 감소	1인당 음식 쓰레기 감소	16.1. 국가 폐기물 정책 시행: 폐기물 감소, 자원화 16.2. 지역사회 식품 프로그램 이행

3. 영국

3.1. 추진 동향

- 영국은 ‘농업·식품 정책위원회(Policy Commission on the Future of Farming and Food)’가 2002년 농업·식품 미래 보고서(Farming & Food: a sustainable future)를 발표하면서 농업 부처를 통합한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를 수립하여 환경, 농식품, 농촌정책을 통합한 농업·농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함.
- 이후 2007-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영국의 푸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만,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기존의 푸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일련의 검토·논의 과정을 거쳐 2010년

에 통합적 농식품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Food 2030’)을 발표함.

- 영국 국가 푸드플랜은 농식품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하에 수립되었으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푸드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 및 관련 목표와 실행계획을 제시함.
- 영국 정부는 2007년 고든브라운 총리(노동당) 취임 이후 글로벌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영국 푸드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2008년 점검 결과를 담은 보고서(‘Food Matters: Towards a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이하 Food Matters)를 발표하였으며, 관계기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에 의한 폭넓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2010년 국가 푸드플랜(‘Food 2030’)을 발표함.
- 그러나 호주와 유사하게 푸드플랜의 체계적·지속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2010년 푸드플랜 수립 직후 보수당(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함.
- 영국은 총리(국무조정실) 주도의 논의·검토과정을 거쳐서 국가 푸드플랜의 방향을 정립한 후 DEFRA를 주무기관으로 하여 실질적인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3.2. 추진 체계

3.3. 주요 내용

- 영국 ‘Food 2030’은 생산, 건강, 환경 등 농식품 관련 6개 영역에 걸쳐 실행 주체별 실행계획을 제시함.
 - 6개 영역은 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② 회복력있고, 수익성·경쟁력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③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④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⑤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⑥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등임.
 - 영역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면서 개별 계획별 실행주체를 제시하여 먹거리 종합전략의 실질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함.

- 영국 ‘Food 2030’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를 장려’하기 위해 소비 단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사업 등을 제시함. 대체로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품 선택과 농식품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함.

<표 5-15>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실행계획	실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가 있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언, 정보 등 지원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정보 및 조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통해 정보를 찾고 격차(갭) 문제 해결 - 식생활 정보 웹사이트(eatwell)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에 관한 명확한 정보와 조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인성질병 추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표시 - 고열량식품 및 고염분 식품 1회 제공량 저감 - 어린이 대상 식품 마케팅 - 포화지방 및 당의 함량 및 소비 저감 - 건강한 식품 소비 증가 -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메시지 구성 - 외식 메뉴 영양정보 - 적정열량 밸런스 실천과 유지에 관한 인식 제고 	정부 산업계 규제기관

실행계획	실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성에 대한 공공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시스템에 대한 위협 효율적, 신속하게 관리 - 식품 안전 준비와 조리에 관한 공공 인식 캠페인 지속 	정부 산업계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식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더 큰 수요 창출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작물재배를 위한 토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임시대여(meanwhile lease) 실시(토지 소유주와 지역사회 그룹 간 임시로 식용작물 재배를 할 토지사용에 관한 지역 파트너십 활성화) - 토지 소유주와 식용작물 재배를 할 토지가 필요한 지역사회 그룹 간에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토지뱅크를 위한 실현가능한 연구 지원 	정부 제3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생산과정에 관한 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로 65,000명의 학생, 학부모, 직원들이 작물재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텃밭프로그램(Growing Schools Programme)에 추가 자금 지원 - 식품생산자와 산업계가 더 많은 소비자 교육 제공(특히 어린이 대상) 	정부 산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준비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교들이 요구되는 영양기준을 만족하는 식품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급식을 섭취하도록 장려해야 함. 모든 학생은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활기찬 생활습관(라이프스타일)과 정서적 건강과 웰빙을 실현하는 건강한 학교에 다녀야 함. 조리과 식품 준비기술은 이미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음. 우리는 이를 다음을 토대로 실현가능함. - 지역사회 그룹들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조리과 식품관련 기술 향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함. 예를 들면 Cook4Life 계획 등. - 식품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의 마케팅과 교육을 통한 지원. 예를 들면 레시피 카드 제공, 매장 내 시연행사 등 	정부 제3부문 산업계

- ‘회복력있고, 수익성·경쟁력있는 푸드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계획은 로컬푸드(지역 농식품) 이용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위기 대응 능력 마련,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사업들을 제시함.
 - 로컬푸드(지역 농식품) 이용 확대를 위해 소규모 지역업체의 공공부문 식품 조달 장려, 직거래를 확대시키고자 하며, 산업적 관점에서 경쟁력·효율성 향상, 규제부담 완화 등을 도모함.
 - 식량안보 등 위기(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조성, 위기 모니터링과 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을 실행계획에 포함함.
 - 이밖에 원산지 및 환경 복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식품표시 개선, 환경,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생산을 장려하는 보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표 5-16>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회복력있고, 수익성·경쟁력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실행계획	실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효율성 향상 	식품,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안정적 세계시장 조성·보호 	WTO, D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경우 자율협약 등 규제보다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선된 규제 원칙을 적용함. 불필요한 규제를 단순화하거나 제거하며 업계와 파트너십으로 협력함. 규제적인 결과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면서 감독과 집행의 행정적 부담을 저감시킴. 	정부 산업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격에 대비한 국가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압력에 대응하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투자를 실시함. 업계의 지속적인 계획들을 조정함. 	정부 산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공급체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공급망에서 수익과 리스크가 보다 공정하게 분포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지역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보호식품 제도인 'EU Protected Food Name Scheme'의 활용을 장려, 지속가능한 농산물 직거래시장('farmers' markets)과 다른 형태의 직거래 매장들을 발전시킴. 	정부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적 자본감소, 자원 부족으로 인한 위협·위험요인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산업은 공급망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리스크를 관리함. 기후의 잠재적 변화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들이 정부에 보고됨 정부는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대한 미래 위협과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여 찾아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식품표시 규정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하고 애매하지 않은 원산지 표시(라벨) 환경과 복지 관련 정보 개선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식품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지역 업체들과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 부문 조달 계약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면 계약을 소규모로 분할하는 방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인증)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을 보호하고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농민과 생산자들을 위한 보상(표창recognition) 실시 	산업계

-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를 위한 실행계획은 농어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을 실시하며, 국내외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지원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표 5-17>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실행계획	실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이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경쟁적인 산업과, 국제무역과 세계경제를 왜곡하지 않는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함.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가하는 국제 수산물 수요 지원 	

실행계획	실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IUU) 규제와 항만국 통제(IUU fishing regulations and Port states Controls)를 이행하고, 대서양참치위원회(ICCAT), 야생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 의한 보전을 개선함으로써, 아프리카어업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frican Fisheries)을 통해 어업의 세계적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를 향상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바이오연료(바이오에너지) 생산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과 EU 수준에서 직간접적 영향에 모두 대응하는 바이오연료/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개발하고 이행함. - 바이오연료/바이오에너지 규정이 연료, 식품과 사료 부문 간 조정이 가능 하도록 충분히 신축성을 갖도록 함. 국제농업기구(FAO)와 다른 국제 활동 정보를 제공받는 예측식품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함. - 2014년까지 EU 바이오연료/바이오에너지 규정과 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에 관한 위원회 제안들을 위원회 주도로 검토하여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대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농업과 토지사용을 위한 신기술과 기법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품 혁신 플랫폼'(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Innovation Platform)을 통한 지식 전달을 향상함. 	정부 연구위원회 산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기술을 보강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며 기술 개발과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계, 교육 제공기관과 정부를 위한 농업기술행동 계획(Agriskills Action Plan) 	산업단체 정부 교육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체인 관계, 시장 경쟁력 및 대응능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억 파운드(약 8천 940억 원)의 RDPE 기금 지원 - 과일채소태스크포스(Fruit and vegetable task Force), 돈육공급망태스크포스(Pigmeat supply Chain task Force), 유제품공급망 포럼(Dairysupply Chain Forum)을 통해 활동함. 	산업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에서 식품 생산과 소비가 생태계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활용함. - 영국에서 토지를 전환하거나 식품생산을 극대화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생태계 기준의 비용/이점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원칙 	식품/농업/수산업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지속가능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자원 기초를 손상시키지 않고 대규모 토지 사용을 회피하면서 농업 생산물을 늘리기 위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장려함. 여기에 영양을 개선하고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토지사용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통합해야 함. 	정부 농업계 국제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및 해양 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s), 농업환경 캠페인 (Campaign for the Farmed Environment)과 영국 토양전략(Soil Strategy for England)에 설명된 수단들, Future Water, Water Framework Directive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킴. - 지속가능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어업 기술을 조정하거나 개발함. -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하여 구축함. 	농업/수산업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다측면 프로세스의 현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의 농촌 주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추구하며 글로벌 농업식품 안보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을 통해 행동을 발전시키고 조정하기 위해 L'Aquila Food security Initiative와 국제농업기구(FAO) World summit 결과를 토대로 구축함. - 예를 들면 통합아프리카 농업 발전 프로그램(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등이 있음. 	정부·국제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가용성·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국제개발부(DFID)는 3년간 다음의 성과를 목표로 11억 파운드(약 1조 6천 300억 원)의 기금을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투입함. 식품보관시설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수확 후 손실량 감소; 시장 기능 개선; 적정 한 토지 사용권 계약; 여성 농민 강화, 생업 다양화 	

-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은 생산단계에서의 농작업 개선, 유통단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 소비단계에서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정책들을 제시함.

<표 5-18>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행계획	실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된 가축관리와 보다 효율적인 비료 사용은 단위생산량 대비 메탄 발생과 이산화질소 배출을 감소시킴. - 혐기성 분해를 포함하는 슬러리(slurry 현탁액) 관리 개선은 메탄과 이산화질소 배출을 감소시킴. 	농업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 표출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 ‘기후친화적’ 제품을 공급하는 소매업체를 위한 명백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 소매업체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사용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운송 활동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생산량 대비 배출량과 절대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을 찾아내고 이행함. - 영국 저탄소전환계획의 정부 계획에 참여하고 적절한 조언서비스를 활용함. 	식품 소매·제조·물류·요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체인이 저탄소화 격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자들이 저탄소 제품을 공급하도록 영향력을 가하고 지원을 제공함 - 식품공급망 업체들과 다른 업체들에 의한 저탄소계획들을 지원함, 예를 들면 불가피한 식품폐기물에 대한 혐기성 분해 제공 등. 	정부·식품소매·제조·물류·요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에 대한 기대목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전체와 주요 부문을 위한 노력 수준에 따라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추진경로를 설정함. - 배출 저감행동 계획에 따라 산업계와 함께 협력함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식품 탄소배출 감소 정책 추진 및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언(정보) 서비스, 적절한 규제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제공함 - 탄소재단(Carbon Trust)으로부터 기업에 무이자 대출 지원함. 	

-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은 식품폐기를 감소하기 위한 공급 및 수요 단계와 폐기단계에서의 다양한 직간접적인 정책·사업을 제시함.
 - 소비단계에서 계획적인 식사준비와 식품표시 개선을 통해 식품폐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공급·폐기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지원을 실시하며, 재가공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밖에 공급단계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자 함.

<표 5-19>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실행계획	실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처리 방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폐기물을 매립지 이외의 곳으로 이동시킴(Divert food waste from land fill) - 새로운 식품 폐기물 수거 계획을 도입하기 위하여, WRAP 연구, 조언과 지원, 지역 당국에 대한 350만 파운드의 기금지원을 실시함 - 지자체는 집 앞 식품폐기물 수거를 증가시키며 식품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을 지원함. - 정부는 폐기 대신 재가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함. 	중앙·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 식사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자원행동프로그램인 WRAP의 Love Food Hate Waste 캠페인과 소매업체들과의 공동 캠페인 - WRAP이 소비자들끼리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매업체들과 함께 하는 활동, 예를 들면 레시피 제안 등 	가게·소비자·NGO·지역사회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쓰레기 감소하도록 소비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 계획들은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키려는 필요에 민감함. 1회 제공량을 정할 때 신축성을 제공함.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 및 소매업체 식품 폐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포장전략과 Courtauld Commitment(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2단계에서 제시하는 포장의 최적화를 위한 수단 - 식품 외관과 유통 수명 보호, 혁신적인 포장은 기름, 물, 에너지와 같은 자원을 덜 사용함.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식품 날짜표시 및 식품 보관·이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표시(라벨)와 보관 지침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식품 기준국(FSA), 폐기물관련 단체 WRAP과 식품업체가 협력하는 공동 활동. 	정부·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공급체인에서의 폐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와 주요 지원금 프로그램에 따른 1천만 파운드의 혐기성 분해 시행프로그램 지원. 온라인 혐기성 분해 조언을 위한 포털 - 혐기성 분해 태스크포스(Anaerobic Digestion task Group) 권고안에 따라, 혐기성 분해 이행계획(Anaerobic Digestion Implementation Plan)을 개발함. 	정부·식품산업

○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는 영국 먹거리 종합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실행계획들을 제시함.

- 정부, 민간 및 제3부문 간 공동 연구·협력을 도모하며, 종합전략의 영역별 연구·개발을 위한 기금 지원과 함께 개도국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계획함.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식품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추진을 계획함.
- 영국 먹거리 종합전략은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에서 식품분야 인력 양성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중요하게 포함함.

<표 5-20>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등

실행계획	실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민간부문 및 제3부문의 연구 협력·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관한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BBsRC의 조정 및 업계와 제3부문 참여를 포함한 위임 행정부의 참여 외 연구위원회들(Research Councils)과 정부 부처들의 공동 개발로 실시함.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으로 연구 실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 생산성, 지속가능한 축산, 폐기물 감소와 관리, 온실가스 감소와 같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농업식품혁신 플랫폼(Agriculture and Food Innovation Platform)이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에 의해 주도됨.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바이오기술, 생물과학연구위원회(BBSRC)의 공동기금으로 5년간 9천 만 파운드 기금을 지원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국제농업 개선의 지원 위한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국제개발부(DFID)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증강하여 개도국 빈곤한 농민들이 기술지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등 2013년까지 연간 8천만 파운드 기금을 지원함. 이 연구는 작물 유전적 자원과 농업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는 연구에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후원이 이뤄짐. 	정부·산업계·연구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도전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으로 미래 세계 인구 90억 시대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공급을 가능케 하는 방법에 관한 주요 예측연구(Foresight study)를 실시함. 2010년 10월 결과 발표함. 	정부·연구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분야 기술 유지·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수준의 상급 교육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높은 수준의 훈련(석사, 전문분야 박사, 전문가 계속 개발)을 제공하는 새로운 선행교육파트너십계획을 바이오기술과 생물과학연구위원회(BBSRC)이 실행함. 	정부·기술위원회·연구커뮤니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및 연구결과물,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공공·시민사회 참여 및 인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를 우선순위로 두어 실시하며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 	정부·연구공동체·식품산업·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분야 기술 수요 창출, 숙련노동력 수요처로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경력개발, 직업학습 등의 훈련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력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부문의 필요에 대응함. 예를 들면 고용주가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툴(Lantra's skills Manager tool) 제공 	식품산업·교육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지원·격려하는 방식으로 푸드시스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자료 기반의 정책 개발과 적절하고 균형 잡힌 규제 	정부·EU

3.3. 성과지표

- DEFRA는 국가 푸드플랜의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 푸드플랜의 6개 부문별로 중심지표(headline indicator)와 보조지표(supporting indicator)를 제시함.

3.3.1. 측정 목표: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 영국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주도 수요 창출이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개발의 핵심이며, 정보에 입각한 선택, 교육,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및 구입가능성, 식품안전성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수요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함.

<표 5-21>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도입 근거	중심지표	보조지표
구입가능하고, 건강하며 다양한 식품 섭취	접근성(accessibility) 및 구입가능성(affordability): 과일 및 채소 상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구 식비 지출 비중 • 실질 식품 가격 • 가구 식품 매장 접근성 • 위험그룹 식품구매행태(개발 중)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 및 수요	참여 및 정보를 제공받은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테이더 미비) • 상황지표: 윤리적 수입에 대한 소비자 관심; 수입식품 원산지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식품 섭취는 보다 건강한 사회 형성	식품섭취 관련 건강 문제: 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이건강 • 과일·채소 소비
식품안전성은 푸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핵심	식품안전 대책에 대한 소비자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가용성(food availability)에 대한 대중 확산(개발 중)

3.3.2. 측정 목표: 회복력·수익성·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회복력, 수익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인식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농업),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함.
 - 산업(농업) 관련한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부가가치, 총요소생산성, 식품수송 관련 비용 등에 관한 지표를 중심지표로 제시함.
 - 환경 관련하여 농장단계 이후 물 사용 중심지표로 제시함.
 - 안전 관련하여 식품 추적가능성, 식품매개질병 발생, 동물건강의 경제적 파급(수출), 동물복지 등에 관한 지표를 중심지표로 제시함.

<표 5-22>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회복력·수익성·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기준	중심지표	보조지표
농업 부문 소득 증가,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식품 제공,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소비자 니즈에 집중	EU14개국 대비 영국 1인당 총부가가치 (GVA) (직접 지원금은 미포함되며 비효율은 환율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조정) 농장단계 이후 푸드체인 총 요소 생산성 • 소매, 도매, 비주거 조리업 (non-residential catering) • 식품 제조업	상황평가: 농업 회복력 (agricultural resilience)
식품 생산 과정에서의 물 사용 모니터링은 환경적, 사회적 제한 이내에서의 물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	농장단계 이후 물 사용 (개발 중)	상황평가: 농장 출고 이후의 물 사용
식품수송은 온실가스 배출 및 교통 혼잡과 같은 외부 효과를 가짐	식품 수송 외부 비용: 도시 도로 정체: 인프라 비용	
보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과 식품 출처에 대한 확신 부여	식품 추적가능성 (보증제도, assurance scheme)	
식품매개질병은 건강, 의료서비스, 경제에 심각한 영향	식품매개질병 발생 • 대장균군,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 리스테리아	
동물 매개 질병은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동물 건강: 동물 건강을 이유로 한 제한 조치가 영국 가축 수출에 미친 영향	질병 발병(유병률)
육류 및 육류제품에 대한 수요로 인해, 동물건강과 복지를 손상시켜서는 안됨.	동물 복지	

3.3.3. 측정 목표: 지속가능한 방식의 식품 생산 증가

- 영국 정부는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의 두 가지 주요한 미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환경을 손상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식품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함.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식품 생산·공급 달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농업 관련하여 농업용수, 토양에 관한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밖에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방식의 수산물 생산을 중심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표 5-23>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기준	중심지표	보조지표
환경적, 사회적 제약 내에 물 사용	농업용 물 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물수질: 질산염, 인산 농약
토양은 대체불가능한 자원이며 필수적인 재배 매개체임.	토질(유기물)[다른 측정수단이 없으며 토양 유기물은 공식 중 일부에 불과함을 주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 지표: 강 퇴적물 (토양 구조 및 침식 관련)
동식물 다양성은 생태계가 보다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회복력 부여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 (110개 농산물 종과 서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수중환경-검토 중) 농경지 식물 다양성 농경지 조류 유전적 다양성 암모니아 배출
수산물 공급의 장기적인 안정은 어류와 갑각류의 지속가능한 공급원에 의지함.	지속가능하고, 완전히 재생산 가능 상태로 수산물 수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생태계 보전 상태(복해) 상황측정: 어류 수입(개발 중) 상황측정: 지속가능한 어류 소비(검토 중) 상황측정: 세계 어류 보유량

3.3.4. 측정 목표: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영국 정부는 농식품 생산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배출 감소 모니터링을 통해 탄소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하고자 함.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심지표를 통해 푸드체인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자 함.

<표 5-24>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준	중심지표	보조지표
에너지 소비 저감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가능케 함.	전체 푸드체인 에너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푸드체인 에너지 사용
배출 감소 성과 모니터링 중요	푸드체인 온실가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 추세

3.3.5. 측정 목표: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과 폐기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체 공급체인이 생태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소비자의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 이에 따라 중심지표는 전체 푸드체인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식음료 제조과정에서의 폐기 현황, 보조지표로는 소비자 가구 폐기 실태와 식품 폐기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제시함.

<표 5-25>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기준	중심지표	보조지표
전체 푸드체인에서의 폐기물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식음료 제조시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지표: 1주일 중 가구당 배출 폐기물 • 상황지표: 가정 식품폐기에 대한 소비자 태도

3.3.6. 측정 목표: 기술·지식·연구와 과학기술의 영향

- 농식품 산업이 자원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관련 과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적절한 기술 기반과 연구 조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함.
- 이를 반영하여 중심지표를 통해 ① 훈련에 대한 투자와 ② 지식과 혁신의 개발과 활용 현황을 측정하고자 함.

<표 5-26>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중심지표	보조지표
훈련에 대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단계, 식음료 제조 및 가공 단계 기술 및 훈련 고등교육(개발 중)
지식과 혁신의 개발과 활용	

4. 국가별 먹거리 전략 비교

-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정책 과제·사업은 먹거리 관련 주요 정책 영역(이슈)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식량안보와 관련된 정책 과제·사업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호주, 영국은 자국 내 식량안보 확보 보다는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확보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표 5-27>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주요 범위

국가	식량안보 (식품수급)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환경/폐기	식품산업	지역·공동체
프랑스		●	●	●	●	●
호주	●	●	●	●	●	
영국	●	●	●	●	●	●

자료: 연구진 작성.

- 해외 주요국의 먹거리 전략이 대체로 먹거리 관련 전반적인 정책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반면, 세부적으로는 국가별 여건·현황에 따라 포함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내용, 대상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예컨대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먹거리 전략은 건강·영양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접근성 개선이 주요하게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영국의 경우 공공부분의 급식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

- 또한 식품안전·품질에 대한 내용도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양질의 식품 공급을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시스템 구축, 영국은 공공 신뢰, 표시 정비 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 이밖에 환경·폐기 관련하여 프랑스, 호주 등이 농식품(음식물) 폐기(낭비)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기후 관련된 사안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먹거리 전략이 대체로 국내 문제·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호주의 경우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식량 수출국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다른 국가와는 달리 수출(무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음. 영국의 먹거리 전략도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이밖에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는 지역단위 먹거리 관련한 이슈·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지역 먹거리 이용과 가치 확산, 영국은 지역 먹거리 이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5-28>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영역별 세부 과제

국가	프랑스	호주	영국
식량안보 (식품수급)		· 식량안보(개발도상국)	· 공급체인 개선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개발도상국)
식품안전 · 품질	· 사회정의(양질의 식품 접근 가능성 확보)	· 외래해충 및 질병 대응 시스템 유지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선	· 식품안전성 공공 신뢰 구축 · 식품표시 규정 정립
건강·영양	· 사회정의(취약계층 식품지원, 형무소 식품공급 개선, 병원 및 노인요양원 등 단체급식 참여 공공 관계자 관심 제고) · 청소년 식생활교육(온라인 교육 및 교육 방법 자료 센터 구축, 가이드 전국 배치, 세계 식문화 교육)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 식품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 (어린이) 식품 생산에 대한 이해 증진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 식품섭취 정보 및 조언 제공 · 식인성질별 추세 전환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섭취 실천 · 농식품 생산과정 이해 증진 · 식품준비기술 향상 · 공공부문 식품 조달(소규모 지역 업체, 사회적 기업)

국가	프랑스	호주	영국
환경/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낭비 대응(캠페인, 폐기제품 재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식품생산 기반 조성 · 지속가능성 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 · 농업 온실가스배출 지원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음식물 쓰레기 감소 (포장재 폐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위협·위험요인 식별) · 환경에 적합한 식품 생산 보상(표창) 실시 · 바이오연료(에너지) 생산(식량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 · 생산 지속가능성 향상 · 농작업 개선(온실가스 등 환경) · 소비자 환경(기후 영향) 정보 제공 및 기후친화적 제품 공급 소매업체 인센티브 제공 · 공급체인(식품산업) 저탄소화(탄소 배출량 저감) 격려·지원 · 양식장 및 해양 환경 관리 · 지속가능한 농업·토지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 생태계 가치 평가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식생활교육(식품 분야 직업 훈련 실시, 관련 정보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무역) 증진 · 산업인력 진입 지원 · 산업 시장경쟁력 및 효율성 촉진 ·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통한 식품불안 정성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경쟁력·효율성 향상 · 규제 부담 완화 · 수입과 리스크를 공정하게 분배한 공급체인 수립
지역·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먹거리 유산(지역 식품 프로젝트 개발, 단체급식 근거리 농식품 공급, 원산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작물재배 토지 확보 · 전통·지역 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주: 국가별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된 주요 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함.

자료: 연구진 작성.

제 6 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과 전략

- 이 장에서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아젠다별로 정책과제·수단, 추진목표, 성과지표 등을 제시하여 정부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1. 수립 방향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비전으로 하며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등 4개 아젠다로 구성됨.
 - 관련 TF 등을 거쳐서 2018년 4월에 발표된 종합전략(안)을 바탕으로 4개 아젠다를 발굴함.
 - 세부 추진과제는 농식품 생산부터 소비·폐기단계 까지를 포괄하며, 이들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안보, 건강·영양, 안전, 환경, 산업, 지역·공동체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정책·사업을 포함함.
- ‘건강한 먹거리’는 안전하며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성을 확보하고 건강·영양 수준을 제고하며,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추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들은 ①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② 국민 건강·영양 지원 ③ 바른 식생활실천 제고 등으로 분류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 건강·영양, 식생활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포함함.

-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를 통해서 생산기반 조성 과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요 정책과제들은 ①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②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③ 먹거리 공공성 강화 등 3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생산·수급, 식품지원, 공공급식 등의 정책·사업 등을 포함함.
- ‘생태친화적 먹거리’에서는 생산부터 소비·폐기 단계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③ 먹거리자원 순환기반 조성 등 3개 영역에 환경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포함함.
- ‘더불어 사는 먹거리’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성장의 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① 먹거리 경제 순환체계 확립 ②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 구축 ③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등으로 구분하며, 먹거리 분야 관련한 지역 경제·산업, 식문화 등 먹거리 관련한 인식·가치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포함함.

<표 6-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비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중점 추진 과제	건강한 먹거리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제도 강화 • 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강화 • 먹거리 안전·위생 소비 환경 조성 • 먹거리 안전 정보 제공 확대
		국민 건강 영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지원 확대 • 건강·영양 정보 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국민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
		바른 식생활 실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식생활교육 활성화 •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식생활교육 콘텐츠 발굴 및 추진체계 확립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 농지관리 강화 및 간척지 활용 다양화 • 수급 조절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불균형 완화
		먹거리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모델 구축·확산 •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
	생태 친화적 먹거리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인증 먹거리 생산·소비 확대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확산 •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확대·개편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 기후변화 대응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 농수축산업 생산·사육 환경 관리
		먹거리자원 순환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과 자원화 추진
	더불어 사는 먹거리	먹거리 경제 순환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푸드플랜 확산 • 지역 먹거리 경영체 육성 • 식품·외식기업 성장과 농가소득 연계 •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 • 먹거리 분야 취창업 지원 • 먹거리 분야 미래인력 육성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 자생력 강화 • 도농교류와 체험·교육 활성화 • 한국 식문화 인식 제고
추진 체계	참여·협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거버넌스 조직 ▪ 법률 근거 마련 		

2. 세부 추진전략

2.1. 건강한 먹거리

2.1.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소득 증가, 고령화, 여성 사회진출 확대 등 경제사회 및 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질적 소비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안전, 건강·영양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 식품수입 증가, 기후변화, 과학·기술발전, 식품소비 외부화 경향 확대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건·사고가 지속되며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정부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 또한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 과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먹거리 관련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국가의 전반적 경제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층별·영양소별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먹거리에 기인한 질병 발생이 증가함. 반면 아침식사 결식률,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등 불규칙·불건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의 비중이 증가함.

2.1.2. 추진 과제

아젠다	건강한 먹거리		
추진 과제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국민 건강·영양 지원	바른 식생활실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예방적 안전관리제도 강화 •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안전·위생 소비환경 조성 •안전정보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지원 확대 •건강·영양 정보 기반 구축 및 제공 활성화 •소비자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청소년 식생활교육 활성화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교육 추진 기반 확립

가.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p>■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적·체계적 안전관리, 안전·위생 먹거리 소비 환경 조성, 소비자 먹거리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 <p>■ 성과지표</p> <p>[정량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인증 농가 확대 - HACCP 인증(등록) 확대 - 식중독 환자수 감소(명/십만명) - 원산지 표시 이행률 향상 - 깨끗한 물 확보 수준(수질등급달성) 향상 <p>[정성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정책 신뢰 수준 향상
--

① GAP, HACCP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제도 강화

- 농산물 품목별 GAP 인증 확대,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GAP 활성화
 - 규모 있는 단지 중심으로 지원 확대,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 GAP 실천마을 육성, 안전성검사 및 컨설팅 등 GAP집단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 패키지 지원 등 집단인증 유도
- 산지규모화·조직화 사업 등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로 농가 참여 유도
- 공공급식 등 대량수요처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 소비자 인지도 제고 홍보·교육 확대
 - 소비자단체, 유통·급식업체 등과 연계한 홍보·관측·이벤트 등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축산물 HACCP 적용 대상 확대와 인증 사후관리 강화
 - 축산농장 HACCP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과 지원 확대
 - 산란계 농장·종축장, 기타 축종 규모별 단계적 의무적용 대상 확대
 - 인증 희망 축산농가 컨설팅 및 사후관리 미흡 농가 기술지원
- 수산물 HACCP 적용 품목 확대와 인증 사후관리 강화
 - 기존 어류에 갑각류, 패류 등 양식장 HACCP 적용 품목 확대
 - 수산물 HACCP 양식장 등록 컨설팅 지원 및 제도 홍보 강화
 - 양식장 HACCP 인증 취소 기준 강화,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 위생·안전관련 중요 인증기준 1회 위반 시 HACCP 인증 취소

② 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강화

- 농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도입과 단계적 확대, 체계적·안정적 현장 시행 지원
 - 사용가능 농약 등록 확대, 농약 관리 강화 및 제도 이해도 제고
 - 등록 농약 부족 작물에 대한 사용가능 농약 직권등록 확대
 - 구매자 정보 등 판매기록 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 이력관리제 도입
 - 농업인 대상 농약사용 실태 파악과 PLS 교육·홍보 강화
 - 축·수산물 농약·동물용의약품 PLS 단계적 도입 확대
 - 축수산물 검사 확대와 지자체 검사인력·장비 연차적 확충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으로 안전관리 체계적 추진

-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물 안전관리, 국가는 부적합 농장·양식장 및 유해물질 조사 등에 집중
- 축산농가, 어업인 등 대상 의약품 사용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강화

③ 먹거리 안전·위생 소비 환경 조성

- 수질관리 취약시설·계층 등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먹는 물 안전성 확보
 -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관리 취약시설 관리실태 합동점검 등 실시, 전문가 기술지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지침 마련·배포
 - 상수도 미보급지역 무료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지원
 - 수질기준 초과 관정개선(소독, 우물자재 세척, 상부보호시설 설치 등), 마을공용관정 설치 등
 - 정수처리시설, 밀폐형 상부보호시설 설치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 유통·소비단계 농식품 위생관리 및 식중독 사전예방 체계 확립
 - 식품제조업체 및 집단급식소 등 지하수 사용 시설 및 농업용수 사용 시설 재배 농산물 등 노로바이러스 관리
 - 수산물 노로바이러스·패류독소·비브리오패혈증균 등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 관리
 - 수산물 대량 취급 위·공판장, 보관창고, 판매업체 등 조사 및 위생관리 점검, 패류 생산해역 해수 및 패류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조사
 - 학교 급식시설 정기적 위생 점검과 고위험군 학교 집중 관리
 - 개학 전 범정부 합동점검, 고위험 학교 특별점검 등 체계적 점검과 예방 진단 컨설팅 병행
 -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학교 집중 관리
 - 먹거리 안전·안심 환경 조성과 자율적 실천 위한 위생·안전 교육·홍보 강화
 - 생산·유통종사자, 영양사, 소비자 등 대국민 위생·안전 교육·홍보 실시
 - 관련 법령, 위해정보, 예방 및 관리요령 등 맞춤형 교육 실시

④ 먹거리 안전 정보 제공 확대

- 농수축산물 이력제 참여 대상 및 품목 확대
 - 생산단계 이력관리 농가 확대 및 축산물 이력관리 품목 확대
 - 친환경인증 등 국가인증제 참여 유도를 통한 생산단계 이력관리 농가 확대
 -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 실시 후 전면적 확대
 - 농식품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 부처 간 이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가공식품 원재료 이력정보 확인
 - (농식품부) 농산물, 축산물, (해수부) 수산물, (식약처) 가공식품 등
 - 물류단위 표준화 코드 적용으로 도소매 유통·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정보 연결
-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관리 강화
 - 소비자 관심 대상 및 위생·안전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표시 대상품목 확대
 - '17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646개
 - '17년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12개
 -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관리 강화
 - 원산지표시 주기적 시장모니터링 실시
 - 원산지 단속 디지털 포렌식 수사인력 시스템 구축
 - 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 활성화
 -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처벌 및 위반자 의무교육 강화
-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GMO 안전관리 추진
 - GMO 국경검사 및 유통단계 모니터링 강화, 민관 협의체를 통한 표시제 개선 논의와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로 정부 GMO 안전관리 신뢰 제고
 - 국경검사 대상품목 및 표본 추출량 확대, 검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향상, 검사기법 표준화
 - 국내 유통단계 모니터링 대상·기간·품목 등 확대

-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를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시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나. 국민 건강·영양 지원

■ 추진방향

- 성장기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 지원, 국민 건강·영양 서비스 이용 활성화,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를 통한 국민 건강·영양 수준 개선과 건강한 삶 영위 보장

■ 성과지표

[정량지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및 어린이 수혜율 확대
- 어린이·청소년 비만 유병률
- 건강·영양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 확대
- 영양표시 대상 품목·업종 확대
- 적정 수준 영양소(당, 지방, 나트륨) 섭취 인구 증가

① 성장기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 지원 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영양관리 체계화와 지원 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개선·적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체계적 지원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선과 현장 적용
- 학교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대상 확대
 - 초등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초중고등학생 식품지원 프로그램 등 건강·영양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초등돌봄영양교실 대상 비만예방 프로그램(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운영 확대
- 초등학교 과일간식 및 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18년 돌봄교실 대상 시범 실시 후 초등 전 학년으로 과일간식 지원 확대
 -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 자녀와 중고등학교 등으로 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② 건강·영양 정보 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건강·영양 관련 정보 연계·통합과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
 - 부처별 건강·영양 관련 정보 연계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국가영양성분 DB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 등 부처별 건강·영양 관련 정보 연계
 -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활성화를 통한 건강·영양 관리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과 정보 활용도 제고
 - 건강·영양 관리 앱, 건강관리 스마트가전 개발 등
- 건강·영양 가이드라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상담 활성화
 - 비만·만성질환자, 임산부 고위험군 등 건강·영양 교육·상담 실시
 - 건강·영양 실천 매뉴얼 개발·보급, 비만인 집중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영양플러스 사업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 전국 확대
 - 음주, 비만 예방을 위한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국민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

- 영양 및 알레르기 표시 대상 품목 및 업종 확대
 -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 확대
 - 대상식품: 소스류,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19)→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등('21)→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 ('23)

- 대상업종: 영화관('18)→커피전문점('19)→고속도로휴게소('20)
-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 식품 확대
 - 땅콩 등 21종 외 잣 추가('18), 연구를 거쳐 추가 확대
- 가공식품 중 당류 저감 지침 개발·보급과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음식점 확대

다. 바른 식생활 실천 제고

■ 추진방향

- 국민 생활교육 강화와 식생활교육 추진 기반 확립을 통해 국민 식습관·식생활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실천 능력을 강화하며,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해 제고

■ 성과지표

[정량지표]

- 학교·유치원 등 텃밭가꾸기 확대
- 식생활 교육 및 체험 비율 확대
- 전국 시·군·구 민간 지역협의체 증가

[정성지표]

- 국민 식생활 만족도 증가

① 어린이·청소년 식생활교육 활성화

-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관련한 인식·이해 제고를 위한 식생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보육·교육시설(어린이집·학교 등), 학교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식생활교육 실시
 - 학교 방과 후 교실 및 식습관교육 프로그램 시범학교 확대
 - 도농교류 프로그램(농어촌체험과정), 텃밭가꾸기, 전통식문화 체험 등 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먹거리 관련한 체험기회 제공 확대

②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독거노인, 남성, 미혼여성, 군대 등 계층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실시
 - 식생활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이 낮은 인구집단 대상(독거노인, 남성, 미혼여성, 군대 등) 세대별 식생활교육 실시
 -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및 건강 교육 실시
 - 경로당·노인정 등 고령자 대상 현장 방문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실시
 - ‘건강 백세 영양관리 체험 교실’ 확대 운영
 - 건강·영양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상담 실시
 - 영양플러스사업, 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 건강·영양지원 프로그램 연계

③ 식생활교육 콘텐츠 발굴 및 추진 체계 확립

- 교육 콘텐츠 발굴 및 DB 구축, 교육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농업·농촌, 환경, 전통식문화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계층별·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식생활교육 교재·교구 개발
 - 식생활교육 관련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 식생활교육 전문적·체계적 추진 체계 확립
 - 시·도별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DB 구축,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식생활교육기관 및 체험공간 지정·확대, 시·도 및 시·군·구 민간추진단체 결성 전국적으로 확대
 - 시군별 식생활교육 기관 지정, 우수농어촌체험공간 지정 확대 및 관리 체계 개선

2.2.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2.2.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 곡물시장 변동성 확대, 무역자유화에 따른 먹거리 수입 증가, 식품 소비 구조 변화 등 먹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국내 먹거리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먹거리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음.
-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있으며 기초 먹거리의 안정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함.
- 먹거리 안정적 공급과 먹거리 보장 국민의 생존과 기초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고령인구 급증, 여성가구주 가구 및 단독가구 증가 등 급속한 가구구조 변화와 함께 먹거리 취약계층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2.2.2. 추진 과제

아젠다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추진 과제	안정적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수급안정과 자급률 제고 •농지관리 강화 및 간척지 활용 다양화 •수급 조절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불균형 완화	먹거리 공공성 강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모델 구축 •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

가. 안정적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쌀 수급 안정과 주요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관리 강화 및 간척지 활용 다양화, 먹거리 수급 조절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를 통해 농어업 경영 안정과 먹거리 수급불균형 해소 및 먹거리 안정적 소비 보장

■ 성과지표

[정량지표]

- 식량자급률(식량/곡물/수산물) 제고
- 계약재배 면적 및 물량
- 채소가격안정제 도입 확대
-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비중 확대

① 쌀 수급 안정과 주요 식량자급률 제고

- 쌀 적정 생산 유도과 식생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쌀 수요 충족 지원
 - 쌀 생산조정제 실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
 - 간척지·일반농지 대상 논·밭 전환이 가능한 범용농지 조성 확대
 - 쌀 품질 제고와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한 쌀 수요 확대 지원
 - 소포장 유통 시설 확충, 가공용 쌀 품종 및 관련 기술 개발, 다수확 품종 비중 축소, 고품종 벼 품종 개발·보급, 친환경 벼 재배 확산 등
- 쌀 이외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수요·판로 확충
 -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생산성 향상
 - 기계화 적성 품종 개발 및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등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
 - 안정적 원료곡 생산기반, 시설 및 유통 활성화 자금 지원 등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타작물 전환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전작보상제 도입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시장교섭력 확보, 지역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② 농지관리 강화 및 간척지 활용 다양화

- 농지 관리 강화와 효율적 이용 추진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심사기준 엄격 적용, 진흥지역 정비기준 및 절차 개선,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지역 상시정비 시스템 구축 등
 - 신규 취득 3년 이내 모든 농지와 부채지주 소유 농지 등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태양광 설비는 기 허용지역(진흥구역 외)을 활용하며, 영농이 곤란한 염해 간척농지는 일시사용기간 확대
- 간척지 농어업적 활용 방안 마련 및 추진
 - 간척지 시설농업 및 원예 농업기반 구현과 SMART 양식 클러스터 구축
 -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시범영농 추진·확대
 - 양식품목 수급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선도사업지구 선정·개발, 수산·양식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지자체 참여 유도

③ 수급 조절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

- 품목별 가격안정장치와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채소가격안정제, 수입보장보험 등 품목별 가격안정장치 강화
 - 노지채소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물량 확대, 과수·과채 자조금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 주요 채소류 품목별 수급 조절 거버넌스 구축
 - 주요 채소(무·배추·마늘·양파·고추 등)는 중앙주산지협의회에서 적정생산량, 지역협의체는 수급조절 추진
 - 과수·과채 의무자조금 조성 과 자율적 생산·유통 조절 권한 부여
 - 품목별전국연합사업단 육성으로 수급조절, 판매 기능 강화 등 농협 역할 강화
 - 축산물 축종별 축산자조금, 수급조절협의회, 수급조절적립금(돼지) 확대 등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

- 양식생산 기반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수산물 생산 안정화
- 관측 정확도 제고와 수급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농산물 관측 정확도 제고와 정보 적기 제공
 - 드론 활용, GIS 작황정보 시스템 개편, 기존 수급 DB와 BIGFOS 통합·운영
 -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구축·운영
 - 수급정보 빅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수급상황 분석 시스템 개발,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구축·운영
 - 해양수산부, 통계청,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수산물도매시장, 수산업관측센터, aT, 기상청 등 수급관련 정보 생산기관 네트워크 연계

나.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불균형 완화를 통해 국민의 기초적인 먹거리 수요 충족과 삶의 질 개선

■ 성과지표

[정량지표]

-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확대
 - 학교 과일간식, 우유급식, 결식아동 급식서비스, 농식품바우처, 영양플러스 등 주요 식품지원 프로그램

①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 어린이·청소년 식품지원 프로그램 및 수혜 대상 확대
 -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확대와 학교 우유급식 대상 및 범위 확대
 - '18년 돌봄교실 대상 시범 실시 후 초등 전 학년으로 과일간식 지원 확대
 - 친환경 인증 과실·과채 등을 간식의 원재료로 공급하고, 컵 과일 등 신선편이상품 제조시설 지원 등 전방산업 육성

-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와 중고등학교 등으로 우유급식 범위 확대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자 자녀에서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 자녀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결식아동 급식 서비스 다양화 및 지원 확대
 -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시락·부식 배달, 단체급식소 연계 등 지역별·아동별 여건에 따른 급식 형태 다양화

②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불균형 완화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식품지원프로그램 확대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 농식품 구입 능력 개선
 - 시범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 검토 후 본 사업 실시
 - 식생활 상담·교육 등과 병행하여 사업 효과 제고와 취약계층 식생활 자발적 관리 능력 개선
 - 저소득층 영유아·임산부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 영양플러스 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임산부 대상, 영양교육·상담 후 분유, 쌀, 우유 등 제공

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

■ 추진방향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모델 구축 및 확산,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 등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등 국민의 먹거리 불안정성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

■ 성과지표

[정량지표]

- 공공급식 지역 식재료 이용 비중 확대
- 공공급식 지역 농가 참여 확대
- 공공급식 식중독 등 안전·위생 위반 사례 감소

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모델 구축 및 확산

- 공공기관 및 군 급식 지역 연계 선도모델 구축
 - 공공기관 급식(나주) 및 군 급식(화천, 포천) 지역 내 농식품 이용 확대
 - 공공기관 급식 식재료 공급 지역 내 농가 참여 확대 및 가공식품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군 급식 로컬푸드 이용 계획 수립, 지역 중소농 중심 농가 조직화 및 참여 확대
- 혁신도시, 접경지역 등으로 공공급식 지역 연계 모델 단계적 확산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 추가, 군 급식 관련 협정서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 반영
 - 지역농산물 생산현황, 물류시설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단지장 제도 폐지)
 - 단지장은 일정 수수료(3~6%)를 받고 농가관리, 납품농산물 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유통체계

②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

-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마련과 체계적 관리
 -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마련
 - 공공급식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추진
 - 공공급식 품질기준 마련과 지역 농식품 사용 근거 마련
 - 우수 식재료 이용과 급식 품질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 공공급식 식재료 일관 관리·공급
 - 기존 조달체계를 활용한 공공급식 식재료 효율적 관리·공급
 -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친환경유통센터, 농협유통센터 등
 - 지역 생산자와 연계한 양질의 농식품 안정적 조달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와 체계적 안전·위생 관리
 - 학교급식에 양질의 지역 농식품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 학교급식 수의계약 기준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완화
-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지역 농산물 우선사용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국산 식재료 사용여건 마련
- 학교급식 안전·위생 관리 체계화
 - 봄·가을 개학 전 범정부 합동점검(3, 8월), 식중독 발생이력,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등 고위험 학교 특별 점검(6, 11월)과 예방진단 컨설팅 병행(‘18~)
 - 급식 식재료 정보가 담긴 QR코드 제작과 IT기술을 접목한 식재료 검수 시스템 구축·활용
 - QR코드를 통해 유통·생산 정보 자동 기록, IT기술을 접목한 검수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식재료 관리 추진
 - 축산물 쇠고기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식재료 확대

2.3. 생태친화적 먹거리

2.3.1.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증가에 따른 먹거리 대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고투입 영농과 대규모 집단축산에 의한 가축 분뇨 발생으로 먹거리 생산 환경이 영향을 받으며, 악취 발생, 지하수·하천 오염 등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저하시키게 됨.
-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구조 전환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증가하며, 국민 소득 증가, 인구 증가, 교통 및 유통망 발달, 소비패턴 변화와 먹거리 교역 범위와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장거리 먹거리 유통 확대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먹거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소비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2.3.2. 추진 과제

아젠다	생태친화적 먹거리		
추진 과제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확산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확대·개편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불균형 완화	먹거리자원 순환기반 조성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 체계 구축 •농축산업 생산·사육 환경 관리

가.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p>■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인증 먹거리 생산·소비 확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확산,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먹거리 생산 환경 개선과 농축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p>■ 성과지표</p> <p>[정량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인증 생산 실적 증가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지역 확대

① 친환경 인증 먹거리 생산·소비 확대

□ 친환경 먹거리 생산 확대 및 인증제 개편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규모화·조직화
 -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및 확충, 친환경 물류센터 활성화,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확충 통해 대량 수요처에 안정적 물량 공급 및 가격 안정화 유도
 -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직거래·홈쇼핑·온라인 등 다양한 판로 확충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 개선
 - 친환경인증제 관리 강화, 인증기관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부실인증 예방, ‘(가)친환경농산물이력제’ 도입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
 - 친환경 양식 실천 어업인의 생산비 증가율에 대한 일정 보전비율 소득 보존에 대하여 친환경 직접지불금 지급
 -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 지원근거 마련, 친환경 수산물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후 본 사업 추진

②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단계적·전국적 확산

- 종합적 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활동별 효과성 검증과 이행점검 체계 구축
 - 활동별 환경개선 효과 검증 및 농업환경 지표 개발
 - 지역적 특성을 유형화한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주민 중심 자율적·주도적 이행점검 관리방안 구축
- 사업 도입과 시·도별 관리체계 구축 후 전국적으로 단계별 확산 추진
 - 농업환경 개선 필요 지역 선정
 - 토양 양분관리, 침식 방지, 농업용수 수질개선,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생태계 보호 등 지역 환경 개선 활동 지원
 - (1년차) 주민 교육·컨설팅,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농업환경 조사·진

단, 관리계획 수립, 지자체-마을 간 협약 및 활동 이행

- (2-5년차) 주민 교육,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 환경 지표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 평가, 활동비 지원 등 프로그램 계속 추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친환경농축산업 인증 연계 추진
 - 친환경농축산업 실천농가 가산점 부여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내에 통합 추진

③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확대·개편

-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요구 부응하여 쌀 중심 직불체계 공익형으로 개편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 환경보전 등 준수 의무 부과와 지원 확대
 - 농업 생산과 관련한 환경·사회적 의무를 농업보조 지급 조건으로 부과
 - 세부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
 - 공익형 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연계 방안 마련
 -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 관계 법령 개정, 공익형 직불 전면 시행
 - 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 쌀 이외 타작물 재배 지원과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마련
 - 적정가격대 설정과 가격·수급상황에 따른 시장 물량 조정으로 시장예측 가능성 제고
 - 타작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및 수요처 발굴로 쌀 재배 농가 작목전환 지원
 - 재배단지 조성, 기계화, 배수개선
 - TRQ 증량 최소화, 정부수매 확대 및 공공급식 등 대량수요처 발굴

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 추진방향

-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기후변화 대응한 농식품 생산·소비 체계 구축, 농축수산업 생산·사육 환경 적정관리로 오염부하 최소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정량지표]

- 기후대응 작물 개발 확대
- 농업지역 에너지 절감시설(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 농어업분야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시설원에 분야 중심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
 - 농업분야 지열·목재펠릿·폐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 어업분야 히트펌프, 인버터 등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절감 냉난방시설 지원
- 농사와 태양광발전병행사업과 양식장태양광발전사업 추진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농사와 태양광 발전 병행 사업 모델 개발
 - 해면(축제식, 지수식포함) 양식장에 태양광설치를 통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양식장 필요 전력 수급 및 잉여전력 판매

② 기후변화 대응한 농식품 생산·소비 체계 구축

-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어업 대응 방안 마련
 - 유해미생물, 병충해, 가축전염병 확산 등 기후변화에 농어업 영향 평가·예측을 기반 자료 구축, 영향 평가 체계 마련 및 관련 연구 실시
 - 기후 변화에 적합한 작부체계 확립, 신소득 작물 도입·확대,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개발·보급, 피해경감·회피 기술 개발·보급
 - 기후변화 대응한 주요 피해 예상 양식품종 표준 사육매뉴얼 제작·배포
- 농업부문 저탄소 인증 확대와 소비자 저탄소 인증제품 구매 촉진

- 저탄소 인증 대상 농산물 품목 확대 및 축산물 인증 신규 도입, 저탄소 제품 인증기준 재설정
 - 1차 농산물 저탄소 인증(농식품부, 재배)과 가공식품 저탄소 제품 인증(환경부, 수확~폐기)의 연계로 전 과정(재배~폐기)에 대한 저탄소 제품 인증⇒제품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및 감축 유도
- 저탄소 인증제 인지도 향상과 참여·구매 촉진을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중장기 홍보계획 수립·추진

③ 농축수산업 생산·사육 환경 관리

- 농업용수·농지 관리기준 마련과 관리 강화
 - 친환경 인증 기준에 농경지·용수 등 환경오염 발생 방지 관리기준 마련과 농지 양분관리제도 도입
 - 농업용수 및 오염원 하류 저수지 모니터링 강화, 저수지 상류유역 오염원 배출시설 관리 강화, 오염물질 유입 차단 등으로 농업용수 수질 개선
-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육기준 마련과 시설개선 지원과 동물복지 직불금제도 도입
 - 사육밀도 상향, 고정사육, 산란계 강제 털갈이, 암모니아 농도 기준 마련, 농가 부담이 큰 기준은 유예기간 부여
 - 가금농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 동물복지와 가축질병 예방위한 표준설계도 개선·보급 등 시설개선 지원
 - 가축분뇨 관리체계 개선과 배출시설 관리
 - 지역단위 시범사업 후 양분관리제 시행
 - 대규모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시 악취방지계획 검토,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확대 운영 등
 - 단계별 일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적법화 추진
- 수산물 오염원 관리 강화 및 처리시설 확충

- 일반해역 위생관리 강화 위해 오염원 조사 실시
- 패류 채취 제한 기준 마련과 패류생산 해역 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다. 먹거리자원 순환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가축분뇨 및 축산 악취 적정관리와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자원화를 통한 환경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정량지표]

- 기후대응 작물 개발 확대
- 농업지역 에너지 절감시설(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증가
- 먹거리 폐기물(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 증가

① 축산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 축산농장 가축분뇨 퇴액비 적정관리 및 악취 저감 도모와 자원화 지원 시설 개선·확충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퇴액비를 적정 관리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 가축분뇨 퇴액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 생산·공급을 위해 축산농가 시설 개선, 공동자원화시설 등 확충
 - 맞춤형 퇴액비 기준, 액비 및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일치, 부숙 위주 퇴액비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광역악취 개선 지원과 악취민원 다발농가에 악취센서 의무설치

②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과 자원화 추진

- 세대별 RFID 종량기기 보급 확대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교육 강화
 - 세대별 RFID 종량기기 시범적 보급 후 전국 공동주택 RFID 의무보급 추진
 - 대중매체 및 뉴미디어 활용한 원천감량 광고·홍보, 민·관협력 통한 지역별 홍보, 캠페인 등 추진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강화와 자원화 확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규제 강화, 자원화 관점에서 분리배출 홍보·교육 강화
 - 가축분뇨·하우스슬러지 등과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및 노후 사료·퇴비화 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 전환 유도
 - 부적정 재활용 방지 위한 배출-이동-자원화 단계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2.4. 더불어 사는 먹거리

2.4.1.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제사회적 불균형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며, 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을 상실하고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공동체가 증가하고 있음.
- 저성장 시대에 직면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먹거리 산업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농업분야의 경우 고령화,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농업

인력 유입 감소와 함께 취업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 성장에 제약이 있으며, 식품·외식분야는 소규모 영세 구조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등 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농업·농촌 및 먹거리에 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저성장 및 시장개방 시대에 직면하여 국내 먹거리산업의 가치·시장 유지 및 창출에 영향을 주며 정부의 먹거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도 영향을 줌. 그러나 농업·농촌 및 먹거리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못함.

2.4.2. 추진 과제

아젠다	더불어 사는 먹거리		
추진 과제	먹거리 경제 순환체계 확립	먹거리산업 성장동력 구축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산 •지역 먹거리 경영체 육성 •식품·외식기업 성장과 농가소득 연계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 •먹거리 분야 취창업 지원 •먹거리 분야 미래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공동체 자생력 강화 •도농교류와 체험·교육 활성화 •한국 식문화 인식 제고

가. 먹거리 경제순환 체계 확립

<p>■ 추진방향</p> <p>-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역 먹거리 경영체 육성, 식품·외식과 농업 간 연계 활성화, 로컬푸드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산업 성장과 함께 지역 활력을 증진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p> <p>■ 성과지표</p> <p>[정량지표]</p> <p>-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p>
--

- 농촌융복합경영체 지구 증가
- 식품기업 연계 계약재배 농가 확대

①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산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 농림사업 일괄 지원
 - 국가 먹거리 비전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 활성화
 - 선도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모델화를 통한 전국 확산 도모
 - 선도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연구, 기초 모델 개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범위 확대
 - 신선·안전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체계 마련
 - 적용 범위를 급식, 직매장, 외식·가공, 대형마트 등으로 점진적 확대
 - 관련 농림사업 일괄 지원 추진
 - 지역 푸드플랜 추진에 필요한 재정사업 일괄 지원 추진

② 지역 먹거리 경영체 육성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및 사업 추진 체계화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성장 지원과 인증사업자 확대
 - 성장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 지역 내 농산물 사용, 계약재배 실적 등 지역 내 농업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증제 개편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 추진 방식 체계화
 - 지역내 1·2·3차 산업주체 간 연계수준을 평가하여 지구 지정, 기술개발 컨설팅 도입 등 사업방식 개편

-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업인 간 계약재배(수매), 협력방식 등
- 청년·고령농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대상 선정

③ 식품·외식기업 성장과 농가 소득 연계 활성화

□ 식품기업 국산농산물 이용 확대 지원

- 식품기업 연계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지원
 - 식품기업 및 생산단지 재배·수확·제품개발 등 지원
 - (생산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장비 임차, 시범포 운영, 재배기술 교육 등
 - (식품업체)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상품성 테스트 지원 등
- 영세기업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 원료 농산물 신용 구매를 위한 구매보증보험제도 도입 및 확대
- 가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
 - ‘(가칭)가공용 품종 이용 활성화 협의회’ 구성
 -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분산된 가공적성정보 통합(가공적성정보센터)하여 식품업체에 제공
- 지역별·분야별 우수 외식업 지구 발굴·홍보
 - 국내산·지역산 식재료 사용 현황 등을 반영하여 발굴·홍보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레스마켓 설치 확대

④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 직매장 확대, 온라인 이용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 통한 로컬푸드 수요 확산

- 대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 장터 등 다양한 로컬푸드·직거래 모델 개발
 - 특별·광역시 등에서 운영되는 거점형 로컬푸드 직매장(1도 1대표 브랜드 장터), 지자체 주관, 도내 생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
 - 우수사례 발굴, 경영 컨설팅 및 대국민 홍보 등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과 온라인 판매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에 다양한 기능 접목과 교육·홍보, 경영컨설팅 등 종합 지원
- (지원범위 확대) 신규 설치 및 기존 직매장의 로컬푸드 레스토랑, 소규모 가공시설, 체험공간 등 시설확장 지원
- 온라인 전문협력사(벤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수 농가 발굴, 주요 오픈마켓 기획전 등 농식품 판로 지원, 농가, 영농조합법인 대상 모바일기반 쇼핑몰 제작·보급
-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와 신뢰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로컬푸드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전국적 소비 활성화
 - 지역 직거래 사업장 판촉, 체험행사, 먹거리교육 등 자체행사 동시 추진
 - 오프라인이벤트, 방송홍보, 행사정보 제공 등 홍보 방법·내용 다양화
 - 소비자 신뢰 및 지지 확보를 위한 관계 마케팅 강화
 - 소비자 직거래 서포터즈 운영
 - 농산물 수확 등 현장체험, 식생활교육 등 도농교류 지원 확대
 -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소비자관점 매장 모니터링 및 구전마케팅 유도
 - 소비자 보호 및 우수사업장 육성 위해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제’ 추진

나.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 구축

■ 추진방향

- 먹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일자리 창출, 미래 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먹거리 분야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먹거리 산업 역할 제고

■ 성과지표

[정량지표]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수산식품 강소기업 확대
- 먹거리(식품) 분야 종사자 증가
- 먹거리(식품·외식)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 농수축산업 교육기관(농수축산계 고교, 대학) 취업률
- 농수산업 신규 경영인(후계농, 취창업자) 증가

①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

- 농공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관련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확대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법적근거 마련과 중기부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추진
 -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 판로개척 지원, 선도기업 패키지 지원 등 추진
 - 우수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제품 개발·디자인 등 바우처 지급
- 우수 수산식품업체 육성
 - 기술력·시장성을 보유한 소규모 우수 수산식품 업체 선정·지원
 - 기술·경영·판로 등 지원을 통해 300억 원 이상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매출액 상승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유도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망업체 선정 및 패키지 지원
 - 기술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개 업체 선정
 - 선정업체당 6억원까지 5개 분야 패키지 지원
-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지원
 - 새로운 식품원료의 기능성 규명 및 발굴된 소재의 산업화를 위해 ‘농생명소재 산업화기술개발’사업 추진
 - 기능성농식품 DB 및 주요 효능성분을 표준화, 보관·분양하는 ‘기능성원료 은행’ 구축
 - 미생물 우수균주 효능검증, 약효검사, 제형화·제품화지원 등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인증지원사업’ 추진
 - 민간 고령친화식품 개발·투자 활성화 유도

- 식품산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마케팅 지원

② 먹거리 분야 취창업 지원

- 식품·외식 분야 창업과 청년 창업농 정착·성장 지원
 - 식품·외식분야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 지역별 거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 중소식품기업 대상 찾아가는 교육지원 확대
 - 식품·외식분야 창업희망자 실습기회 제공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창업지원 Lab’, 외식창업인규베이팅 마련
 - 식품·외식 메뉴 개발부터 매장 운영까지 실전 경험이 가능한 창업 공간 제공
 - 해외 진출 식품·외식기업 인턴·취업 지원
- 청년 창업농 정착 및 성장 지원
 - 청년 창업농(창업형 후계농) 정착지원금 지급과 농지·자금·교육 등 종합 지원
 - 정착지원금 지급 후 일정기간 경영·교육 의무부여
 - 영농종사, 교육참여, 경영 장부 작성 등
 - 2030세대 농지 지원 강화,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 농지매입 우대 지원
 -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사업 활성화
 - 영농 경험 축적 위해 경영실습 임대시설 조성
 - 청년창업농이 후계농 자금 대출 시 농신보 우대보증 확대
 - 청년 창업농 법인화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등으로 성장 유도
 - 농업법인 유형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 농업법인에 대한 농림사업 지원 조건 완화
 - 지원조건: 출자금 1억원, 설립 1년 이상
 - 모태펀드를 활용한 청년 창업농 경영체 투자 확대
 - 청년 창업농 정착 여건 마련

- 문화·보육 등 인프라를 갖춘 청년주거단지 시범 조성
- 청년 창업농 자율적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 농업·농촌 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기반 고용 창출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확대와 경영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수요처 창출
 -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귀촌인 대상 농촌일자리 연계 플랫폼, 전국 네트워크 등 기반 구축
 - 농촌 융복합산업 및 신활력 지구 확대, 농촌 유희시설의 창업 공간 제공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③ 먹거리 분야 미래인력 교육 활성화

- 청년 농업인 육성 교육 여건 개선 및 활성화
 - 한농대 교육 여건 개선, 미래농업선도고교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운영, 농업계학교 교육 지원 등 예비 인력 육성 추진
 - 한국농수산대학 학생 기숙사 확대, 현장실습시설 신축 등 전문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추진
 - 농업분야 취창업 100%를 목표로 미래농업선도고교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운영 등 실무 중심의 특화 교육 과정 운영
 - 농업 분야 자격증 취득, 취창업 캠프 운영 등 농고·농대 실무 교육 지원
- 농고·농대, 귀농, 비농업분야 등 경로별 청년 유입 확대
 -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 교육과정 개편 및 입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 인재에게 양질의 교육 지원
 - 귀농희망 청년 장기교육 과정 활성화
 - 청년 귀농 희망자(50명)에게 6개월 과정 실습교육, 컨설팅 등 지원
 - 다양한 품목에 대한 실습 후 창농 실행
-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분야 진로탐색 기회 확대
 - 농업, 농식품 등 먹거리 부문 초·중·고등학생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식생활교육과 연계한 먹거리 분야 진로 인식·이해 제고
- 해양수산분야 교육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찾아가는 해양교실’ 운영하고
 - 해양직업 체험동영상 제작을 통해 학생 대상

다.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 추진방향

- 사회적농업 및 경제 활성화와 도농교류 활성화, 도시농업 및 먹거리 관련 교육·체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자생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및 도농상생 가치와 우리나라 고유 및 지역 먹거리 가치와 먹거리 중요성 인식 제고

■ 성과지표

[정량지표]

- 사회적농업 실천농장 확대
- 먹거리 분야 사회적 경제 확대
- 도시농업 참여자수 증가
- 도시텃밭 면적 증가
- 농업·농촌(전통식문화) 체험 경험 증가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확대

① 지역 공동체 자생력 강화

□ 사회적농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농업·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체 자발적 해결과 먹거리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창출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육성
 - 사회적 농업: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돕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활동
-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 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 추진

- “사회적농업법” 제정
- 사회적농업 개념,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역할 등 명시
- 사회적농업 조직 기반 마련 지원
 - 지역기금 조성,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 지역 내 유휴시설을 창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 한농대, 귀농귀촌센터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 개설
 - 귀촌희망자 DB와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매칭 추진

② 도농교류와 체험·교육 활성화

- 농업·농촌 체험·교육과 도농상생기반 구축
 - 아동·청소년, 도시민의 농업·농촌 체험·교육과 교류기회 확대
 - 초·중·고등학교의 농업·농촌 및 직업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체험 활성화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과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등과 연계
 - 우수 체험학습처 선정, 품질·안전관리, 평가 등을 통해 체험학습기관·시설 관리 체계화, 초·중·고등학교 행정·비용부담 경감
 - 도시민 농업·농촌 체험기회 확대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활용
 -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 확대
 - 도시농업 활동 공간 확대 및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 구축
 -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지원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지원

③ 한식·식문화 인식·가치 제고

- 한식·식문화 확산과 소비기반 확대
 - “(가칭)한식진흥법” 제정으로 한식 진흥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시범운영과 국내외 한식 교육기관 수준 제고
- 한식·한식식문화 관련 연구와 인력 전문화
 - ‘(가칭)한국술 연구소’ 설립
 -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우수 토착 발효종균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 전통·발효식품 과학화 도모
 - 유용한 균주를 보유한 기관과 전통식품업체를 연계, 제품화 지원
 - ‘한식·전통주 해설사’ 제도 도입
- 한식·식문화 유산 발굴과 계승·발전
 - 한국형 식생활 실천과 식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식생활교육·체험사업 활성화
 - 학교급식과 연계 전통·향토식문화 계승 및 실천 지원
 - 전통·지역 음식·식문화 연구·개발 활성화
 - 국가단위 전통음식, 지역별 향토음식 복원·개발 조사·연구 확대
 - 지역 농산물 활용 우수 전통식품, 향토음식 및 식문화 보존·확대 연구·개발
 - 지역 농어업, 먹거리 문화 유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자료 구축
 - 지역별 식문화 자원조사 및 발굴·복원과 환경 개선 지원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확대,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등 주요 농업유산 보전·관리 강화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참고 문헌

<국내외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2016. “지표로 보는 이슈.” 제68호.
- 김병률·이명기·김명환·한석호·전익수·허정희·노호영. 2009.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략과제 정책화 방안 연구-글로벌 개방경제하의 「국가식품시스템」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이명기·허정희·송성환. 2018.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D4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김창길·송미령·한석호·장도환.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P1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박준기·이병훈·조재성·윤종렬·남양호·김윤종·김태곤·문한필·박석두·채광석·국승용·이계임·정학균·성명환·이용선·정민국·민경택·정명생·성주인·김용렬·마상진·허장·김영훈·김정섭. 20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C2012-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안. 2017.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의 추진방향과 과제.”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1차 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 김종안·최문식·길청순·황윤재. 2018.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2018』: 203-2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정학균·김태훈. 2011.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R63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홍상·김경필·김연중·박대식·박준기·성명환·이계임·국승용·김미복·김용렬·김정섭·김태훈·마상진·민경택·손학기·심재현·이대섭·이명기·이상민·정은미·지인배·채광석·최병욱·황윤재·김덕호·김현중·박성진·박지연·서대석·엄진영·유찬희·이상현·임영아·조성주·최용호·허정희·박혜진·우성휘. 2017.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 C2017-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성주인·마상진·김광선·조미형·심재현·박대식·송미령·김영단·최용욱·한태녕·김민석. 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수립방향 연구』. C2014-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심재현·정도채·유은영. 201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C2015-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권인혜. 2013. 『새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 및 지역행복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 C2013-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농업농촌경제동향.
- 이계임·김상호·김부영. 2017.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R8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한재환·손은영·제철웅·백태웅·위태석·봉영준·안수길. 2008.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C2008-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서희·김정선. 2013. “기후변화와 통합적 푸드시스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6호.
- 이정희. 2007. “한국 푸드시스템의 현황과 발전과제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중심.” 『한국농식품유통학회』 24(4).
- 최지현. 2017.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추진 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림어업조사』.
- 통계청. 각연도.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보도자료. 2017. “2016년 소득분배지표.” 2017년 5월 25일 자.
- 통계청 보도자료. 2017.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 허남혁. 2013. “선진국의 도시 먹거리 계획: 캐나다 토론토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와도시』 계간 World & Cities Vol. 3: 26-35.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 허남혁. 2017. “해외 국가 푸드플랜 사례와 시사점.”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추진 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 황영모·신동훈·배균기. 2015. “푸드플랜 시대,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방향과 전략.” 『Issue Briefing』 Vol. 144. 전북연구원.
- 황수철. 2000. “일본 푸드시스템의 전개와 과제: 식품산업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0: 233-260.
- 황윤재·김경필·최재현. 2018. 『국가 푸드플랜 수립방안 연구』. R5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mily Broad Leib, Laurie J. Beyranevand, Emma Clippinger, Laurie Ristino, Aurora Moses. 2017. “BLUEPRINT for a NATIONAL FOOD STRATEGY.”

<국내외 웹페이지>

고용정보원 웹페이지. <<https://www.keis.or.kr>>.

네이버 지식백과 웹페이지. <<https://terms.naver.com>>.
미국 USDA 해외농업지원국 웹페이지. <<https://gain.fas.usda.gov>>
이투데이 웹페이지. <<http://www.etoday.co.kr>>.
이코노미스트그룹 인텔리전스 유닛 웹페이지. <<https://foodsecurityindex.eiu.com>>.
조선pub 웹페이지. <<http://pub.chosun.com>>.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웹페이지. <<https://knhanes.cdc.go.kr>>.
통계청 통계포털 웹페이지. <<http://kosis.kr>>.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웹페이지. <<http://www.index.go.kr>>
프랑스 법률정보 웹페이지. <<https://www.legifrance.gouv.f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웹페이지. <<http://www.kati.n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웹페이지. <<http://www.krei.re.kr:1818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웹페이지. <<http://www.klca.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웹페이지. <<https://ecos.bok.or.kr>>.